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9



OECD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9

이 번역본은 OECD와의 합의 하에 출간되었으나 OECD의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문과의 일관성은 온전히 번역본 저작자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불일치 시에는 원본만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EC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발간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표명된 의견 및 논쟁은 OECD 회원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국경과 경계의 결정, 영토와 도시 그리고 지역의 명칭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영어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9, https://doi.org/10.1787/soc_aag-2019-en.

본 보고서 영문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 와의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하였습니다. OECD가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Monkey Business – stock.adobe.com; © The Final Miracle – stock.adobe.com; © Wolszczak – stock.adobe.com; © Raimonds Romans raymoonds – shutterstock.com; © Juriah Mosin – shutterstock.com; © Ninja SS – shutterstock.com;

OECD 간행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지표에 대한 개요서로 OECD가 네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화와 업무성격의 변화로 인한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가능 노동자와 그러지 못한 노동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형운태 부본부장, 박유선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사회 정책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황승현

서 문

지역별 사회지표를 정리한 'OECD의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의 현황과 그 추세에 관한 계량적 자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장에서는 본 자료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독자들이 OECD 사회지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2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와 미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지원이나 의료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노동의 성격 변화로 인해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노동자간의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정책 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장에는 가능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일부 국가들의 프로그램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3장에서 7장까지의 각 장에는 일반 항목, 자급자족, 형평성, 보건 및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5개의 지표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초안은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가 2019년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사회정책 전문가 연차회의에서 논의되었다. Ashish Kumar Aggarwal(인도), Shaikh Shamsuddin Ahmed (방글라데시), Florence Bonnet(ILO), Enkhtsetseg Byambaa(몽골), Sri WeningHandayani(ADB), Jai-JoonHur(대한민국), Dohyung Kim(대한민국), Norma BintiMansor(말레이시아), Hina Shaikh (파키스탄), Junko Takezawa(일본), Turro Wongkaren(인도네시아) 및 Suk-myung Yun(대한민국)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Willem Adema, Pauline Fron과 Eunkyung Shin이 작성하였다. Peter Whiteford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는 2장의 일부를 작성하였으며 비공식 고용에 관한 자료는 Florence Bonnet (ILO),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자료는 Sri Wening Handayani(ADB)가 제공하였다. MaximeLadaique (출산율) 와 Philippe Herve(국제이주)는 3장의 작성에 기여하였다. Andrew Reilly는 5장의 연금 분야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Luca Lorenzoni와 Frédéric Daniel는 7장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였다. 이전의 초안에 의견을 제공해 준 Daniel Alonso Soto, Mark Pearson, Monika Queisser, Stefano Scarpetta, Stefan Thewissen과 Liv Gudmundson, Lucy Hulett, Anna Irvin Sigal 및 Fatima Perez를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수많은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모든 그림과 자료를 포함한 본 간행물의 온라인판은 http://oe.cd/sag-as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차

두문자어 및 관용기호 8

요 약 11

1 장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서론 13

OECD 사회지표의 체계 14

지표의 선택과 내용 16

본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 19

주석 19

참고문헌 19

2 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적용대상(coverage) 범위의 확대와 미래 21

서론 2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도성장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지출 2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연된 비공식 고용 31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보장의 미래 36

개혁방안 사례 45

결론 51

주석 52

참고문헌 53

3 장 일반적 배경 지표 ····· 63
1인당 GDP ····· 64
출산율 ····· 66
결혼 및 이혼 ····· 68
국제이주 ····· 70
노인부양률 ····· 72

4 장 자급자족 ····· 75
경제활동 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 ····· 76
고용 ····· 78
유아교육 및 보육 ····· 80
교육 성과(Educational Attainment) 및 학생 성적 ····· 82
교육비 지출 ····· 84

5 장 형평성 ····· 87
빈곤 ····· 88
소득불평등 ····· 90
연금: 가입률 및 소득 대체율 ····· 92
공공복지지출 ····· 94
연대의식 ····· 96

6 장 보건 ····· 99
기대수명 ····· 100
영유아 사망률 ····· 102
아동 영양실조(영양결핍 및 비만 포함) ····· 104
보건지출 ····· 106
의료기관의 활동 ····· 108

7 장 사회적 응집성 지표 ····· 111
생활 만족도 ····· 112
공공기관 신뢰도 ····· 114
신뢰 및 안전 ····· 116
포용력 ····· 118
투표 ····· 120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ilibrary
http://www.oecd.org/oecddirect/

StatLinks
이 보고서에는 인쇄 페이지를 통해 엑셀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s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atLinks를 찾아보세요.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PDF버전을 보는 경우 링크를 클릭만 하면 관련 엑셀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문자어 및 관용기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ISO 코드

Armenia	ARM
Azerbaijan	AZE
Bangladesh	BGD
Bhutan	BTN
Brunei Darussalam	BRN
Cambodia	KHM
China	CHN
Fiji	FJI
Hong Kong, China	HKG
India	IND
Indonesia	IDN
Kazakhstan	KAZ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hereafter Korea DPR)	PRK
Kyrgyz Republic	KGZ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hereafter Lao PDR)	LAO
Macau, China	MAC
Malaysia	MYS
Maldives	MDV
Mongolia	MNG
Myanmar	NMR
Nepal	NPL
Pakistan	PAK
Papua New Guinea	PNG
Philippines	PHL
Samoa	WSM
Singapore	SGP
Sri Lanka	LKA
Tajikistan	TJK
Thailand	THA
Timor-Leste	TLS
Tonga	TON
Viet Nam	VNM

아시아 태평양 지역 OECD 회원국들의 ISO 코드

Australia	AUS
Japan	JPN
Korea	KOR
New Zealand	NZL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는 OECD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자료에 제시된 모든 국가를 지칭한다.

관용기호

.. 또는 n.a.: 입수할 수 없음.

범례의 (↘)표시는 국가간의 순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인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범례의 (↗)표시는 국가간의 순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인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요 약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6개 국가들의 일반적 사회경제적 항목, 자급자족, 형평성, 보건 및 사회적 응집성에 관한 25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범위 확대 및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명하는 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경우도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2013년에서 2017년에 걸쳐 평균 4.4%의 실질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가 높다. 지난 10년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일일 소득 1.9 미국달러 미만 인구의 비율이 6.0%로 거의 반감하여 절대 빈곤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높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평균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들의 0.32에 비해 높은 0.36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복지지출과 세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15년 공공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인 GDP의 21%에 비해 GDP의 7%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공공복지지출의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인 공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출에 편중되어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가 줄어든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 회원국의 공공복지지출의 차이는 세입의 격차를 반영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의 세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에서 33%에 달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의 2016년도 비율은 12%에서 18%에 불과하다.

아시아 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공식 고용이 만연하고 있다.

비공식 고용 비율은 국가들간에 차이가 있으나 거의 70%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직업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의 형태로 비공식 고용(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되어 낮은 보수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15-24세) 및 노령 노동자(65세 이상)가 비공식 고용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대학교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30%만이 비공식 고용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비공식적 경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생산성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화와 노동 및 노동시장의 성격 변화로 사회보장 정책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에게까지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제는 노동과 노동시장의 성격변화에 따라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에서는 전체 직종의 거의 절반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직종은 완전히 소멸될 수 있으며 많은 직종들이 변형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성이 낮은 직종의 대다수는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ICT 투자비를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화로 숙련된 고급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장차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를 늘려 신기술을 채용한 직종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보장 혜택의 관리와 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변환은 또한 보조금의 수령, 세금의 납부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관리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은 최소한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비공식적 요소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및 관리에 자연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과 같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인구가 매우 적은 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사회정책적 과제다.

인구의 고령화는 특히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약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소득과 임금의 빠른 증가로 은퇴 계층과 신흥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을 효과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와 세입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가난한 가계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의 투자 확대, 지원대상 선정방법 개선 등이 있으며 가능하면 이를 기존의 교육, 보건 및 고용정책들과 연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과 세입을 고려하면 세원 확충, 누진과세 강화 및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빈곤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 조세/복지 제도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1 장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서론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시리즈는 OECD 체계를 활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회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OECD, 2014[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시리즈와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1]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특정 국가가 자신의 과거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어떠한 진보를 이룩하였는가?
-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사회적 진보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가별, 시대별 사회적 성과를 표시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발전에는 보건, 교육 및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된 기반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적 유효성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회는 종종 정부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의 유효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표는 유효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국가들의 성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원을 비교하고 해당 자원들을 사회적 성과와 대조한다. 이러한 비교는 정책 유효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작업이 더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간행물에서는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OECD 보고서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OECD, 2017[2])를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와 미래를 둘러싼 문제를 논의한다. 사회보장 범위를 비공식 고용 노동자에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는 자동화에 따른 노동의 성격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업의 위험 외에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혜택의 수령, 세금의 납부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관리상 장애를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투자의 규모와 세입 확대를 통해 빈곤을 효과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OECD 사회지표의 체계

본 자료에 적용된 구조는 전면적인 사회지표 체계는 아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회지표의 목록 이상의 것이다. 이 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OECD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이 체계는 특히 환경 지표와 관련된 OECD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표들은 다른 정책 분야에도 사용된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 PSR)의 변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United Nations, 1996[3]). 이 체계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대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연자원과 환경조건의 **상태**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진하게 된다. PSR 체계는 이러한 순차적 연결을 강조함으로써 종종 간과되기 쉬운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 사이의 소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지표에 대한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표의 성격과 관련 정책분야의 두 차원에 따라 지표를 분류한다. 첫째 차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로 세분된다.

- **사회적 배경**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변수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율은 정책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 과세 또는 연금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정보에 속한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사회적 배경지표의 추세는 "좋음" 또는 "나쁨"으로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
- **사회적 상태** 지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표현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인구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쉽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면, 모든 나라는 높은 빈곤율 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선호한다.
- **사회적 대응** 지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들이다. 사회적 대응에는 정부 정책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된다. 또한 비정부단체, 가계 및 광의의 시민사회도 사회적 대응에 관여한다. 사회적 대응 지표와 사회적 상태 지표를 비교해 보면 정책 유효성에 대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사회적 배경, 사회적 상태 및 사회적 대응 지표의 중대한 한계는 이러한 지표들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또는 인도같이 연방화 및/또는 지방분권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표들이 배경, 성과 및 사회적 대응이 각기 다른 연방 내 지역들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에 제시된 지표들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 태평양*에서 사용된 체계는 "사회적 상태" 및 "사회적 대응" 지표를 관련된 광의의 정책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자급자족**은 사회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목표에 해당한다. 자급자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2. **형평성**은 사회정책의 또 하나의 오래된 목표다. 공평한 성과는 주로 국민과 가계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3. **보건 상태**는 의료보호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표에 해당하지만 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을 사회정책의 중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 결정인자에 폭넓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사회적 응집성**은 종종 국가 사회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인식된다. 의미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응집성의 결핍을 암시하는 일련의 증상은 있다. 사회적 응집성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가 더 긍정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표의 선택과 내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지표 수집과 공표방식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보고서에 사용할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국가들간의 지표 비교가능성의 최소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각 해당 지역에 대한 최선의 비교 가능한 정보를 수록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 모두가 "절대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가능성의 한계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 특정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의 최소 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할까? 본 보고서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입수 가능한 지표에 한하여 수록하였다.
- 국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세분화된 지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사회지표는 종종 나이와 같은 사회적 하위 범주별 결과로 세분할 수 있다.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된 분류는 고려 대상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개별 지표는 사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별 지표는 하나 이상의 범주에 모두 타당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응집성, 자급자족 및 보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지표들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배경 지표

사회적 상태 지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해 보면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진하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제각기 다르다. 소득과 보건간에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적 대응과 관계 없이 부유한 나라의 보건 상태는 가난한 나라의 보건 상태에 비해 더 양호할 것이다. 의료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타당한 것 같지만)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의료보호 서비스 비용(국민소득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을 지출할 것이다. 이는 보건 상태 지표와 보건 지출 지표가 오해를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때는 자료의 전반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율, 결혼 및 이혼, 이주, 노인부양률 같은 사회적 배경 지표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다른 지표들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1인당 GDP는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물질적 복지를 표시하는 본질적인 사회적 성과에 해당한다.

표 1.1. **일반적인 배경 지표 목록**

1인당 GDP
출산율
결혼 및 이혼
국제이주
노인부양률

자급자족 지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유급 노동 및 고용은 수입, 정체성 및 사회적 교류를 제공한다. 따라서 노동력 참여도와 유급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 우선적인 과제다. 좋은 교육을 받을수록 유급고용을 포함한 현재 및 미래의 자급자족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기 아동 교육은 미래 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부모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교육 정도와 학생의 성적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비 지출액은 자급자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주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는 이러한 자급자족 지표들이 고용, 연금 및 사회복지지출과 같은 형평성 지표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표 1.2. **자급자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노동력 참여	교육비 지출
고용	
조기 아동교육 및 보육	
교육 정도와 학생의 성적	

형평성

형평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형평성은 성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기회의 공정한 또는 정당한 분배가 무엇을 수반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형평성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들은 주로 재무적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3. **형평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빈곤	공공복지지출
소득불평등	연대의식
	연금: 가입률 및 대체율

빈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최빈국이 많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빈곤의 절대 척도를 사용한다. 절대 빈곤 척도 이외에 분배의

상대적 불평등 지표도 고려한다. 연금 가입률 및 노령 대체율(old-age replacement rate)도 사회가 노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우발적 사건에 대비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공공복지지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대의식 지표는 국민들이 기부 및/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보건

사회적 환경과 보건 상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공보건정책에 따른 교육적 이득, 의료보호에 대한 접근 개선과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대수명으로 측정한 보건 상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낮아진 유아 사망률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한다. 경제발전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높은 식품과 균형식사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아동 영양실조는 한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건지출은 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보호 시스템 정책 대응의 일반적인 중요한요소다. 의료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병상의 수, 퇴원율 및 입원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건 문제는 실업, 빈곤 및 취약한 주택 등과 같이 보건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상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표 1.4. **보건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기대수명	보건지출
유아 및 아동 사망률	의료기관의 활동
아동 영양실조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응집성의 향상은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사회정책 목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표를 식별하기가 특히 어렵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 태평양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국민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타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사회적 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1.5. **사회적 응집성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생활 만족도	
공공기관 신뢰도	
신뢰 및 안전	
포용력	
투표	

생활 만족도는 사회 전반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는 경제적 및 사회적 교류의 촉진,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집단행위의 촉진 정도를 표시한다. 소수자 집단(이주민, 소수민족, 남녀 동성애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은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 가능한 척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투표율은 국가 정치시스템에 대한 높은 참여도, 유효성의 향상, 정통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하는 척도에 해당한다.

본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

다음 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와 미래에 대하여 논의한다. 3장에서 7장은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사회지표 영역을 다룬다. 각 지표는 한 페이지의 설명문과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구성된다. 설명문과 그림은 가장 최근의 표제 지표 자료와 최고와 최악의 순으로 순위를 매긴 국가별 실적을 제시한다.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표의 변동과 가까운 장래의 기간에 예상되는 지표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지표와 시간 경과에 따른 그 변동내용을 제시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지표의 세분화 방안, 다른 사회적 성과 또는 정책과의 관계를 설명문과 그림에 반영한다. 각 지표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박스는 사용된 자료에 대한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할만한 추가적인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명시하고있다.

주석

1. 관련된 OECD 간행물 How's life? 2017 – Measuring Well-being(OECD, 2017[4])에서는 현재의 복지 성과와 미래의 복지를 위한 자원을 모두 포함하고 2005년 이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50개 지표로부터 추출한 최신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와는 달리 보다 폭넓은 성과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 대응 지표는 배제하고 있다.

참고문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2262-en*. [2]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7-en. [4]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20553-en*. [1]

United Nations (1996),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F, No. 67, Department for Economicand Social Information and Policy Analysis, Studies in Methods, *https://unstats.un.org/unsd publication/SeriesF/SeriesF_67E.pdf* (accessed on 29 November 2018). [3]

2 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적용대상(coverage) 범위의 확대와 미래

서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과거 10년간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광범위한 소득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GDP의 7%로 취약하며 공공복지지출수준은 낮다. 더욱이 대부분의 복지지출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속하는 공식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직 및 현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고용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의 70%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직업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업자) 및/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형태로 비공식 고용되어 낮은 보수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자동화와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따른 변화는 OECD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자동화의 발달은 또한 혜택의 수령, 세금의 납부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관리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은 최소한 혜택의 배분에 있어서 비공식적 요소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 시스템에의 투자 확대, 지원대상 선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몇 가지 개혁방안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과 세입을 고려하면 세원 확충과 누진과세 강화 및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기여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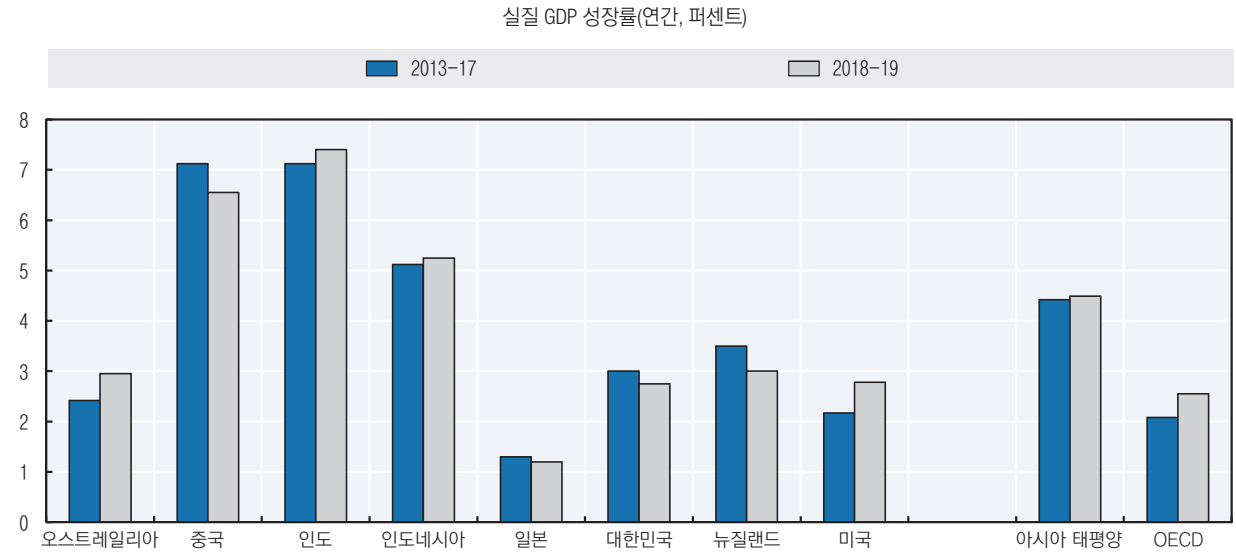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도성장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지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OECD 회원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평균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OECD, 2018[1]). 동일한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은 뉴질랜드(3.5%)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대한민국(3%)과 오스트레일리아(2.5%)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일본은 과거 5년 동안 1%를 약간 상회하는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그림 2.1).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7.1%), 인도(7.1%) 및 인도네시아(5.1%)와 같은 경제 발전소(economic powerhouse)는 2013년 이래 여전히 높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타지키스탄 및 베트남 같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 6-7%의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였다(ADB, 2018[2]).

그림 2.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DB (201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www.adb.org/publications/asian-development-outlook-2018-how-technology-affects-jobs;* OECD (2018),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8, Issue 1, *https://dx.doi.org/10.1787/eco_outlook-v2018-1-en*; and, OECD (2018),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September, *www.oecd.org/economy/outlook/economic-outlook/*.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58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2018년 및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 중국의 성장률은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마찬가지로 둔화될 전망이다(ADB, 2018[2]). 인도는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평균 5.2%의 성장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8[3]). 그러나 무역분쟁의 격화를 포함하여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여 많은 국가들의 대외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OECD, 2018[1]). 또한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난 10년간의 임금 상승으로 이전에 누렸던 "해외 위탁"의 혜택이 잠식되었고, 2012년에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공장을 다시 이전한 Philips Electronics의 사례와 같이 공장이 원산지로 다시 이전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World Bank Group, 2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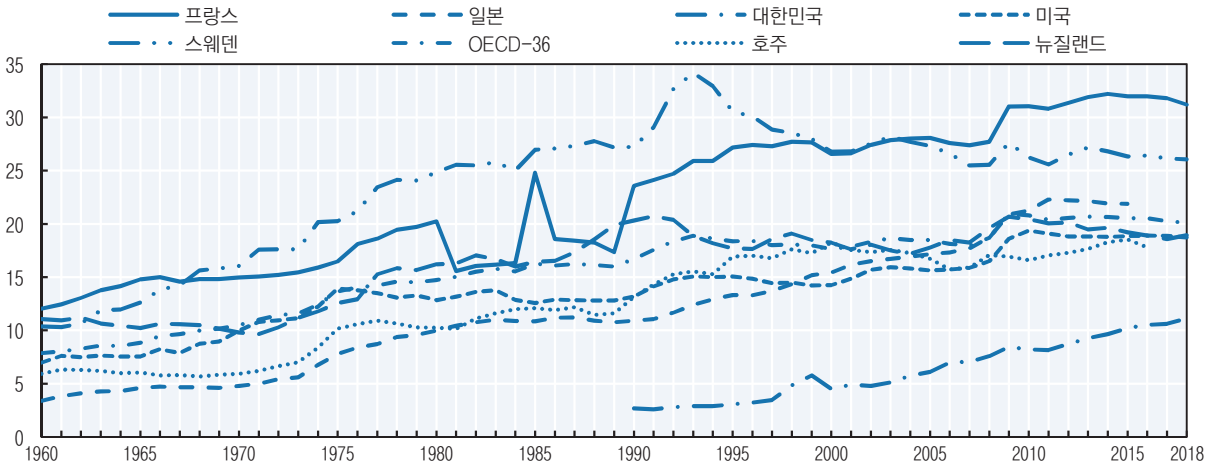
소득불평등과 미래 고용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까지의 고도성장은 극빈층의 감소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일 소득 1.9 미국달러 미만의 극빈층의 비율은 *지표 5.1 빈곤*(본 장 전체에는 본 보고서의 3, 4, 5, 6 및 7장에 포함된 지표에 대한 색인이 수록되어 있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로 거의 반감하였다. 지난 10년간의 극빈층 감소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동티모르 및 베트남에서 두드러졌다.

공공복지지출과 세입은 상대적으로 낮다.

OECD 회원국의 복지상태는 수년간에 걸쳐 개선되었다. 1960년, 일본과 미국의 공공 복지지출은 GDP의 5-10%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웨덴 및 뉴질랜드의 경우는 GDP의 10-15%에 해당하였다 (그림 2.2). 수년 동안 공공복지지출은 1970년대초, 1980년대, 1990년대초의 경제위기 및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7/8년의 불황을 거치면서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림 2.2. **OECD 회원국의 복지상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선되었다.**

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공공복지지출 추세, 1960-2018



출처: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03

Box 2.1. **사회복지지출의 정의**

OECD는 사회복지지출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복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기간 동안 가계와 개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혜택 및 재정적 기여로서, 이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인 특성(social nature)임에도 불구하고 가계간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종종 동거하는)간의 부양이 사회구조의 중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Adema, Fron and Ladaique, 2011[5]).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려면 대체로 두 가지의 주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개인간에 자원을 재분배하여야 하고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OECD, 2019[6]). 개인간의 자원 재분배는 종종 강제적인 참여 또는 사회적 혜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분배의 정도는 또한 수혜한도,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분담률 인상 등과 같은 프로그램 특성에 의해 결정

Box 2.1. **사회복지지출의 정의(계속)**

될 수 있으며, 중국, 일본 또는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무료 의료지원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소득 보조금과 같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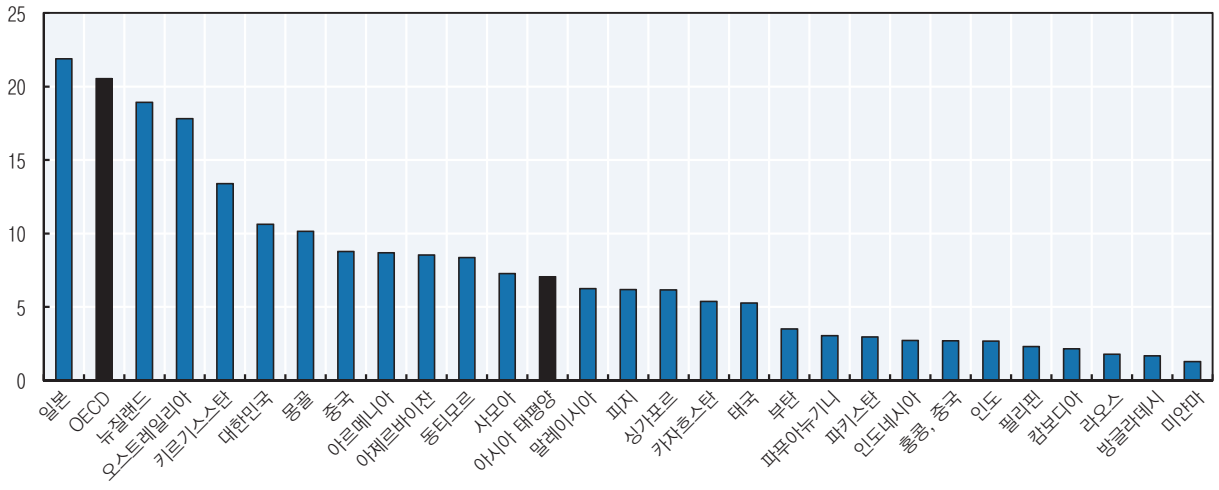
사회적 지원에는 다양한 범주들이 있지만(OECD, 2019[6]; ADB, 2018[2]; Eurostat, 2016[7]; ILO, 2005[8]), 사회적 목적을 위한 혜택에는 노인 보조금과 노령 및/또는 유족연금, 장애인 수당을 포함한 장애관련 보조금, 산업재해로 인한 수당, 종업원 질병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 휴가 중의 소득 보조금, 주택수당, 실업수당 등과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 의약품, 질병 예방 등과 같은 보건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실업수당, 사회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증가와 GDP 감소(GDP에 대한 지출 비율 계산 시의 분모)를 유발하는 경제위기 이외에 OECD 회원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의 증가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과 연금 지출의 증가로 사회적 지출이 GDP의 21.9%까지 증가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고령화는 비교적 덜 뚜렷한 편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복지제도(income-testing in social protection system)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 2017년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을 기준으로 GDP의 10%를 약간 상회하여 서구 OECD 회원국들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은 서구의 회원국들에 비해 적절한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시도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지표 3.5 노인부양률 참조).

2015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은 2016/8년 OECD 회원국 평균인 20%에 비해 낮은 7%에 머물고 있다(그림 2.3).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뉴질랜드의 공공복지지출은 최소한 GDP의 20% 내외, 대한민국과 몽골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및 필리핀의 공공복지지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그림 2.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복지지출은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다.**

2017년 또는 최근 연도의 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공공복지지출



주석: *공공복지지출 지표*에 대한 각주와 참고문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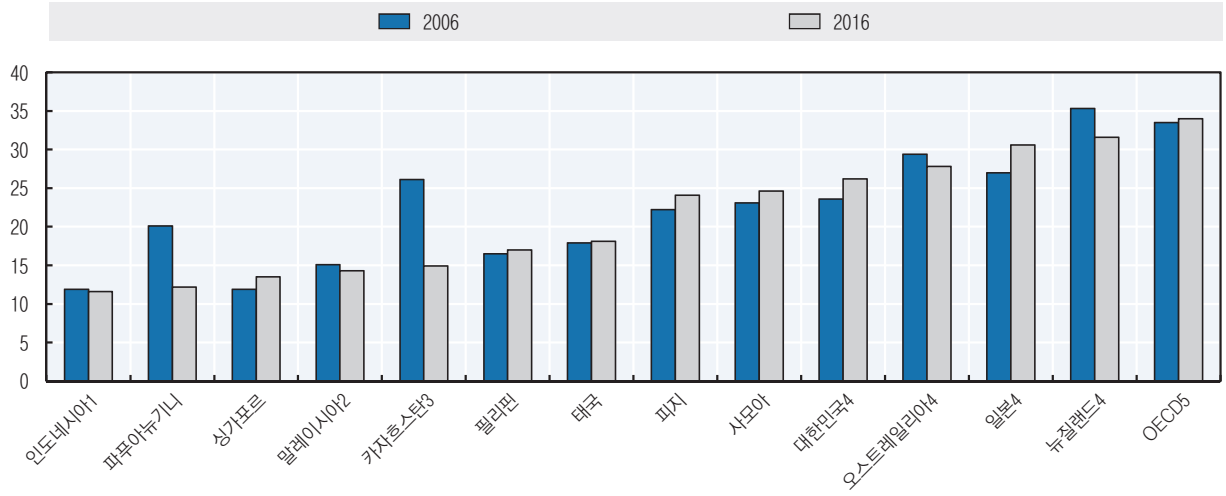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22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산업재해, 장애 및 노인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질병, 출산 및 실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고용주의 융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약 3분의 1이 가족수당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ILO, 2017[9]). 그러나 실무적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연령) 인구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아래 참조)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복지지출은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미한 지원 또는 아무런 지원 없이 빈곤, 질병, 장애 및 실업 같이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발적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OECD 회원국들간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차이는 세입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그림 2.4 및 OECD, 2018[10]; OECD, 2018[11]). 2016년의 OECD 회원국의 GDP에 대한 세입의 평균 비율은 34%였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GDP에 대한 세입 비율은 상당히 높았으며 프랑스와 덴마크가 거의 46%에 달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OECD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의 GDP에 대한 세입 비율은 2010년 이후 3 내지 4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아직 OECD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다(OECD, 2018[11]).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의 GDP에 대한 세입 비율은 2016년 기준 11.6%에서 18.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카자흐스탄의 최근 세입감소는 유류세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2.4. **아시아 국가들의 세입 규모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2005년 및 2016년의 GDP에 대한 세입 비율



1. 사회보장분담금 자료는 입수할 수 없지만 국영영리법인의 종업원을 위한 의료보험인 "Asuransi Kesehatan"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방정부의 세입(퇴직 및 임대료 평가세)은 입수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3. 2016년도에 대한 추정 자료(사회보장분담금).
4.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및 OECD 평균에 대한 자료는 2018 OECD 세입 통계에서 추출하였다.
5. 2018 OECD 세입 통계에 수록된 36개 회원국의 비가중 평균에 해당한다.
출처: OECD (2018), Revenue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rev_stats-2018-en* and OECD (2018), Revenue Statistics in Asian and Pacific Economie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09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41

GDP 대비 세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증세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ADB(2016[12])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세율을 인상하지 아니하고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GDP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지출 증가만으로도 사회보장의 주요 격차를 좁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예산범위 내에서의 재원 재분배, 증세 및 징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식 신고와 납세를 위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과세 당국이 조세 수입을 늘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ICT의 발전으로 납세 의무이행 비용과 정부의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개선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OECD, 2017[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소득불균형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지표 5.2 소득불평등 참고). 공공복지지출과 세입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조세/복지 시스템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적인 자원 재분배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제한적이다(Adema, Fron and Ladaique, 2014[14]). 세원 규모는 작고 조세제도는 누진성이 결핍되어 있다.

더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복지지출의 대부분을 본인 기여형 사회보험 프로그램(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programmes)으로 충당하고 있으며(ADB, 출간예정[15]) 그 적용 대상도 당연히 공식 노동자, 즉 비교적 부유한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식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규칙적인 적용 대상, 실업보험의 부재 및/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률로 인해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불평등 해소 효과가 있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의 영향이 역진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Adema, Fron and Ladaique, 2014[14]).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을 효과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술진보는 지속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만 육체노동과 기계적인 작업이 도태될 위험이 있다.

경제성장은 아시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기 기여하였다. ADB(2018[2])는 지난 15년간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연간 3천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기반시설, 국제무역, 해외투자, 기업 친화적 환경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모두가 새로운 기술의 채택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기술진보로 인해 저생산성 부문(자급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농업으로부터 생산성과 보수가 높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반적인 이동이 촉진되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제조부문을 확충하여 젊고 숙련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채택하여 제조업 생산을 개선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World Bank Group, 2018[4]).[1]

다른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의 개발과 그에 대한 폭넓은 ICT의 적용을 통해 미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최근 디지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고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40%에서 50%가 인터넷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비율은 80%에 달하여 ICT 적용을 위한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OECD, 2018[3]). 그러나 제조부문에서 낮거나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요하는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ICT 또는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비스 부문의 급속한 고용 증가 추세는 다른 부문의 소득(및 수요)에 의해 크게 증가하지 못할 수 있다(Rodrik, 2015[16]).

생산성이 더 높은 일자리들이 창출됨에 따라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별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비공식 기업은 기술에 투자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부문의 규모는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저임금, 저생산성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는 고도성장을 저해하며 또한 인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입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증대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유발한다(OECD, 2017[1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OECD 회원국에서도 지속적인 디지털화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ADB, 2018[2]; OECD, 2018[18])과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OECD, 2018[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진보는 육체노동과 기계적인 작업을 도태시킬 수도 있지만 일의 내용 중 일부가 자동화되는 경우 일 및 관련된 과제의 성격이 변화하여 노동자가 보다 더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진보에 내재된 역동성은 광범위한 실업, 임금 상승 둔화, 사회보장 범위 축소 및 소득불평등 심화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 확보를 위한 전략

세계화, 디지털화,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국가의 운영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개인, 기업 및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생산성 증대에 주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 설계로 형평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 성장을 위한 기회는 모두에게 유익한 광범위한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Pathways for Prosperity Commission, 2018[20]). 이러한 정책에는 교육, 구체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 교육 및 숙련도 향상 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 촉진, 실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이 포함된다.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OECD, 2018[21]).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생산적이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번영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과 새로운 작업방식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촉진한다.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노동자들과 (소규모, 1인의) 기업들의 비공식 경제로부터 공식 경제로의 원활한 이전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측면과 비금전적 측면 모두에서 복지 및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득이 임금에 반영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포괄성은 새로운 OECD 일자리 전략(Box 2.2)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일자리의 질은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지칭하는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OECD 일자리 질 체계는 소득의 질, 노동시장의 안정성, 작업환경의 질이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4[22]). OECD(2015[23])는 이 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신흥 개발국의 자료 입수의 한계, 노동시장의 특성, 특히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부적절한 혜택 및/또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제한), 높은 비공식 고용과 빈곤한 노동계층 비율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Box 2.2. **새로운 OECD 일자리 전략(2018)**

2018년에 공표된 새로운 OECD 일자리 전략(OECD, 2018[24])은 지속적인 고도성장과일자리의 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포괄성을 가장 중요한 우선적 정책과제로 인식한다. 새로운 OECD 일자리 전략의 주요 권장 정책은 i)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ii) 노동시장 진입 차단을 방지하고 노동자를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iii) 급변하는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는 세 가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화되어 있다.

새로운 OECD 일자리 전략은 이전의 전략과는 달리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기능을 규정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정책목표는 포용적 성장과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필수적이다(OECD, 2018[24]).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는 노동자의 복지에 필수적인 OECD 일자리 질 체계의세 가지 차원인 i) 소득의 질, ii) 노동시장의 안정성, iii) 작업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양(예를 들면, 실업, 노동력 참여, 노동시간)과 일자리의 질의 두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환경을 포착한다(OECD, 2014[22]). OECD(2015[23])는 비정상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노동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대용물로 사용하여 이 체계의 적용대상을 신흥 개발국으로 확대하였다.
- *노동시장의 포괄성*. 이 차원은 노동자들간의 기회와 성과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모두가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포괄성은 사회적 유동성과 승진 같은 불평등의 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계소득의 분배,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간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 등과 같은 정적인 측면 모두와 관련이 있다.
- *적응력과 회복력*. 이 차원은 개인, 단체 및 사회가 경제위기와 메가트렌드로 야기된 충격과 새로운 기회를 흡수하고 이에 적응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관련된 이러한 차원들의 성과는 노동시장정책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제품, 금융 및 주택시장의 생산성 향상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지역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타 정책과 재산권 보호 및 법치에 따라 좌우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복지 및 사회발전 등의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체계의 핵심 요소인 일자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정부적인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하다(OECD, 2018[21]).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연된 비공식 고용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공식 고용(Box 2.3)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포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 수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OECD, 2018[25]). 비공식성은 많은 비공식 기업들이 생산성 분포의 하단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 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간의 이동도 제한되며 비공식성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포괄성 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비공식 기업과 노동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이 존재함으로써 세원이 축소되며 국가의 조세/복지 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

Box 2.3. 비공식 고용,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경제

비공식 경제라는 용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식 계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보호되는 노동자 또는 경제단위의 모든 경제활동을 망라한다. **비공식 고용**은 일자리를 관찰단위로 하여 고용관계의 특성과 고용 상태를 토대로 그 정의를 내린다. 종업원의 고용관계에 노동법, 과세, 사회보장 또는 특정 고용관련 혜택(해고의 사전예고, 유급 연가 또는 질병휴가 등)의 적용이 배제된 경우 비공식 고용으로 간주된다. 고용관계의 비공식성은 일자리와 소득의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소득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초과부담이 면제되도록 특정 한도액 이하로 신고하는 것), 단기간의 임시직, 시간제 근무 등과 관련된다. 그러나 비공식성은 또한 기업이 공식적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되지 아니하고 하청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많은 상근 노동자와 비공식 자영 노동자와도 관련된다.

모든 가족 종사자(무급)도 비공식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사용할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의 활동도 비공식 일자리로 간주한다.

자신의 기업(생산 단위)이 비공식적인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활동도 비공식 일자리로 간주한다. **비공식 부문 기업**이란 공장 또는 상법, 조세 또는 사회보장법, 전문가단체의 내규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 제정한 유사한 규칙, 법률 또는 규정 등의 특정 국가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에서 설정한 기업의 형태로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기업을 말한다. **비공식 부문**은 국가 법률에 따른 완전한 회계장부를 구비 및/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미등록 및 비법인 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생산한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다.

비공식 고용에 관한 방법론적 개념과 측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Chen, 2012[26]; Hussmanns, 2004[27]; OECD, 2015[23]; ILO, 2018[28])을 참고하라.

비공식성은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Jütting and De Laiglesia, 2009[29]). 비공식 고용 노동자들은 공식 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소득이 더 낮거나 부양가족 수가 더 많아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ILO, 2016[30]). 비공식성과 빈곤은 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단기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공식화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격상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에 의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비율은 신흥 개발국에서 높으며(OECD, 2018[25]), 전 세계 전체 고용의 약 6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ILO, 2018[28]). 아프리카의 비공식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의 85%가 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비공식 고용이 만연되어 있다. 총 고용에 대한 비공식 고용 비율은 68.2%로 높지만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59.2%로 다소 낮다(ILO, 2018[28]). 다시 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과 의료지원 혜택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공식 고용 비율은 국가별 및 경제부문별로 각각 다르다. 경제부문부터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조업 부문 비공식 고용비율은 70%, 서비스 부문 비공식 고용비율은 50%를 약간 넘지만 농업부문은 거의 모든 노동자가 비공식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ILO, 2018[28]). (자급) 농업부문의 규모는 국가별로 만연된 비공식 고용 비율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자급 농업 부문을 검토하면 일본과 같이 공업화된 OECD 회원국의 비공식 고용 비율은 20% 미만, 브루나이 다루살람과 대한민국은 3분의 1이하,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은 3분의2 또는 그 이상이며(지표 3.1, 1인당 GDP 참조), 캄보디아, 라오스 및 네팔에서는 전체 고용의 90%에 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그림 2.5).

그림 2.5.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의 3분의2 이상이 비공식 고용상태에 있다.**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전체 고용에 대한 비공식 고용 비율



1. 그림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한 평균.
주석: 인도네시아와 피지는 2016년, 아르메니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및 베트남은 2015년, 브루나이 다루살람과 대한민국은 2014년, 방글라데시, 중국,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및 동티모르는 2013년, 캄보디아, 인도 및 사모아는 2012년, 일본과 라오스는 2010년, 타지키스탄은 2009년, 네팔은 2008년 자료에 해당함. ILO(2018)의 Annex A2 참조.
출처: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 third edition, and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urvey for Fiji.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60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에 의한 비공식 고용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67.3%)과 남성(68.0%)은 동등하게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간주되는 전체 공급사슬의 하부에 있는 가사 노동자 또는 재택 노동자로서 비공식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성은 또한 근무시간이 짧은 직종에 고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평균 10%로 남성 비공식 노동자의 7.5%, 여성 비공식 노동자의 14.8%가 주당 20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농촌 지역 일자리의 85%가 비공식 고용에 해당하는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비공식 고용 비율은 47.4%로 전체 고용의 절반에 못 미친다. 농촌 노동자의 높은 비공식 고용 비율 하나만으로는 도농간 비공식 고용 비율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요소들로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 농촌 인구의 개인적 특성 및 고용의 특성(낮은 교육수준 및 불충분한 전문직업), 전통 및 법률, 규정 및 사회규범에 대한 농촌 지역민의 인식을 들 수 있다(Jonasson, 2012[31]; Weng, 2015[32]).

비공식 노동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고용조건은 어떠한가?

각국의 비공식 노동자들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노동시간 및 고용상태는 제각기 다르다. 비공식 노동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미흡한 사회보장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연령과 비공식 고용간에는 U 곡선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다. 청년(15-24세)과 노령(65세 이상) 노동자가 비공식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두 연령대에서는 약 85%의 노동자들이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다. 이에 비해 35-54세의 노동자들의 비공식 고용 비율은 60%에 달한다(ILO, 2018[28]).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가 대부분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흡수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공식 고용 노동자들의 약 절반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잘해야 초등교육을 이수한 상태며,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및 동티모르에서는 비공식 노동자 3명 중 2명이 이에 해당되는 실정이다(ILO, 20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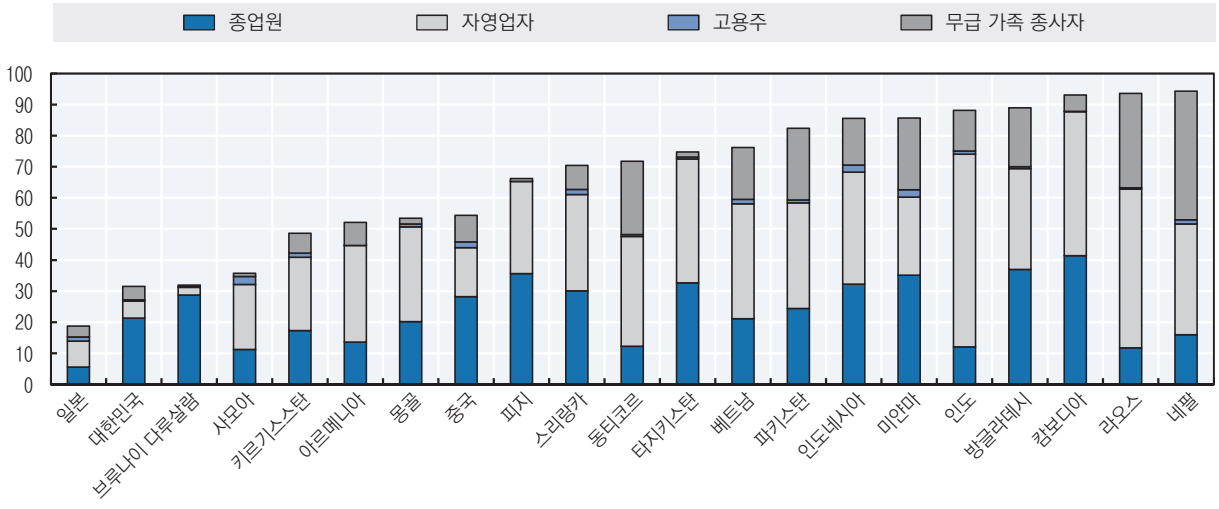
초등교육을 마친 노동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노동자들간에 비공식 분야에 속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이 비공식 분야에 속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은 94.9%에서 각각 58.9%와 30.7%로 급격히 감소한다. 비공식 고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및 몽골)에서 가장 크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분야에 속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노동자의 10% 가량이 비공식 분야에 속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ILO, 2018[28]).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공식 노동자의 낮은 교육수준은 비공식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주된 원인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시장과 주요 공공재와 서비스 접근 제한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65에서 90%)은 종업원[2]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지만 비공식 노동자들 중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가장 크게(20에서 40%)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그림 2.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고용 노동자의 85% 이상이 비공식 부문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 비공식 고용 노동자의 거의 75%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Bonnet, 2019[33]). 그러나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피지, 인도, 라오스, 동티모르 및 베트남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식 부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그림 2.7). 공식 부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20%가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다(Bonnet, 2019[33]).

그림 2.6. **비공식 노동자의 대부분은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이며 무급 가족 종사원은 최빈국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또는 최근 연도의 고용 상황별 전체 고용에 대한 비공식 고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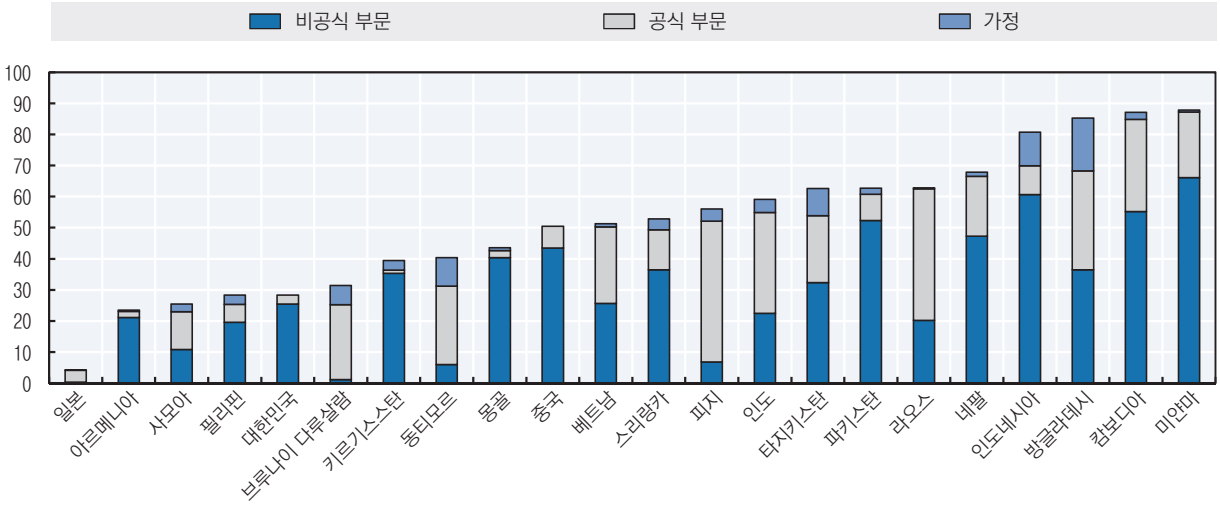


출처: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 third edi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79

그림 2.7. **다수의 종업원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최근 연도의 비공식 임금 고용의 비율과 구성(종업원 %)



출처: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 third edi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698

노동시장에서 나온 이러한 자료들은 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공식 부문의 자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는 종사하는 경제단위의 공식화와 관련되어 있다. 공식화는 예를 들면 등록에 대한 금전적 유인책을 강구하거나 분담금의 납부와 수당의 지급을 디지털 방식의 쉬운 절차에 의해 실행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OECD, 2012). 비공식 부문 기업의 공식화는 또한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고용관계 공식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고용관계의 공식적인 인정과 노동기준의 감시와 집행의 개선은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자와 공식부문 기업에 의한 하청으로 고용관계가 위장된 자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Bonnet, 2019).

비공식 고용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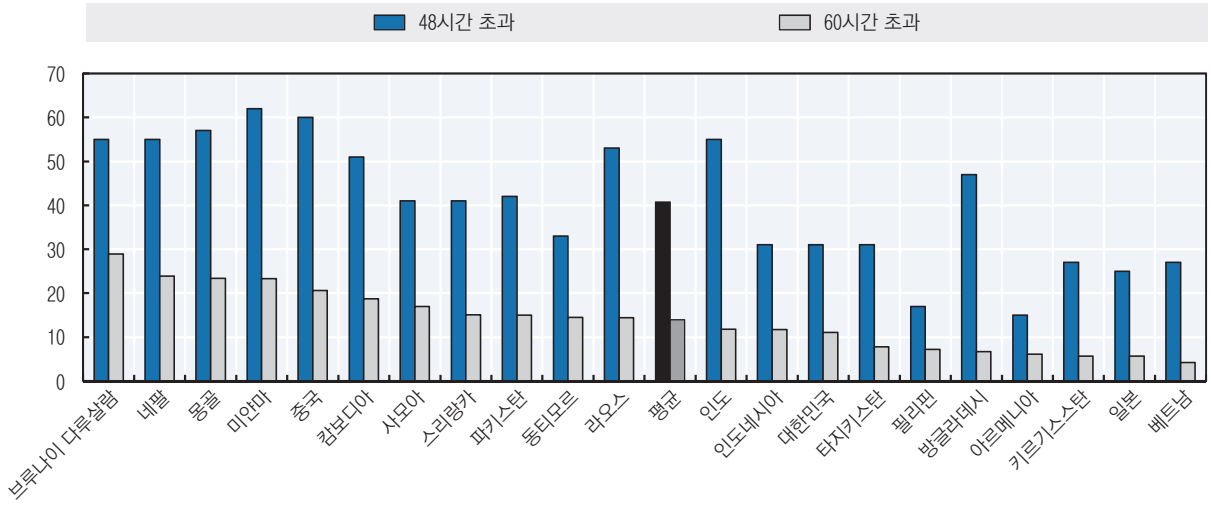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도 노동시간도 노동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물이 될 수 있다(Box 2.3). 긴 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증거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이상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조사 결과 긴 노동시간은 특히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일정과 시간을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assanini and Caroli, 2014[35]; OECD, 2016[36]).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비공식 노동자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몽골 및 네팔의 비공식 노동자의 약 5분의 1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비공식 노동자가 40%를 약간 상회하며 거의 15%의 비공식 노동자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공식 종업원의 35%와 12%가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며 공식 종업원 또한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0시간 일하는 남자의 비율은 15.4%, 여자의 비율은 11.7%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ILO, 2018[28]).

그림 2.8.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경우가 많다.**

2016년 또는 최근 연도의 주당 48시간 또는 60시간 초과 비공식 노동자의 비율



주석: 자료의 해당연도는 그림 2.5 참조.
출처: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 third edi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717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보장의 미래

사회보장(Box 2.1)은 개인과 그 가족들을 예측 가능한 일상적 위험(자녀 양육, 퇴직, 노령) 뿐만 아니라 근로기간 중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질병,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 기타 건강문제, 산업재해, 실직 및 불경기로 인한 실업 증가, 불안정한 직업, 가족해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및 사적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감소 및/또는 (건강관련)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이러한 소득 상실을 일부 보전하고 직장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성격 변화는 고소득 국가, 특히 본인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임시직과 변형된 고용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풀 타임과 종신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재정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의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OECD, 2018[19]).

일자리 성격의 변화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험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미 사회보장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술변화와 일자리 형태의 변화로 기존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 확대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Box 2.4)와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기여형 시스템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유지를 위해 명시적인 기여금 납부가 필요는 없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미래의 일자리 형태 변화로 인해 적절한 세수 확보 기반이 약화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요소는 일자리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복수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면 소득조사의 관리가 훨씬 더 복잡하게 된다는 점이다.

Box 2.4.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보장과 최소 고용조건 보장**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 정부 세입에서 대부분의 정부보조금을 지출하며 수급자격 획득을 위한 명시적인 사회보장 부담금이 없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은 감소한다(Whiteford, 2017[37]). 이러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에서는 자영 및 사업원천 소득은 기타 고용 또는 불로소득과 다르게 취급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급 조건과 자격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지급을 책임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정부 수준에서는 주로 산재사고와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대체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다수의 공공부문 종업원과 일부 민간부문 노동자 또한 퇴직에 대비한 확정급여형 직장연금제도(defined-benefit occupation pension)의 혜택을 받는다(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민간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 Guarantee가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개인계좌로 분담금(현재 9.5%)을 납입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의 분담금을 이에 추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소득지원제도는 본인 기여형 방식이 아니며 전체 인구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다. 주된 수급자격 기준은 주거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수혜자격 범주에 해당하며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규정된 지급기간은 없으며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소득지원금은 무기한 지급된다. 수급권은 법적인 권리로서 수급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사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보호제도 이용 및 의료보호비용의 정부 지원 역시 소득세 외의 추가부담금으로 의료보호 재원을 충당하지만 분담금이 아닌 주거사실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특성으로 인해 공식 고용은 사회보장 보조금의 수혜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고용조건의 일부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정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OECD 고용통계),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으로 인해 상근직의 세후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OECD에서 가장 높다(OECD, 2015[39]).

Box 2.4.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보장과 최소 고용조건 보장(계속)**

임금 지급 규정의 범위와 노동조건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임금[및 노동조건]결정 체계"는 분권화와 개별화되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Wright and Lansbury, 2016[40]).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업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산업별/직업별 법정 최저한도("현대적 고용기준"이라고 하는)를 유지하면서 직장수준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합의내용은 강제력 있는 단체협약에 포함됨)에 관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적 고용기준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휴가조건 등과 같은 기타 노동조건도 규정하며 전반적인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된 노동 관계 법률인 2009년 공정노동법(FWA - Fair Work Act)에 명시되어 있다.

산재사고에 대한 높은 소득대체율 - 완전 대체까지의 - 과는 별도로 대다수의 고용된 종업원들에게는 연간 10일(통산)의 유급 질병휴가와 간병 휴가 및 유급 연차휴가와 국경일 휴가가 주어진다. 유급 휴가 또는 유급 공휴일 휴가가 없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시간당 임금(약 20% 더 높은)을 지급받는 노동자 – 호주에서 "임시직"으로 부르는 – 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규정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종업원을 자영업자 또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규정할 수 있으면 고용 주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고용조건의 많은 부분은 강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 수준에서 두 개의 주요 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1. 공정노동위원회(FWC-Fair Work Commission)는 최저임금과 고용조건의 안전망을 유지할 책임을 지는 독립된 위원회다(Australian Government, 2018[41]). 위원회는 매년 고용주단체, 노동조합 및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FWC는 또한 각 "현대적 고용기준"을 검토하고 제정한다. 현대적 고용기준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노동법에 규정된 최소 고용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제정할 수는 없다(Stewart et al., 2016[42]).

2. 공정노동옴브즈만(FWO-Fair Work Ombudsman) 역시 공정노동법을 집행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조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18[43]). 대부분의 경우 공정노동법의 위반은 민사배상을 수반하며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며 범죄(예를 들면, 뇌물공여)를 구성하는 위반사항도 있다. FWO는 법률 위반,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 종업원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회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복잡한 공급사슬 또는 네트워크를 관장한다. FWO는 또한 지방정부의 보안 서비스 구매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한다. FWO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665건의 침해 고시, 192건의 준수 고시, 40건의 강제적 약정을 발급하였으며, 55건의 처벌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8[43]).

자동화에 따른 과제

지속적인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Frey와 Osborne (2013[44])은 머신러닝(ML-Machine Learning)과 모바일로보틱스(MR-Mobile Robotics)의 발전에 착안하여 컴퓨터화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직종을 분류하고 향후 20년 동안 미국의 전체 직종의 47%가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는 수송, 물류, 사무실의 관리직 노동자 및 생산직 노동자의 일상적인 직무가 포함된다. 그들은 또한 임금이 높고 고학력을 요하는 직종이 자동화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Arntz, Gregory 및 Zierahn(2016[45])은 직종 기준 접근법이 아닌 직무 기준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동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들은 21개 OECD 회원국에서 9%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고소득 직종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밝혀냈다.[3] 32개 OECD 회원국에 대한 보다 최근의 자료에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평균 14%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위험이 높은 반면 다른 32%의 일자리는 그 수행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자동화 가능성"의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Nedelkoska and Quintini, 2018[46]).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완전히 소멸되거나 일부는 변형될 것으로 예상된다(ADB, 2018[2]).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많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신흥개발국의 많은 일자리를 "자동화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저임금과 높은 ICT 투자비를 고려하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 증가의 위험이 있지만 노동시장과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중요한 위험도 존재한다.

미래의 작업 형태에 대한 기술변화의 예상되는 영향은 이전의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와 유사하다 (Card and Dinardo, 2002[47]). 기술변화는 고소득 국가의 임금격차 확대를 유발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고숙련 일자리와 미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여 숙련도가 중간인 일자리가 도태될 우려가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Frey and Osborne, 2013[44])가 예측하고 (Arntz, Gregory and Zierahn, 2016[45])이 발견한 자동화 영향에 있어서의 기술과 교육의 변화도는 미래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일자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OECD, 2018[48]). 전통적으로 여성 일자리로 간주되어 온 일자리(간병 등)를 보다 잘 이해하고, 평가하며, 대우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고숙련 일자리로 재분류하고 경제적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 노동시장

디지털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뚜렷한 유형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이 출현하였다(Pesole et al., 2018[49]). 첫 번째 유형의 디지털 노동시장은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서비스, 혹은 **온라인 노동시장 (Online Labour Markets - OLMs)**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예로서는 Amazon Mechanical Turk(Limer, 2014[50])와 Upwork 그리고 Freelancer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웹사이트 설계, 캠페인

광고, 교정, 편집, 학생 과제물 작성, 트위터팔로잉, 페이스북 조사, 유튜브 동영상 게시 등을 포함한 작업을 세계 어디에서나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해외 콜센터는 디지털 방식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들을 세계 어디에서나 수행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기술을 갖춘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도 고소득 국가의 고소득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세상(flat world)"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용주들은 서비스 품질의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경우보다 더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차를 활용하여(다음 영업일 아침이 아닌 당일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흥 개발국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변화, 특히 온라인 수단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의 접근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Box 2.5).

두 번째 유형의 디지털 고용시장 역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지만 서비스 제공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Pesole et al.(2018[49])은 이를 **모바일 노동시장(Mobile Labour Markets - MLMs)**이라 표현하며, 그 예로 Deliveroo, Uber 및 Lyft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또는 택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구매자와 같은 시, 군 지역에 있어야 한다(Box2.6).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Pesole et al. (2018[49])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1% 또는 2%만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소위 "긱 경제(gig economy)"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상이 주된 소득원 또는 보조 소득원 등 다양한 성격으로 긱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LR School and Future of Work Initiative, 2018[64]).

Box 2.5. **Aadhaar: 인도의 생체인증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회복지 수급**

사회보장의 대상범위 확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포용력과 응집력을 갖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농촌 부문이나 도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큰 국가들의 당면 과제는 사회보장의 대상범위 확대를 제약하는 행정적인 애로, 특히 제한된 보험제도의 참여자 등록 및/또는 종업원과 고용주의 분담금 징수 능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자격 관리, 등록 및 수급절차의 수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접근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ID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도의 계획이다. "Aadhaar"라고 하는 이 계획은 이미 10억명이 넘는 인도 국민들에게 적용되었으며 Aadhaar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지문과 망막 스캔을 제출하고 12자리로 된 고유 ID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대규모의 생체인증 ID 데이터베이스는 복지와 납세분야, 사회보장의 관리, 예를 들면, "취사용 가스 보조금" 및 "공공부조연금" 수급자격이 있은 가계에 대한 수급에 활용된다. Aadhaar는 또한 일상적인 은행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인도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Box 2.5. **Aadhaar: 인도의 생체인증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회복지 수급(계속)**

통해 은행계좌, 모바일 연결 또는 학교 입학에 대한 Aadhaar ID의 강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Aadhaar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다(BBC, 2018[51]).

Aadhaar에 대한 RCT 기반의 종합평가(Muralidharan, Niehous and Sukhtankar, 2016[52]; 2017[53])는 농촌고용보장제도(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 NREGS), 공공분배제도(Public Distributions System - PDS, 식품안전법) 및 공공부조연금(Social Assistance Pensions - SSP) 수혜자에 대한 스마트카드의 영향을 평가한다. Andhra Pradesh 주에서는 Aadhaar로 인해 프로그램 관리직원들이 수혜자의 수를 부풀려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이러한 유형의 유출이 41% 감소하였으며 SSP 또한 Aadhaar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유출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Aadhaar는 ID 사기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PDS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수혜자들이 수급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수령하는 경우의 "수량 사기"를 해결하기는 더 어렵다(Banerjee, 2016). Aadhaar의 활용은 더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접근 및 제외 오류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를 정기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유자격 수혜자가 수령하는 적법한 수당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Aadhaar는 또한 수혜자가 지원 형식(현금 또는 현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PDS배급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Katz와 Krueger(2016[65])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15.8%가 주업으로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는 임시직, 대기직, 계약직 및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상기 "긱 경제" 데이터 링크는 또한 미국에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하여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1% 정도로 현재의 디지털 노동시장은 긱 경제의 구성요소들 중 상대적으로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는 신흥 개발국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가 다른 "긱 경제"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의 산물이지만, 이로써 야기된 미래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의 일부는 본질적으로 성과급 방식의 작업이다. 이는 외주(작업의) 및 해외위탁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성격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에서는 종업원과 자영업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도는 다르지만 허가 요건, 납세의무, 종업원 관리비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적 "재정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Box 2.6. 온라인 택시 서비스 운전자를 위한 고용 상해보험

최근 온라인 택시 서비스시장이 급성장하여 2015/2016년 동안 전 세계인구의 20%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Holmes, 2017[55]; Marciano, 2016[56]). 시장의 총수익은 2016년 기준 약 360억 미국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8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urgstaller, et al., 2017[57]). 온라인 택시 서비스는 동남아 지역 신흥개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보다 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시장 규모는 2015년의 8억 미국달러에서 2025년에는 56억 미국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Purnell, 2016[58]).

인도네시아의 GO-JEK사는 식품 배달, 택배 및 가정청소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Ford and Honan, 2017[59]). 2011년, GO-JEK는 20명의 운전자로 콜센터를 통한 오토바이 택시 예약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운전자가 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운전자들은 종업원이 아닌 사회보장 또는 노동시장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 및/또는 비공식 노동자인 독립된 "동업자"에 해당한다. 등록된 오토바이를 소유한 운전자는 GO-JEK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건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교통안전은 신흥개발국의 심각한 문제로 2013년 인도네시아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38,297명에 달하였다(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8[60]). GO-JEK는 2015년부터 동업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GO-JEK는 또한 운전자와 그 가족의 희망에 따라 건강보험도 제공한다(Prabowo, 2018[61]).

말레이시아에서는 7,000명 또는 인구 100,000명 당 23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Department Statistics of Malaysia, 2015[62])로 인하여 2017년에 "자영업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에 따라 약 83,000명의 일반 택시 운전자와 Grab 및 Uber의 온라인 택시 서비스 운전자들은 고용상해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미가입은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RM10,000(USD2,577)의 벌금 및/또는 2년의 금고에 처한다.

등록된 운전자들은 부보가능소득(insurable income)에 따라 네 가지 보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Social Security Organization of Malaysia, 2018[63]). 이 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보험, 고용 상해 또는 직업병의 무료 치료, 진단서로 확인된 휴가기간에 대한 한시적 장애급여, 부보된 예상 소득금액의 90%까지의 영구적 장애급여, 영구적 장애인의 간병인에 대한 간병보조금(매월 128.87 미국달러), 유족급여, 장례보조금, 신체 또는 직업재활 지원 및 교육보조금 등 여덟 가지의 다양한 현금 또는 현물 혜택을 제공한다. 2018년6월 현재 83,000명의 운전자 중 7,000명이 이 제도에 가입하였다.

기술 변화, 디지털화, 외주 및 하청계약에 따라 창출되는 많은 일자리가 비공식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소득 보장, 고용 조건 및 보다 전통적인 경제부문에서 부당하게 비공식 노동자로 취급될 경우의 배상청구 등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Berg, 2016[66]; ILO, 2018[67]).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들의 위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디지털 플랫폼의 사용료를 공제하여 더 감소한)을 지급하며, 산재보험 또는 질병휴가나 퇴직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준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타의 비공식 노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명백한 문제는 해당 소득세와 사회보험 분담금, 부가가치세가 적절하게 납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많은 일자리들의 소득을 사회보장 소득조사용으로 적절하게 신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이러한 플랫폼으로 창출된 총 고용 규모는 작지만, 미래에 성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보장의 광범위한 분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과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불규칙적인 일자리에 대응하여[4]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건의 규제를 통해 불규칙적인 일자리의 확산을 제한할 것인가, 또는 이러한 두 접근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최선책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적정성과 사회보장 안전망의 수준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OECD 회원국의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노동시간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임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이 고용주로부터 정부와 납세자에게로 전가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영 노동자들로 인하여 감소한 고용주 분담금으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정부와 노동자들이 채워야만 하는가(OECD, 2018[19])?

이 과제는 여러 면에서 비공식성에 관한 기존의 정책적 난제와 유사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비공식적 관계를 인정하여 사회보장 혜택이 부여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존 제도를 통하여 (독립된) 비공식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 보조금으로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은 타당한가(아래에 기술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한 논의 참조)?

사회보험의 확대는 공식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식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쨌든 공공부조제도는 유용하며(예를 들면, Box 2.7 파키스탄의 Benazir 소득지원제도(BISP) 참조) 이를 통하여 빈곤의 격차/인구 수 및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액이 적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적용대상에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World Bank Group, 2018[6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른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고용관계의 공식화와 지급액이 많은 사회보험제도와의 결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지원제도의 지원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개인의 노동 의욕이 감퇴할 수도 있다고 널리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확대하면 지원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급자격 충족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원금을 청구하는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정한 최저임금 보장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최저임금과 노동조건의 유지를 위해서도 적정한 지원금 안전망이 필요하다.

노동의 양식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문제 이외의 다른 과제들도 있다. 노령화는 많은 국가, 특히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와 그보다 더 빠른 출산율 감소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표 3.5 노인부양률 참고*).

가족해체의 증가와 전통적 가족관계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한도 내에서 변화의 속도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소득과 임금의 빠른 증가로 은퇴 계층과 신흥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계층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의 일부 지역 또는 사회적 집단간에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 증가한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아니하여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보호와 노인의료에 대한 영향은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빠르게 성장할 고용 분야는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 직종으로 구성되어 노동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료보호와 사회복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국제 이주 및 단기 이주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다. 분담금과 소득조사 외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의 수급자격 획득을 위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다. 이주자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주의 노동기준 무시로 이주 노동자들이 쉽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국제적인 증거도 있다.

사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안

표 2.1에는 조건부 현금지원과 마이너스 소득세, 일반급부, 기본소득제 시안(OECD, 2017[69]) – 국가 단위로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는 없음(표 2.1의 각주 참조) –,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공공연금과 개인연금 등 소득증빙을 수반하는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2.1. **시행 가능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

제도의 유형	사례	적용대상/수급자격
조건부 현금지원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소득조사, 행위 요건 충족 (취학, 예방접종)
공공부조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중국 특별 보조금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영주권,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환급가능 세액공제	캐나다 GST/HST 세액공제 미국 EITC	시민권, 납세자, 소득조사 가능
마이너스 소득세	범주별 적용 – 오스트레일리아 일반 – UK 일반공제	시민권/영주권, 소득조사
일반급부[1]	뉴질랜드 퇴직연금 아동수당 알래스카 펀드 배당	연령대/시민권 주/거주자
기본소득제[2]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시험적 시행 중.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제도는 없음.	시민권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및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대다수의 OECD 회원국, 중국의 국가연금제도	분담금
의무적 개인연금 및 의무적 병가 급여	퇴직연금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의 영구(단기) 병가 중 급여	분담금, 종업원
임의 개인연금 및 기타 고용주 보조금	직업 및 기업연금, 고용주 부담 육아휴가 보조금 (다수 국가)	분담금, 종업원
개인저축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분담금

1. "일반급부"란 특정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예를 들면 고령자(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연금) 또는 일부 OECD 회원국에서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이 있다.
2. 최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노동시장 기능과 기술 변화의 영향에 대한 기대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 UBI)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개념의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UBI가 현금지원제도와 소득세제도를 어느 정도 통합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강조해야 할 점은 국가별로 다른 환경과 다양한 비공식 노동자 집단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국가제도, 고용구조, 임금결정기관, 고용조건과 구조의 규제 및 과세수준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제도에서는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퇴직 및 장애 사회보장 분담금이 누진적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추가 대가를 지급(make work pay)하여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농업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적합한 제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혁방안 사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작고 단기적인 예산제약으로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각국은 사회보험제도 같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가능한 한 최대로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복지지출을 집중하여야 한다.

자기부담이 없는 공공부조 보조금은 비공식 고용 노동자들의 공식화에 직접 기여하지는 아니하지만 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흥 개발국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상당하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흥 개발국의 공공부조 보조금의 빈곤 해소

효과는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가계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수급 대상 선정과 수입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확대

많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무적 연금제에 분담금을 납입하는 노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인 연금가입률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20% 미만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가입기간 문제(a long-term pension coverage problem), 즉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28%), 말레이시아(39%), 싱가포르(45%), 대한민국(54%), 일본(75%)이 이 비율보다 높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3분의2가 연금을 분담하고 있다(지표 5.3 연금: 가입률 및 대체율 참조). 이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연급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노인층 빈곤이 증가할 위험이 높아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연금가입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금제도의 개발을 통해 가입률을 상당히 높였다.

- 공무원과 국영기업 종업원을 위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Public Service Unit - PSU).
- 가입률(전체 노동자에 대한 가입자의 비율)이 2005년 60%에서 2015년에 88%로 증가한(Queisser, Reilly and Hu, 2016[71]) 도시노동자를 위한 도시노동자 기본 연금제도(Basic Urban Workers Pension - BUWP) (Salditt, Whiteford and Adema, 2008[70]).
- 상기 두 가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 2015년 기준 가입자가 5억5백만명인 기본국민연금제도(Basic National Resident Pension - BNRP) (Queisser, Reilly and Hu, 2016[71]).

전체적으로 상기 세 가지 연금제도의 가입자 수는 2010년의 3억6천만명에서 2015년에는 8억5천8백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Zhu and Walker, 2018[72]).

중국의 노령연금제도 확대는 급속한 경제성장, 확고한 정치적 의지, 접근성을 향상시킨 혁신적인 제도 설계를 포함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다(Zhu and Walker, 2018[72]). 특히 15년의 최소 분담금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이 지난 사람들도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연급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BNRP 연금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자녀들이 분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고정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ILO, 2017[9]).

대한민국 사회정책의 주된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극명하게 양분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문제다(OECD, 2000[73]; OECD, 2017[74]). 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장기 고용계약,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승진,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및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린다. 이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공에 의한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증가하며, 고용과 관련된 복리후생이나 사회보험 혜택이 없거나 제한된다. 수많은 자영업자, 가사 노동자 및 소규모 농장과 어장의 노동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공무원, 군인 및 교사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직업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및/또는 비공식 노동자간의 이러한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OECD, 2017[14]). 2012년 8월 현재 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비율은 각각 33.5% 및 33.8%였으며 2017년 8월에는 이보다 약간 떨어진 31% 및 28.8%를 기록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75]).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도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하락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과 의료보호 개혁

인도네시아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단편적인 경향이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개혁법(Social Security Reform Act - SJSN)으로 알려진 법률 No. 40/2004의 점진적인 시행에는 개혁과 실행을 위한 야심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까지 2억5천만명이 넘는 인구 전체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전 국민(6개월 이상 취업한 외국인 거주자 포함)에게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9년까지 단일 의료보호체계하의 강제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Jaminan Kesehatan Nasional(JKN)이라고 하는 동 제도는 신설된 의료보호 사회보장기구인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BPJS Kesehatan)이 시행하였다.[5] 제도의 목표는 전체 종업원과 거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JKN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JKN에 제공자로 가입한 일부 민간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JKN은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부터 개심 수술, 투석, 항암 화학요법까지 모든 치료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보험은 JKN에서 제외되는 초과 또는 추가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한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 사회보장기구인 BPJS Ketenagakerjaan[6]이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사회보험과 강제저축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자들이 산업재해, 노령,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PJS Ketenagakerjaan는 노인요양, 산재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을 포함한 고용관련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한다.

의료보호를 위한 분담금은 월 RP 22,500에서 RP 55,000까지(USD 2.25에서 USD 4.50까지)의 차등되어 있다. 빈곤층의 의료보험 분담금은 정부가 부담한다.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 분담금 총액은 총 수입의 약 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7]

국가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빈곤 퇴치 계획과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이른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예를 들면, Program Jaring Pengaman Sosial)으로 통합된 빈곤층을 위한 비상 사회구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2005년과 2007년에는 무조건 현금지원(Unconditional Cash Transfers - UCTs) (Bantuan Langsung Tunai - BLT)와 조건부 현금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s - CCTs) (Program Keluarga Harapan - PKH)을 각각 도입하였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만 의료와 공공부조에 대한 추가지출은 세입의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다. 효율 향상과 다른 신흥 개발국에 비해 낮은 세수의 증대를 통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OECD, 2018[76]).

인도의 건강보험 확대

5억명의 인도 국민들은 2018년 9월에 도입된 현지 언론이 “Modicare”로 지칭하고 있으나 공식 명칭은 “Long Life India”를 의미하는 전국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 건강보험은 인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빈곤한 가정은 USD6,950을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의료를 위해 2020년까지 간호사, 전통적 약물치료사 및 기타 의료인력을 갖춘 150,000개의 “보건 및 건강”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약 16억 미국달러에 달한다(Guardian, 2018[77]).

이 건강보험의 주된 목적은 가계소득의 4분의 1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파멸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계에서 환자가 입원하면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2010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5%인 6천3백만명의 인도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한다고 한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부분은 병원은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개인병원을 찾게 된다. 농촌 가계들은 의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입하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한다.

이 제도는 개인병원과의 제휴에 의존하며 전통적인 전인적 의료를 장려한다. 전통적인 인도 의술을 보유한 간호사와 의사들은 암과 폐결핵 진단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의료 종사자들은 복잡한 진단의 경우 전문의사를 화상으로 호출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영양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인식 전환운동과 “국민운동”도 기존의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가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병원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15,000개 정부 또는 민간 병원이 정부 승인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함을 시사하였다. 현재 정부의 공공 의료보호에 대한 지출은 GDP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행이다. 인도에서 연방정부의 의료보호제도 및 이와 유사한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의료보험제도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평가한 13건의 연구 중 9건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Prinja et al., 2017[78]).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 비기여형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를 아직 정착시키지 못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본인 비기여형 공공부조제도를 개발하고 개선하여 만연된 빈곤과 이와 관련된 보건 및 교육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Barrientos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종류의 공공부조제도가 존재한다(2016[7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부조제도에는 무조건 현금 및/또는 현물지원, 조건부 현금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OECD (2018[25])는 조건부 및 무조건 고용 및 노동 유인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부적적인 고용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혀냈다(Banerjee et al., 2017[80]도 참고하기 바람).[8]

- 무조건부 현금지원(Unconditional Cash Transfers - UCT) 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노령인 빈곤 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는 몽골 아동기금(ILO, 2016[81]; OECD, 2017[74]), Benazir 소득보조금제도(Box 2.7), 인도의 식품안전법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지원 형태의 식품지원을 위한 공공배급제도(Puri, 2017[82]), 모든 가계에 대해 보증 최저소득을 지원하는 중국의 *Urban Di Bao* 제도 등이 포함된다. 1993년 도입된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수혜자 규모는 2009년에 760만 가구, 2천3백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였으며 2015년의 수혜자는 550만 가구, 1천7백만명을 기록하였다 (University of Manchester, 2018[83]). 다른 일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상당수의 노령자들이 "본인 비기여형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전체 노령인구의 33%, 네팔은 약 50%, 홍콩, 중국 및 태국은 약 4분의 3이 이에 해당한다(OECD, 2017[74]; ILO, 2018[84]).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지원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OECD, 2011[85]) 빈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 비기여형 연금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높은 비공식성에 따른 후유증을 다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ILO, 2018[84]).
- 조건부 현금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 - CCT) 제도는 교육 또는 보건과 관련된 특정 행위 요건(예들 들면, 취학, 예방접종, 의료기관 방문)을 충족하는 빈곤 가계에 소득 보조금을 지원한다. 빈곤 해소 이외에도 CCT는 기회 균등을 조장하고 아동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례로는 교육 참여도 향상을 위한 조건부 현금지원이 포함된 Benazir 소득보조금제도를 들 수 있다(Box 2.7).
-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법(The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GNRES)은 인도 국민들이 도로, 운하, 저수지, 관정 공사 등과 같은 미숙련 육체노동에 매 회계연도당 100일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농촌가계에 보장한다(Dutta et al., 2014).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포괄성, 동종 노동에 대한 남녀평등 임금 지급 및 보육시설의 제공 등을 촉진한다(Sonalde, Vashishtha and Joshi, 2015[86]; Breitkreuz et al., 2017[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곧 발간될 *아시아 태평양지역 ADB SPI 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제도 이외에도 OECD 정책 개혁 사례는 효과적인 빈곤퇴치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제도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입정책과 결합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에는 빈곤 탈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면적인 접근법이 포함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상자의 신원 및 관련된 소득 지원금을 개인 상담 및 교육, 고용, 의료보호, 주택 및 사법제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과 결합시키는 *Chile Solidario*를 들 수 있다(OECD, 2009[88]).

Box 2.7. **파키스탄의 Benazir 소득보조금 제도**
(The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 BISP)

파키스탄의 계획위원회는 2007년 자국 최초의 국가 사회보장전략(National Social Protection Strategy - NSPS)을 채택하였다. 2008년, 파키스탄 정부가 재원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제원조로 충당하여 대표적인 국가 사회안전망으로 BISP를 도입하였다.

대상 가계 선정을 위하여 World Bank는 2005-2006년의 파키스탄 사회 및 생활수준 측정(Pakistan Social and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 PSLM-4)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채점표(Poverty Scorecard - PSC)를 사용한 대상선정 방법"을 고안하였다(Nayab and Farooq, 2014[89]). PSC는 가계의 규모, 교육, 자녀현황, 농지소유 현황, 주택 및 화장실 시설 및 가축 보유 수 등의 주요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PCS 자료는 2010-11년에 걸친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 완료 후 PSC에 대용물 자산조사(Proxy Means Test - PMT) 공식을 적용하여 각 가계의 복지상태 점수를 0부터 100까지 등급으로 산출하였다. 등급 16.17 미만의 모든 가계는 BISP 현금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지원금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현재는 수혜자의 90%가 BISP 직불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금 지원 총액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GDP의 0.22%에서 0.36%로 늘어났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 가입자가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9.1%에서 22.6%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Mumtaz and Whiteford, 2017[90]).

파키스탄 통계청이 설정한 빈곤선을 토대로 소득의 빈곤선 접근 정도에 따라 극빈, 빈곤, 취약, 준 비빈곤, 비빈곤의 다양한 범주로 빈곤층을 분류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ISP 수혜가계 중 극빈 및 빈곤 범주 점유율은 66%에서 3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 감소율 31% 중 7%에 해당하는 수혜가계가 취약 범주로 이동하였으며 24%는 준 비빈곤 및 비빈곤 범주로 이동하였다(Mumtaz and Whiteford, 2017[90]).

BISP 제도의 주된 목적은 빈곤층에 대한 금전, 식량 및 연료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며 부차적인 목적은 가계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시적 빈곤 및 영구적 빈곤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Cheema et al. (2016[91])는 BISP로 인해 성인 1인당 식량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체력저하가 감소한 증거를 발견하였다(지표 6.3 아동 영양실조 참조). 무조건

Box 2.7. **파키스탄의 Benazir 소득보조금 제도(계속)**
(The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 BISP)

현금지원은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에 4-12세 아동의 취학과 연계된 조건부 현금지원인 "Waseela-e-Taleem(WeT)"를 도입한 결과 취학률이 증가하였다 (Cheema et al., 2016[92]). 소기업 개발 및 창업 지원 등과 같은 대상자의 재정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금전적 지원제도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결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관련된 과제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사회보장 지출규모는 낮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OECD 평균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시행하는 제도의 유형과 기존 제도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격차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많다. 더욱이 현재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비교적 부유한 공식적으로 고용된 (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고용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거의 70%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직업에 종업원이 없이 스스로 일하는 영업자(자영업자)로 종사하거나, 및/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형태로 비공식 고용(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되어 낮은 보수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15-24세) 및 노령 노동자(65세 이상)가 비공식 고용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30%만이 비공식 고용되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비공식적 경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고 이는 전체적인 생산성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의 일부가 된다.

비공식 노동자들에게까지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제는 노동과 노동시장의 성격변화에 따라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에서는 전체 직종의 거의 절반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성이 낮은 직종의 대다수는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ICT 투자비를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화로 숙련된 고급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장차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를 늘려 신기술을 채용한 직종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는 또한 보조금의 수령, 세금의 납부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관리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은 최소한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비공식적 요소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및 관리에 자연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과 같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인구가 매우 적은 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특히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약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소득과 임금의 빠른 증가로 은퇴 계층과 신흥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식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가난한 가계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의 투자 확대, 지원대상 선정방법 개선 등이 있으며 가능하면 이를 기존의 교육, 보건 및 고용정책들과 연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과 세입을 고려하면 세원 확충, 누진과세 강화 및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빈곤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 조세/복지 제도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석

1. 지난 10년간 많은 고소득 국가의 제조부문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의 제조부문 고용은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였다 –"때이른 산업공동화" (Rodrik, 2015[6]).

2. 비공식 종업원들 또한 공식 종업원보다 비정상적인 형태로 고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 상근 종업원의 21%가 비공식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시간제 종업원의 경우는 60%,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다(ILO, 2018[25]).

3. Arntz at al., (2016[34])는 또한 이러한 신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의 창출, 새로운 노동절약 기술을 채용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된 신제품의 수요 증가를 포함한 상쇄적인 거시경제적 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미래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추정치보다 더 작을 것이다.

4. 수입 또는 기타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게 보조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좀더 유연한 시스템은 단기적인 수입의 변화를 상쇄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 가계는 적어도 한 가지의 예측 가능한 소득원을 갖기를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Millar, 2017) 이를 토대로 다른 소득의 변동에 대처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5. Askes(공무원 대상), Jamsostek(민간부문 대상) 및 Asabri(경찰 및 군인 대상) 제도하의 모든 의료보험은 2014년 1월 1일부로 BPJS 의료보험으로 이관되었다.

6. BPJS Ketenagakerjaan은 1) 군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 2) 공무원, 3) 민간기업 종업원과 비공식 경제의 종업원을 위한 임의적 제도에 대한 노령 보조금과 4) 공무원, 정부 연금수급자, 군대와 경찰 연금수급자와 퇴역군인에 대한 의료 및 출산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던 이전의 모든 사회보장기관을 대체한다.

7.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산재사고 – 업종에 따른 0.24%에서 1.74% 사이의 고용주 부담 분담금, 사망보험금 – 고용주가 0.3% 지급, 노령연금 5.7%(고용주가 3.7%, 종업원이 2.0% 부담), 의료보험 5%(고용주가 4%, 종업원이 1% 부담) 및 연금 8%(고용주가 4%, 종업원이 4% 부담).

8. 목표가 된 현금지원제도가 노동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Banerjee et al., (2017[591])는 전 세계에 걸친 6개의 개발도상국 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7회의 무작위 대조시험의 자료를 재분석하였으나 현금지원제도가 노동의욕을 감퇴시킨 체계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ADB (2018), *Asian Development Outlook (ADO)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www.adb.org/publications/asian-development-outlook-2018-how-technology-affects-jobs* (accessed on 02 August 2018). [2]

ADB (2016), *Social Protection for InformalWorkers in Asia*,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03891/sp-informalworkers-asia.pdf* (accessed on 10 August 2018). [12]

ADB (forthcoming), *The Social Protection Indicator –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in 2015, ADB, https://spi.adb.org/spidmz/*. [15]

Adema,W., P. Fron and M. Ladaique (2014), "How much do OECD countries spend on social protection and how redistributive are their tax/benefit system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67/1, pp. 1-25, *http://dx.doi.org/10.1111/issr.12028*. [14]

Adema,W., P. Fron and M. Ladaique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2d2d4pbf0-en*. [5]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jlz9h56dvq7-en*. [45]

Australian Government (2018), *Fair Work Commission | Australia's national workplace relations tribunal, www.fwc.gov.au/* (accessed on 24 September 2018). [41]

Australian Government (2018), *Fair Work Ombudsman, www.fairwork.gov.au/* (accessed on 24 September 2018). [43]

Banerjee, A. et al. (2017), "Debunking the Stereotype of the Lazy Welfare Recipient: Evidence from Cash Transfer Program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32/2, pp. 155-184, *http://dx.doi.org/10.1093/wbro/lkx002*. [80]

Banerjee, S. (2016), *Digital Dividends Aadhaar: Digital Inclusion and Public Services in India, http://pubdocs.worldbank.org/en/655801461250682317/WDR16-BP-Aadhaar-Paper-Banerjee.pdf* (accessed on 20 August 2018). [54]

Barrientos, A. (2016), *Social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Univ Press, *http://admin.cambridge.org/sb/academic/subjects/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political-economy/socialassistance-developing-countries* (accessed on 23 August 2018). [79]

Bassanini, A. and E. Caroli (2014), "Is Work Bad for Health? The Role of Constraint vs Choice", *IZA Disussion Papers*, No. 7891, Forschungsinstitute zur Zukunft der Arbeit, *https://basepub.dauphine.fr/bitstream/handle/123456789/12483/dp7891.pdf?sequence=3&isAllowed=y* (accessed on 04 September 2018). [35]

BBC (2018), *Aadhaar: India top court upholds world's largest biometric scheme – BBC News, www.bbc.com/news/world-asia-india-44777787*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51]

Berg, J. (2016), "Income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Findings and policy lessons from a survey of crowd work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4, ILO, *www.ilo.org/publns (accessed on 23 October 2018)*. [66]

Bonnet, F. (2019), *Facts on Business Informality*, ILO. [33]

Breitkreuz, R. et al. (2017), "The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A Policy Solution to Rural Poverty in India?", *Development Policy Review*, *http://dx.doi.org/10.1111/dpr.12220*. [87]

Burgstaller, S. et al. (2017), "*Rethinking Mobility: The 'pay as you go' car: Ride hailing just the start*", Goldman Sachs, *www.gs.com/research/hedge.html* (accessed on 28 September 2018). [57]

Card, D. and J. Dinardo (2002),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Rising Wage Inequality: Some Problems and Puzz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0/4, *http://davidcard.berkeley.edu/papers/skill-tech-change.pdf* (accessed on 25 September 2018). [47]

Cheema, I. et al. (2016), *Evaluation of the Waseela-e-Taleem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 2016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Oxford Policy Management, *http://bisp.gov.pk/wp-content/uploads/2017/02/WET-Report.pdf* (accessed on 22 November 2018). [92]

Cheema, I. et al. (2016),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Final Impact Evaluation Report*, Oxford Policy Management, *www.opml.co.uk* (accessed on 22 November 2018). [91]

Chen, M. (2012), "The Informal Economy: Definitions, Theories and Policies WIEGO Working Papers", WIEGO Working Paper, No. 1,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 (WIEGO), *www.wiego.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les/Chen_WIEGO_WP1.pdf* (accessed on 07 August 2018). [26]

Department Statistics of Malaysia (2015), *Road Injury statistics, www.miros.gov.my/1/page.php?id=17*. [62]

Eurostat (2016),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 ESSPRO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3859598/7766647/KS-GQ-16-010-EN-N.pdf/3fe2216e-13b0-4ba1-b84f-a7d5b091235f* (accessed on 09 December 2017). [7]

Ford, M. and V. Honan (2017), "The Go-Jek Effect", in Jurriens, E. and Tapsell, R. (ed.), *Digital Indonesia: Connectivity and Divergence*. [59]

Frey, C. and M. Osborne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Oxford Martin School, University of Oxford, *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future-of-employment.pdf* (accessed on24 September 2018). [44]

Guardian, T. (2018), *"Modicare": India's PM promises free health care for poorest citizens, World news,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world/2018/sep/24/modicare-indias-pm-promises-free-healthcare-for-half-a-billion-people* (accessed on 01 October 2018). [77]

Holmes, A. (2017), *How big is the transport sharing economy?,https://daliaresearch.com/how-big-is-thetransport-sharing-economy/* (accessed on 28 September 2018). [55]

Hussmanns,R.(2004),"Measuringtheinformaleconomy:Fromemploymentintheinformalsectorto informal employment", *ILO Working Paper*, No. 5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integ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079142.pdf* (accessed on 07 August 2018). [27]

ILO (2018), *Informality and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LO,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inst/documents/publication/wcms_646040.pdf* (accessed on 27 November 2018). [67]

ILO (2018),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2017-19*, ILO, Geneva, *www.ilo.org/publns* (accessed on 28 September 2018). [84]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 third edit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26831.pdf* (accessed on 07 August 2018). [28]

ILO (2017),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19: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PDF.action?ressource.ressourceId=54887* (accessed on 03 September 2018). [9]

ILO (2016), *Child Money Programme Mongolia*, ILO, Geneva, *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ilo-beijing/documents/publication/wcms_534930.pdf* (accessed on 28 September 2018). [81]

ILO (2016),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6: Transforming jobs to end poverty*, ILO, Geneva, *www.ilo.org/global/research/global-reports/weso/2016-transforming-jobs/WCMS_481534/lang--en/index.htm* (accessed on 27 November 2018). [30]

ILO (2005), *ILO Social Security Inquiry, www.socialsecurityextension.org/gimi/gess/RessourcePDF.do?ressource. ressourceId=6622* (accessed on 09 December 2017). [8]

ILR School and Future of Work Initiative (2018), *Gig Economy Data Hub*, Cornell Universit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School, The Aspen Institute, Future of Work Initiative, *www.gigeconomydata.org/*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64]

Jonasson, E. (2012),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egional Variation in Informal Employmen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48/4, pp. 481-497, *http://dx.doi.org/10.1080/00220388.2011.615922*. [31]

Jütting, J. and J. De Laiglesia (2009), *Is Informal Normal?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accessed on 22 November 2018). [29]

Katz, L. and A. Krueger (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NBER Working Paper*, No. 2266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dx.doi.org/10.3386/w22667*. [65]

Limer, E. (2014), *My Brief and Curious Life As a Mechanical Turk, https://gizmodo.com/my-brief-andcurious-life-as-a-mechanical-turk-1587864671*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50]

Marciano, J. (2016), *Who Runs the World? Uber!, www.similarweb.com/blog/worldwide-ride-hailing-apps*. [56]

Mumtaz, Z. and P. Whiteford (2017), "Social safety nets in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ystem in Pakistan: An analysis of the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39/1, pp. 16-38, *http://dx.doi.org/10.1080/23276665.2017.1290902*. [90]

Muralidharan, K., P. Niehaus and S. Sukhtankar (2017), Direct Benefits Transfer in Food Results from One Year of Process Monitoring in Union Territories, UC San Diego, http://econweb.ucsd.edu/~kamurali/papers/Other%20Writing/20170905_UT_DBT_Report.pdf (accessed on 20 August 2018). [53]

Muralidharan, K., P. Niehaus and S. Sukhtankar (2016), "Building State Capacity: Evidence from Biometric Smartcards in Ind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6/10, pp. 2895-2929, *http://dx.doi.org/10.1257/aer.20141346*. [52]

Nayab, D. and S. Farooq (2014), "Effectiveness of Cash Transfer Programmes for Household Welfare in Pakistan: The Case of the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53/2, pp. 145-174, *www.pide.org.pk/pdf/PDR/2014/Volume2/145-174.pdf* (accessed on 01 October 2018). [89]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46]

OECD (2019),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Manual – 2019 Edition,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6]

OECD (2018),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8 Fostering Growth Through Digitalis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9789264286184-en*. [3]

OECD (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Paris, *www.oecd.org/mcm/documents/C-MIN-2018-7-EN.pdf* (accessed on 06 August 2018). [24]

OECD (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817-en*. [25]

OECD (2018),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8,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co_outlook-v2018-1-en*. [1]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Indonesia*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co_surveys-idn-2018-en*. [76]

OECD (2018),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301665-en*. [21]

OECD (2018), *Putting faces to the jobs at risk of automation, www.oecd.org/employment/future-ofwork.htm* (accessed on 06 August 2018). [18]

OECD (2018),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rev_stats-2018-en*. [10]

OECD (2018), *Revenue Statistics in Asian and Pacific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091-en*. [11]

OECD (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OECD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Paris, *www.oecd.org/employment/future-of-work.htm* (accessed on 24 September 2018). [19]

OECD (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6943-en*. [48]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2262-en*. [74]

OECD (2017),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OECD, Paris, *www.oecd.org/social/Basic-Income-Policy-Option-2017.pdf* (accessed on 20 November 2018). [69]

OECD (2017), *Future of Work and Skills*, OECD, Paris, *www.oecd.org/els/emp/wcms_556984.pdf* (accessed on 06 November 2018). [17]

OECD(2017), *Revenue Statistics in Asian Countries 2017: Trends in Indonesia, Japan, Kazakhstan, Kore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8943-en*. [13]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6-en*. [36]

OECD (2015), *Focus on –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www.oecd.org/social/Focus-on-Minimum-Wages-after-the-crisis-2015.pdf* (accessed on 25 September 2018). [39]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38]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23]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22]

OECD (2012), *Reducing opportunities for tax non-compliance in the underground economy*, OECD, Paris, *www.oecd.org/tax/forum-on-tax-administration/publications-and-products/sme/49427993.pdf* (accessed on 22 November 2018). [34]

OECD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9991266*. [85]

OECD (2009), *OECD Reviews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Chile 2009*, OECD Reviews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0616-en*. [88]

OECD (2000),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 (accessed on28 September 2018). [73]

Pathways for Prosperity Commission (2018), *Charting Pathways for Inclusive Growth – From Paralysis to Preparation, www.click.co.uk* (accessed on 15 October 2018). [20]

Pesole, A. et al. (2018), *Platform Workers in Europe Evidence from the COLLEEM Survey*, European Union Joint Research Centre, *http://dx.doi.org/10.2760/742789*. [49]

Prabowo,Y. (2018), *Uber, Go-Jek, Grab: What do People in Indonesia Actually Want from Ride-Hailing Apps?*, ecommerce IQ, *https://ecommerceiq.asia/cp-ride-hailing-apps-in-indonesia/*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61]

Prinja, S. et al. (2017), "Impact of Publicly Financed Health Insurance Schemes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in India: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Vol. 12/2,pp. e0170996, *http://dx.doi.org/10.1371/journal.pone.0170996*. [78]

Puri, R. (2017), "India's National Food Security Act (NFSA): Early Experiences", Lansa Working Paper Series, No. 14, *www.lansasouthasia.org* (accessed on 01 October 2018). [82]

Purnell, N. (2016), *Uber Rival Grab Gains Ground in Southeast Asia*, wall Street Journal, *www.wsj.com/articles/uber-rival-grab-seizes-lead-in-southeast-asia-146762050*. [58]

Queisser, M., A. Reilly and Y. Hu (2016), "China's pension system and reform: An OECD perspective",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Vol. 4/4, pp. 345-367, *http://dx.doi.org/10.1080/20954816.2016.1251134*. [71]

Rodrik, D. (2015),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093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ww.nber.org/papers/w20935* (accessed on 22 October 2018). [16]

Salditt, F., P. Whiteford and W.Adema (2008), "Pension reform in Chin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61/3, pp. 47-71, *http://dx.doi.org/10.1111/j.1468-246X.2008.00316.x*. [70]

Social Security Organisation of Malaysia (2018), *Self-Employed Employment Injury Scheme,www.perkeso.gov.my/index.php/en/our-services/benefits/self-employed-employment-injury-schemetaxi*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63]

Sonalde, D., P. Vashishtha and O. Joshi (2015), *Maj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A Catalysus for Rural Transformation, www.esocialsciences.org/Articles/show_Article.aspx?qs=ebKFqzOKbXo7se0+tFTcFgB/Qg9lMx8H7EcQyowRRVbAjv2BNHkaakHzcZy9fkFLyG2jMM/EOSe03zMtemCj/anx+TrNLBXx/i6DN60i0h8=*. [86]

Statistics Korea (2017), *Statistics Korea Portal, www.index.go.kr/main.do?cate=7* (accessed on16 December 2017). [75]

Stewart, A. et al. (2016), *Creighton and Stewart's labour law*, The Federation Press, *www.federationpress.com.au/bookstore/book.asp?isbn=9781760020552*. [42]

University of Manchester (2018), *Social Assistance Explorer, www.social-assistance.manchester.ac.uk/* (accessed on 28 September 2018). [83]

Weng, X. (2015), "The rural informal economy – Understanding drivers and livelihood impacts in agriculture, timber and mining", *IIED Working Pap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ww.iied.org@iiedwww.facebook.com/theIIEDhttp://pubs.iied.org/16590IIED* (accessed on 23 October 2018). [32]

Whiteford, P.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TTPI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www.anu.edu.au* (accessed on 25 September 2018). [37]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8), *Road traffic injuries*, WHO,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road_traffic/en/* (accessed on 27 September 2018). [60]

World Bank Group (2018), *The State of Social Safety Nets,* World Bank Group,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29115/9781464812545.pdf?sequence=5&isAllowed=y* (accessed on 15 October 2018). [68]

World Bank Group (2018), *World Development Report 2019: The Changing Nature of Work*.,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435* (accessed on06 November 2018). [4]

Wright, C. and R. Lansbury (2016), “Employment relations in Australia --”, in Bamber G.J., Lansbury R.D.,W. (e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National regulation, global changes*, Allen& Unwin/Sage, London. [40]

Zhu, H. and A.Walker (2018), “Pension system reform in China: Who gets what pens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http://dx.doi.org/10.1111/spol.12368*. [72]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3 장

일반적 배경 지표

1인당 GDP 64
출산율 66
결혼 및 이혼 68
국제이주 70
노인부양률 72

1인당 GD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GDP**)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1인당 GDP 차이는 크다. 중국 마카오의 GDP는 네팔과 타지키스탄보다 100배 이상 높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인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USD 38,200)보다 훨씬 높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1인당 GDP가 지역 평균(USD 13,800)에 미달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인당 GDP의 **실질 연간 평균 성장률**은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약간 떨어졌다(그림 3.2). 이 기간 동안 브루나이 다루살람과 동티모르는 마이너스 성장,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몽골 및 미얀마는 높은(연간 5% 이상) 실질 연간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2012-17년 기간의 연간 평균성장률(0.9%)은 직전 5년간의 성장률(2007년부터 2012년까지 1.7%)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성장세의 둔화는 2007-12년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던 국가들(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다루살람, 마카오, 몽골, 스리랑카 및 동티모르)의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한 결과다. 이에 비해 최근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GDP는 증가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국가**들은 2012-17년 기간의 성장세가 직전 기간(2006-12년)보다 둔화 되었지만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3). 2012-17년 기간의 1인당 GDP 성장속도와 2012년의 초기 수준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따라잡기(catch-up)"와 GDP 수렴의 경제이론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예상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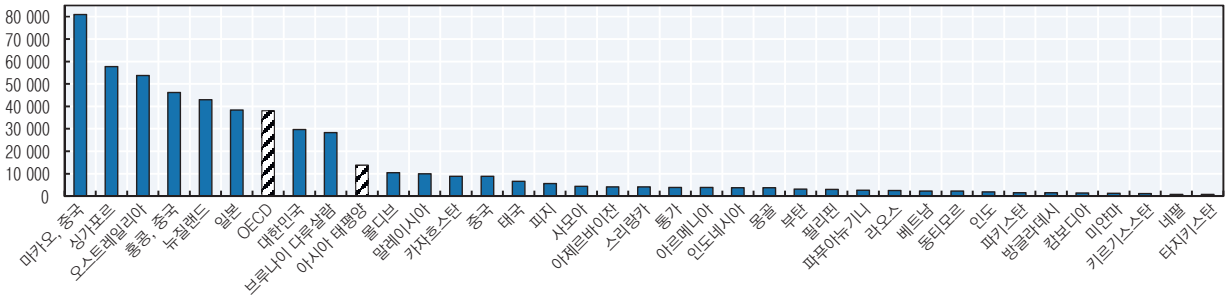
국민계정체계(SNA)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 중에서 국내총생산(GDP)는 국가간 경제규모를 비교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1인당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거래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평균값이다.

1인당 GDP는 해당 국가의 2017년 기준 미국달러로 표시된 GDP를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실질 연간 평균성장률은 2010년 불변 미국달러로 표시된 1인당 GDP를 해당 기간(2007-17, 2007-12 및 2012-17)의 결합 연간 성장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인당 GDP의 수평 로그는 기준연도(2012)의 1인당 GDP에 대한 상용 로그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자료는 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및 OECD 통계(*http://dotstat.oecd.org*)에서 입수하였다.

그림 3.1.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인당 GNP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7년 현재의 1인당 GDP(↘), (2017 미국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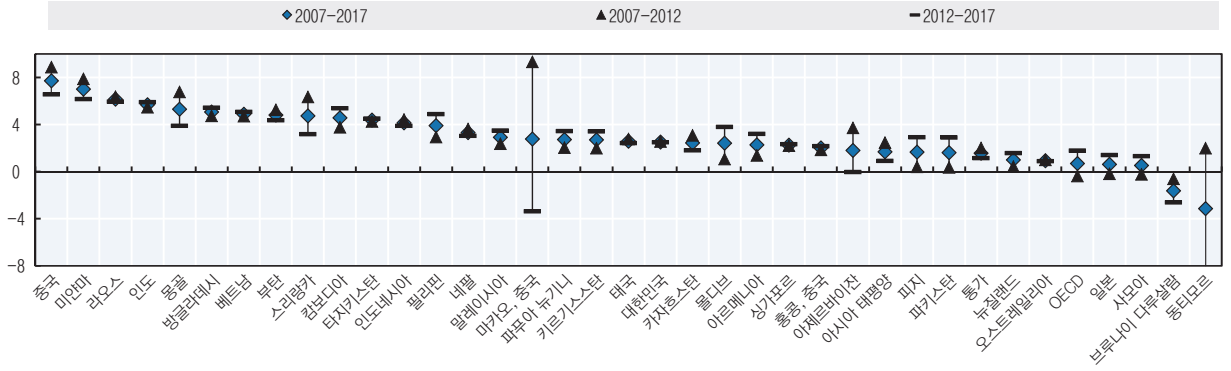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736

그림 3.2.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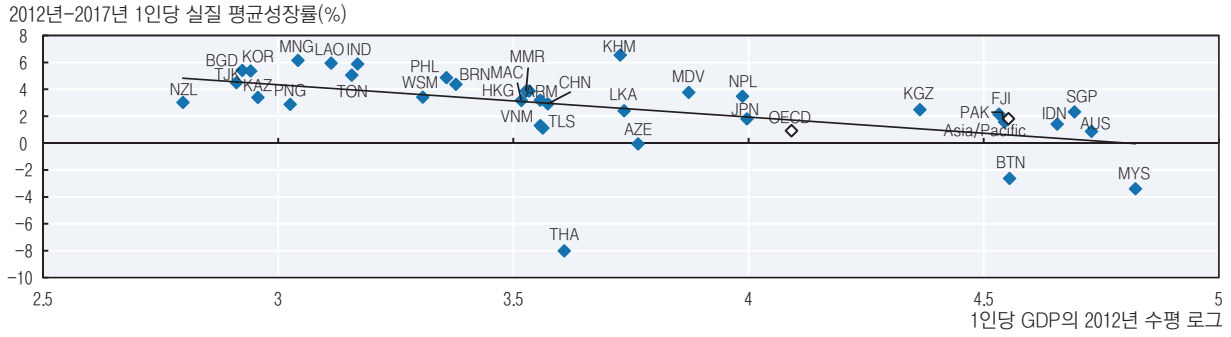
2007-17년 기간의 1인당 GDP 실질 연간 평균성장률



출처: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755

그림 3.3. **빈곤한 아시아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774

출산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은 평균적인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인원 수를 나타낸다. 합계출산율이 유아 및 아동사망률을 감안하여 2가 약간 넘으면 인구의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이른바 "대체비율(replacement rate)"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당 2.1명이지만 빈곤한 국가들은 더 높을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출산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3.4). 2016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의 자녀 수는 OECD 회원국의 1.7명 보다 많은 2.4명이다. 동티모르와 사모아 같은 도서국가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4명 이상으로 더 많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가장 낮아 여성당 자녀 수는 1명에 불과하다. 아르메니아, 중국, 일본, 태국, 홍콩(중국) 및 마카오(중국) 역시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지난 10년간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TFR은 여성 1인당 거의 3명이 줄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OECD 회원국들은 이보다 적은 여성 1인당 1.5명 이하가 감소하였다. 몰디브의 TFR은 1970년의 여성 1인당 7명에서 2016년에는 2.1명으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였다. 2016년에 1970년보다 높은 TFR을 기록한 국가는 없다.

빈곤국가의 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부유한 국가**의 여성들의 출산율보다 더 높다(그림 3.5). 2016년 OECD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여성들은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자녀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 소녀의 출산율이 높고 결혼연령이 낮은 국가(결혼 및 이혼 자료 참조)는 전체 출산율도 높다(그림 3.6). 사춘기 출산율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장 낮다. 라오스, 네팔 및 필리핀의 사춘기 출산율은 15-19세 여성 1000명당 60명 가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사춘기 출산율은 15-19세 여성 1000명당 85명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1000명당 29명)의 세 배, OECD 평균(1000명당 13명)의 6배 수준이다.

정의 및 측정

특정 연도의 총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가 끝날 때까지 생존하고, 각 생애 단계의 출산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같다고 가정할 때의 출산 자녀 수에 해당한다. 사춘기 출생률은 15-19세 여성 1000명당 연간 출산 인원으로 정의한다.

본 장에 수록된 자료는 주로 유엔 인구통계(*http://esa.un.org/wpp*)를 인구 자료로 사용하는 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에서 추출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는 행정적인 "활력징후 등록(vital registration)" 자료, 인구조사 자료 및/또는 조사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출처의 신뢰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1인당 GDP는 앞의 "1인당 GDP" 지표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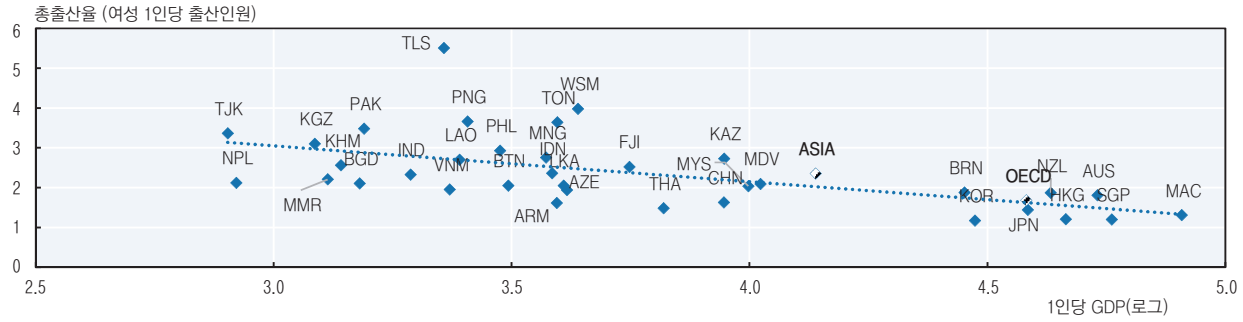
추가 참고자료

United Nations (2017), World Fertility Data 2017 (POP/DB/Fert/Rev2017),

OECD (2018), "SF2 .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

그림 3.4.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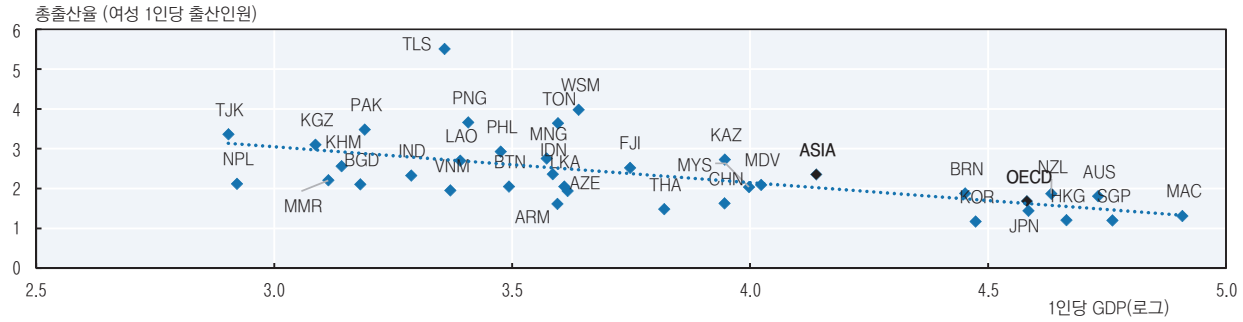
1970년, 1995년 및 2016년과 최근 연도의 15세-49세 여성의 자녀 수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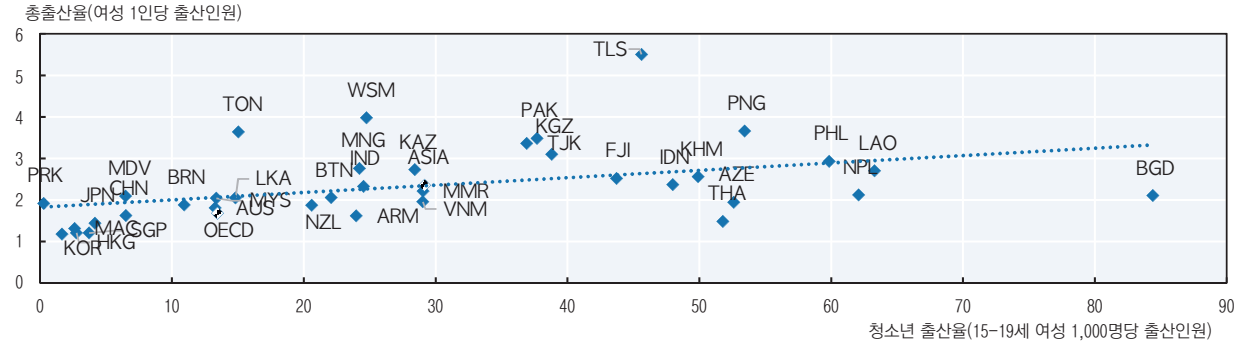
그림 3.5. **부유한 국가들의 출산율은 낮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812

그림 3.6.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사춘기 출생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831

결혼 및 이혼

2000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혼율과 이혼율은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3.7 및 3.8).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OECD 회원국에 비해 2배가 높은 반면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조혼인율은 중국,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이 성인 1000명당 9명으로 가장 높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태국은 성인 1000명당 4명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지역 내 OECD 회원국(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조이혼율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조혼인율이 높은 국가의 조이혼율도 높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혼 평균연령**은 1990년 이후 평균 3년이 늘어났다(그림 3.9). 선별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1990년의 초혼 평균연령은 여성이 23.5세, 남성이 26.1세였다. 2016년 현재 평균연령은 여성이 26.6세, 남성이 29.1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남녀 공히 3년에서 4년이 낮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심하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남녀 초혼 평균연령은 5년 이상 늘어났지만 아제르바이잔과 타지키스탄의 여성 초혼 평균연령은 1년 미만으로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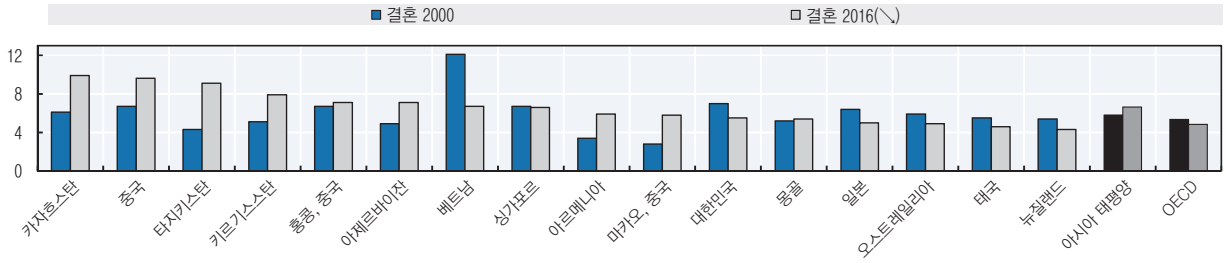
조혼인율(CMR)은 1000명에 대한 연간 합법적인 결혼 건수로 정의한다. 조이혼율(CDR)은 1000명에 대한 연간 합법적인 결혼의 해제 건수로 정의한다.

초혼 평균연령은 처음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결혼 시의 평균연령으로 정의한다. 이 척도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평균연령을 측정한다.

조혼인율은 성인 1000명에 대한 연간 결혼건수를 나타내며, 이와 마찬가지로 조이혼율은 전체 성인 인구와 관련된 특정 연도의 이혼건수를 나타낸다. 본 자료는 UN 경제사회통계국의 2006년 및 2016년 UN 인구통계연감에서 추출하였다.

그림 3.7.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혼율이 증가하였다.**

2000년 및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1000명당 조결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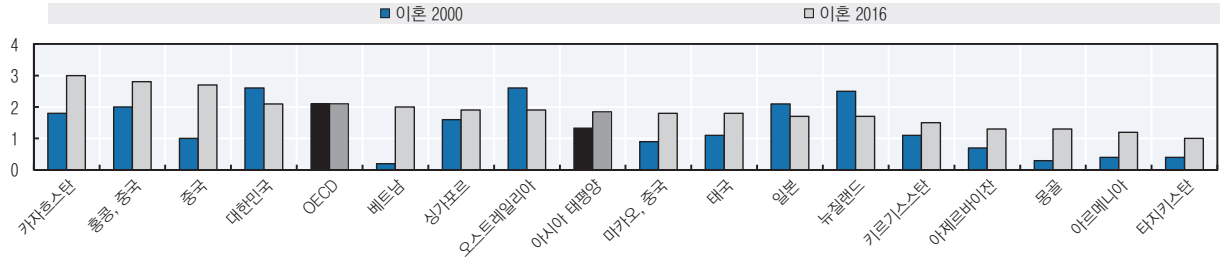


출처: *UN Demographic Yearbook*,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efault.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850

그림 3.8.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혼율이 증가하였다.**

2000년 및 2016년 또는 최근 연도의 1000명당 조이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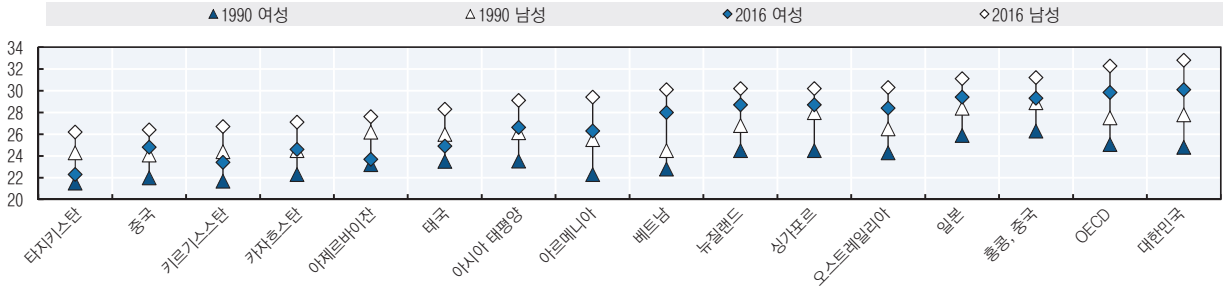


출처: *UN Demographic Yearbook*,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efault.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869

그림 3.9. **1990년 이후 초혼 평균연령은 3년이 늘었다.**

1990년 및 2016년 또는 최근 연도의 초혼 평균연령



주석: 에스토니아(1992)와 폴란드(1993)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90년 자료이며, 칠레, 프랑스, 라트비아, 멕시코 및 슬로바키아는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다. 멕시코(2014),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및 영국(2015)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6년 자료이며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는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UN Demographic Yearbook*,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efault.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888

국제이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난민 규모**는 1990년의 390만명에서 2017년에는 26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자료에서 최근의 Rohingya 위기로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로 탈출한 인한 난민은 고려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회원국들의 난민 규모는 730만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3.10). 파키스탄의 난민 규모 감소(190만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난민 규모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인도에서는 난민이 100,0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및 태국에서는 10,000명 이상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 전체로 유입된 난민 규모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ECD 회원국으로 유입된 난민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약 27%)은 2000년에서 2016년의 기간 동안 절대 인원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아주 큰 변화(20% → 27%)는 없었다(그림 3.11). 2016년에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 및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었다. 2017년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의 고용률은 캐나다(72.8%), EU 28개국(64.69%), 미국(69.35%)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높았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이주자 집단과 원주민 사이의 처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OECD, 2015; 발간예정). 여성의 취업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이주자의 고용률은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히 증가한다(OECD, 2015).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9)을 제외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이주자 송금액은 증가하였다. 2017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송금된 총액**의 약 3분의 2를 인도(26%), 중국(24%) 및 필리핀(21%)에 대한 송금액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3.1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이주자들이 2017년에 모국으로 송금한 총액은 2,670억 미국달러로 세계 전체 송금액(6,130억 미국달러)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된다. 송금액은 키르기스스탄(33%), 네팔(28%), 타지키스탄(31%) 및 통가(34%)의 경우와 같이 일부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의 및 측정

망명 신청자는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사유는 명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망명 신청자의 국제적 보호조건 충족여부는 망명심사 당국이 결정한다. 서류 심사를 통해 난민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거나 기타 국제적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이 지표 측정에 사용하는 총 난민 규모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망명 신청자가 포함된다. 총 난민 규모(망명 신청자 포함)에 관한 자료는 UN 경제사회인구국(2017)에서 입수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ECD 회원국으로의 이주자 유입은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인원을 측정한다. 이 지표에 관한 자료는 OECD 국제이주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하였다. 송금액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의 개인에게 송금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현행(명목) 미국달러 기준의 이주자 송금액에 관한 자료는 World Bank의 이주 및 송금 자료에서 입수하였다.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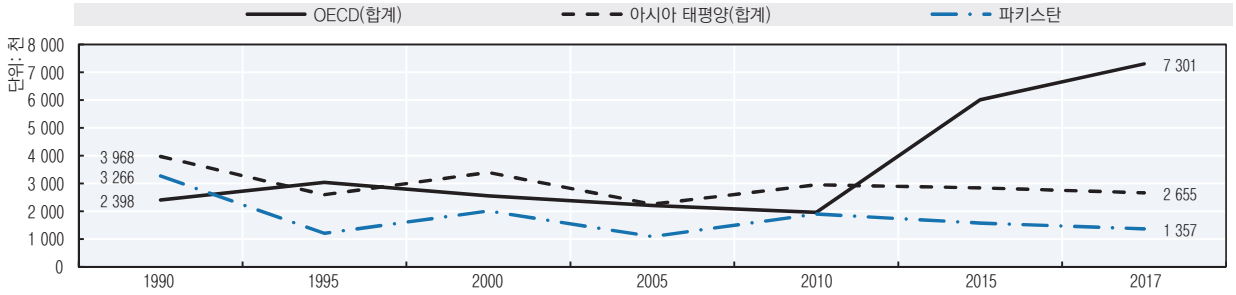
OECD (2015), Connecting with Emigrants: A Global Profile of Diasporas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9845-en*.

OECD/ADBI/ILO (2018), Labor Migration in Asia: Increas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Migration through Finance and Technology, ADBI, Tokyo, *https://doi.org/10.1787/9789264289642-en*.

OECD (forthcoming),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3.10. **OECD 회원국은 유례가 없이 많은 730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난민 규모(망명 신청자 포함)는 감소하였다.**

OECD, 아시아 태평양 및 파키스탄의 추정 난민 규모(망명 신청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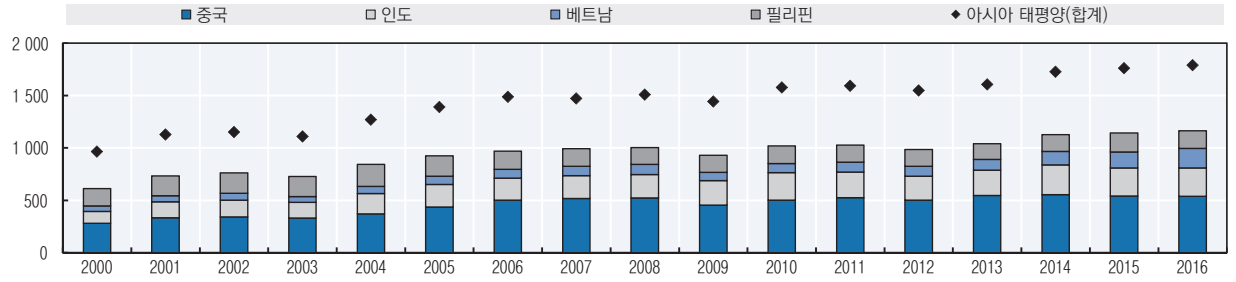
주석: 아시아 태평양(합계)에는 자료의 부재로 부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북한, 라오스, 미얀마 및 통가에 대한 자료가 제외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의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7Revision (United Nations Database, POP/DB/IMIG/Stock/Rev/201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907

그림 3.1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OECD 회원국으로의 이주자 유입 규모는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하였다.**

국가별 외국인 유입 규모(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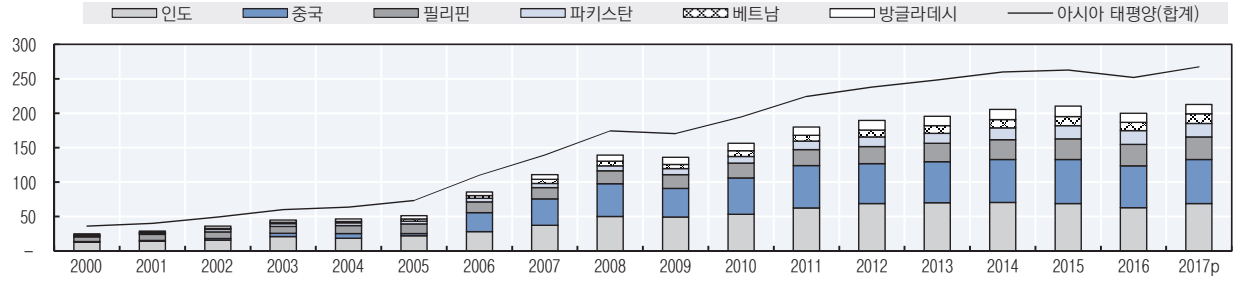
주석: 아시아 태평양 지역 3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몽골, 동티모르는 제외되었다.

출처: 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926

그림 3.12. **2006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유입된 송금 총액의 약 3분의 2가 인도, 중국 및 필리핀으로 송금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주자 송금액 (10억 미국달러)



주석: 2017년 자료는 추정치다.

출처: World Bank Migration Remittances Data (April 2018 ver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945

노인부양률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65세 노인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11명이었다(그림 3.13.A). 이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타지키스탄, 몰디브, 브루나이 다루살람 및 몽골은 연금수급자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17명으로 가장 높으며 일본의 2:3 비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의 **노인부양률**은 OECD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다. 이러한 국가들,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은 기대수명이 높은 반면(그림 6.1), 출산율은 낮다(그림 3.4).

노인부양률은 2055년에 이르러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며(그림 3.13.B), 몰디브, 몽골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OECD 회원국들의 노인부양률은 이미 낮은 수준이지만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한민국은 2015년의 5명에서 2055년에는 노인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1.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는 급속하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빠르게 노령사회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노인부양률은 2015년의 10.4에서 2055에는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노인부양률은 2055년까지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의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보건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기인한다. **예상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그림 3.14)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5년에서 2050년까지의 기간에 적어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가 최소한 전체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이 되면 일본 전체 인구의 36%를 65세 이상의 노인이 점유하게 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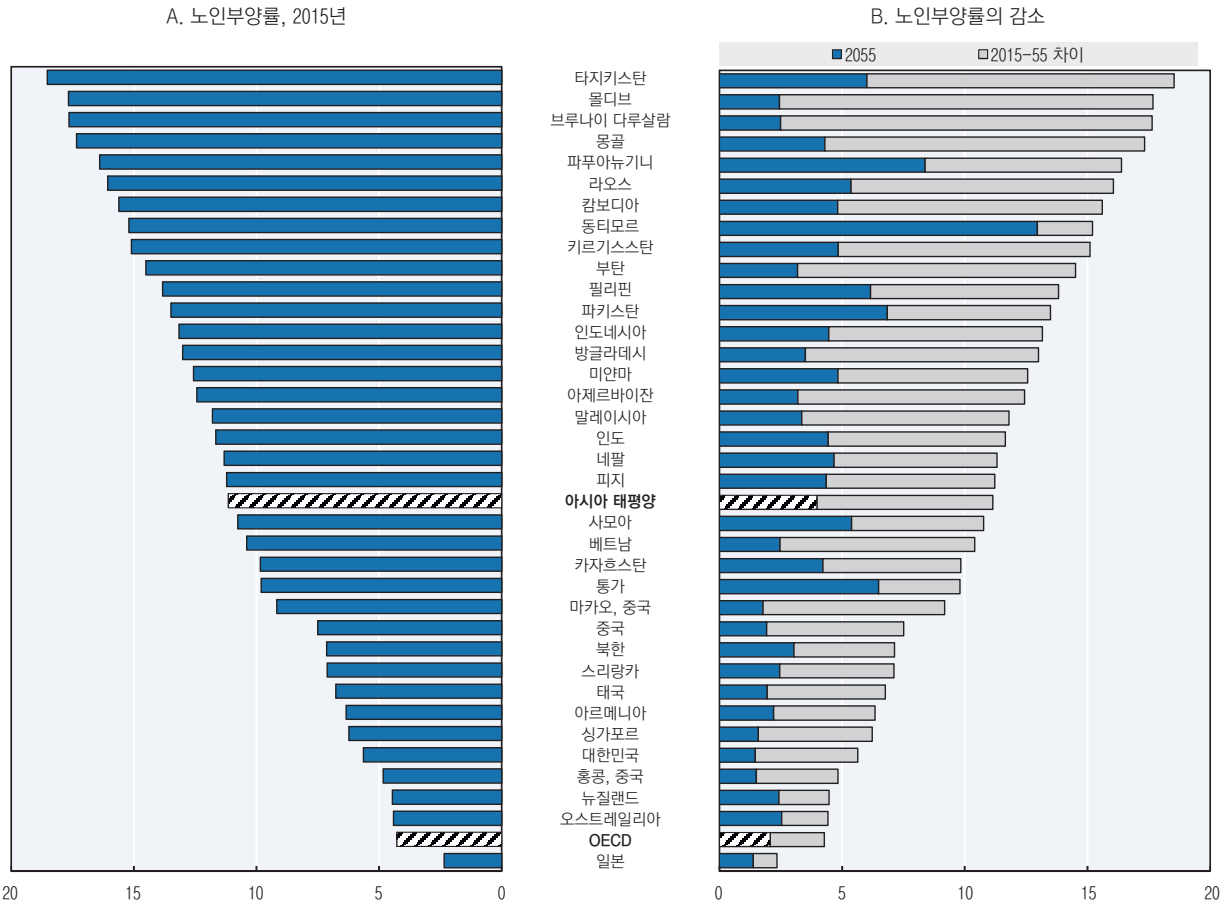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 경제활동인구가 비활동인구에게 직접적으로는 가족 부양 매커니즘을 통해 혹은 간접적으로 조세를 통해 의료, 교육, 연금 및 사회보장 보조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낮은 노인부양률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양 부담 가중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

데이터 및 측정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15세부터 64세 인구(경제활동 연령)의 비율에 해당한다. 모든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 1인당 경제활동인구(15-64)의 인원수로 표시한다. 따라서 노인부양률은 노인을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부양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노인부양률은 사망률과 출산율에 따라 결정되며 미미하지만 순 인구이동의 영향도 받는다.

자료는 UN의 세계인구 전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2015,*http://esa.un.org/wpp/unpp/panel_population.htm*)에서 입수하였다. 본 절에서 사용한 65세 인구에 대한 예측자료는 "중간 변량(median variant)" 인구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 3.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으며 노인부양률은 반감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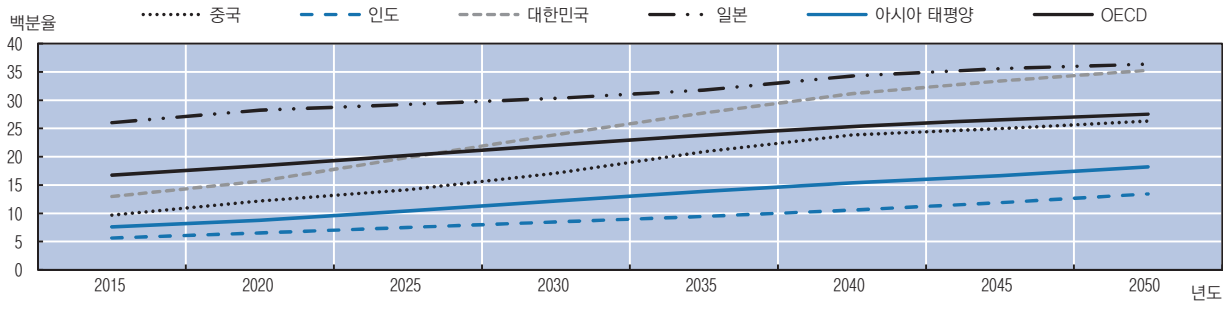


주석: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 1인당 15-64세 인구의 수로 정의된다.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964

그림 3.14. **연금수급자 수 전망**

선별된 국가들에 대한 2015-55 기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예측치



주석: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 1인당 15-64세 인구의 수로 정의된다.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899983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4 장

자급자족

경제활동 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 ····· 76
고용 ····· 78
유아교육 및 보육 ····· 80
교육 성과(Educational Attainment) 및 학생 성적 ····· 82
교육비 지출 ····· 84

경제활동 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

2017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60.7)은 그림 4.1과 같이 OECD 회원국(62.3)보다 다소 낮다. 중국, 카자흐스탄, 마카오, 뉴질랜드 및 베트남이 70% 이상으로 2017년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사모아, 스리랑카 및 동티모르는 55% 미만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별, 연령대별로 다양하다.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인구의 참가율과 거의 같은 반면, 청년 노동자의 참가율은 상당히 낮다. 2017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령 노동자(55-64세)의 참가율은 56%, 청년 노동자(15-24세)의 참가율은 41%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예외적으로 청년 노동자의 참가율이 고령 노동자의 참가율보다 높았다.

OECD의 예측에 따르면 5년 간격의 연령대별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준"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까지 거의 10%가 감소하며 2040년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도 2015년 이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2).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및 뉴질랜드는 향후 수십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가 기준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는 20%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격차를 2012년의 경제활동인구 성별격차 대비 25%까지 줄일 것을 공약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일부 국가, 특히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1억3천8백만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는 인도의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뉴질랜드**는 현재의 추세가 이미 기준 시나리오에 의한 목표인 "2025년까지 25% 감축"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 및 측정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기준 주간 동안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 15세 이상)의 규모에 대한 척도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규모를 제공한다. 자료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ILO의 노동시장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 KILM)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본 절에 제시된 경제활동 전망치(labor force projections)는 15-74세에 해당하는 인구 예측과 현재의 노동시장 진출입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성별과 5년 간격 연령대별로 미래 경제활동 참여를 예측하는 동적 연령-코호트 모델이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OECD 인구 통계자료와 고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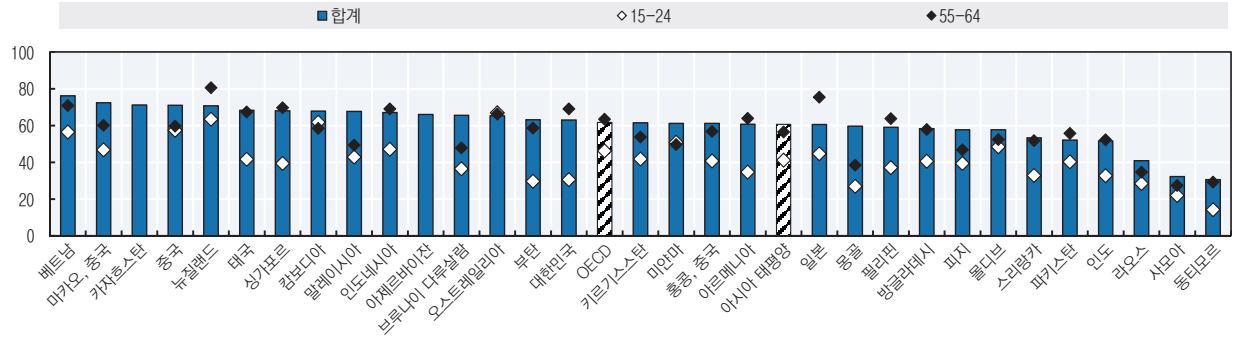
1. 기준: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여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를 상쇄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 시나리오는 고정된 경제활동 참가율 대신에 현재(2007-16)의 노동시장 진출입률을 사용하여 2040년까지의 성별과 5년 간격 연령대별 참가율을 예측한다.

2. 2025년까지 성별격차 25% 감소, 2040년까지 반감: 남성 참가율은 기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의 성별 참가율 격차가 2012년에 측정한 격차보다 25% 감소하고 2050년에는 2012년의 격차에 비해 50% 감소하는 여성 참가율을 예측한다.

3. 성별 격차가 2025년까지 50% 감소, 2040년에 소멸: 남성 참가율은 기준치 수준을 유지하고 2025년의 성별 참가율 격차가 2012년에 측정한 격차보다 50% 감소하고 2040년에는 완전히 소멸하는 여성 참가율을 예측한다.

그림 4.1.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별, 연령대별로 다양하다.**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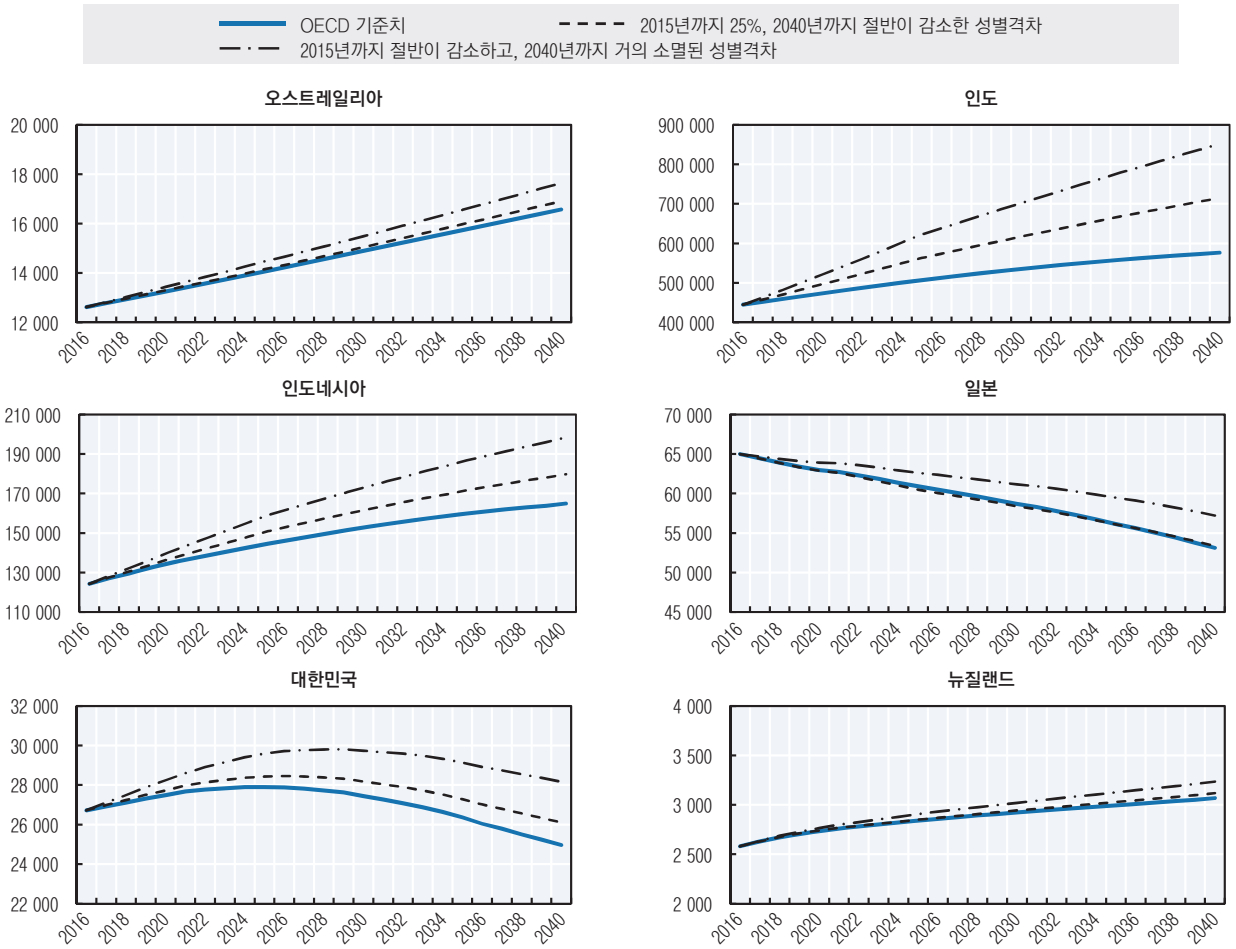


출처: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and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02

그림 4.2. **선별된 국가들에 대한 2016-40 기간의 경제활동인구 예측**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15-74세 인구의 규모 (천명)



주석: 경제활동인구 예측은 5년 간격 연령대로 구분한 15-64세 인구의 예측치 및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제활동 참여관련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출처: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OECD population data and the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21

고용

고용은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2017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고용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은 58.2%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4.3). 네팔과 베트남은 15세 인구 4명 중 3명이 **고용되어** 있는 반면 라오스, 사모아 및 동티모르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고용되어 있는 등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07년에 비해 고용률이 증가한 국가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의 회복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스리랑카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4%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높은 **고용증가**를 기록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저소득 국가 국민들에 비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 4.4). 브루나이 다루살람, 홍콩 및 싱가포르는 전체 고용인구의 80%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과 네팔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는 67%로 전체 고용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는 **비공식 고용**이 만연되어 있다(그림 4.5).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동티모르는 비농업 부문 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노동자 6명 중 1명만이 비공식 고용에 관련되어 있다. 비공식 고용에서 성별 격차는 미미하다. 대한민국, 라오스 및 네팔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같은 구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은 남성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정의 및 측정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 중에서 고용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료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ILO의 노동시장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 KILM) 데이터베이스 및 4개 OECD 회원국에 대한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경제활동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ISIC 개정4판)에 근거하고 있다. 자료는 국제노동기구 세계 고용 및 사회전망 – 추세 2018(ILO's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2018)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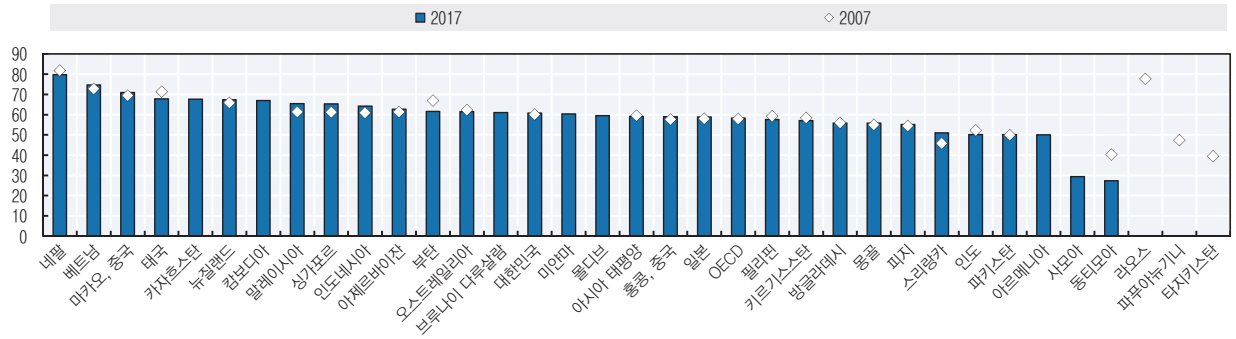
비공식 고용은 기업의 성격에 의해 정의된다. 직종이 비공식 부문의 성격을 지닌 자영 노동자와 고용주는 비공식적 고용상태(informal employment status)에 놓여있다. 비공식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노동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비공식 고용으로 분류된다. 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부문 종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 종사자들은 비공식 고용상태로 분류된다(ILO 2018).

그림에 대한 주석

ILO (2018),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third edition), Geneva, *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626831/lang--en/index.htm*.

그림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15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고용되어 있다.**

2007년 및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고용된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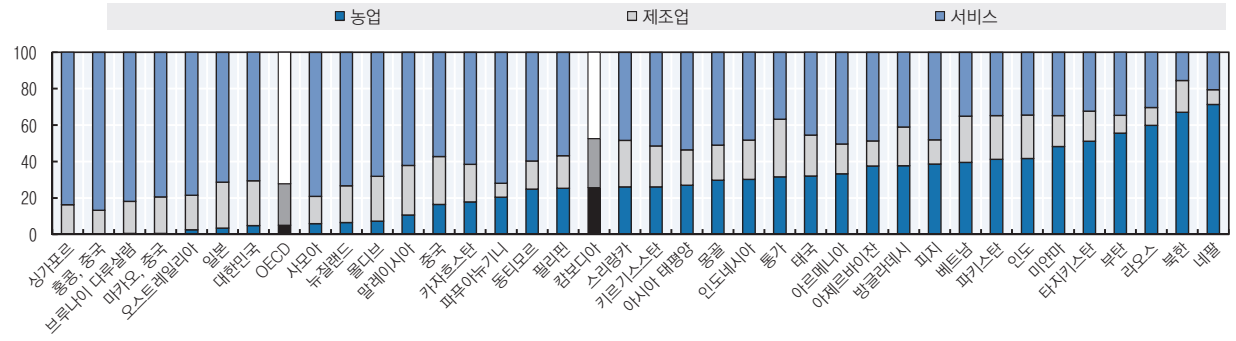


출처: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Database (ILO 2018) and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40

그림 4.4. **고소득 국가 국민들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ILO 모델로 추정한 2017년 부문별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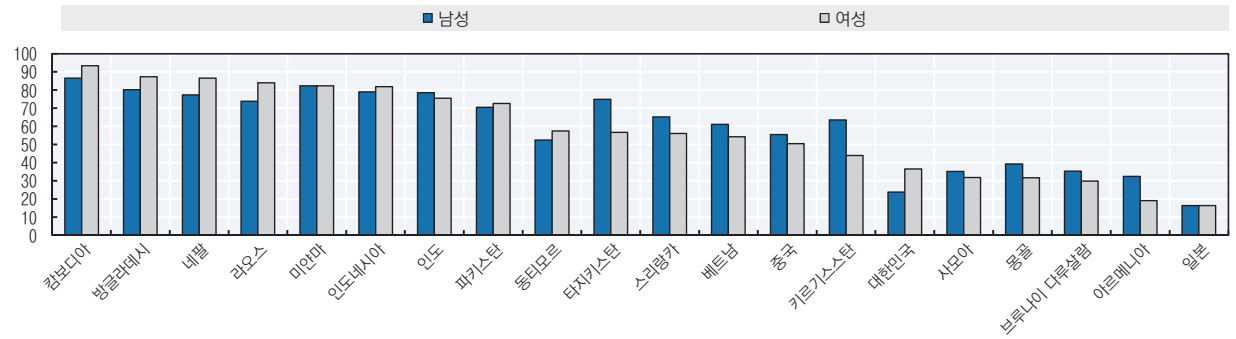


출처: ILO's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ILO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59

그림 4.5.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비공식 고용이 만연하다.**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전체 고용과 비농업 부문 고용의 성별 비공식 고용 비율(%)



출처: A statistical picture. Third edition (ILO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78

유아교육 및 보육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원은 일련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ECEC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동시에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습득을 지원하며 또한 일상에서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육아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따라서 고용의 양성 평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취학 전 교육(종종 3-5세 아동에 해당) **참여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그림 4.6). **2007-17년의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취학 전 교육 참가율은 2000년대에 이미 높은 참가율을 보인 OECD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및 사모아의 취학 전 교육 참가율은 3배 증가하였으며, 미얀마, 몽골 및 필리핀에서는 2배 증가하였다. ECEC 참여의 **성별 격차**는 미미하다(그림 4.7).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사모아의 여아는 남아에 비해 더 많은 ECEC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마카오, 중국, 네팔 및 파키스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ECEC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결과를 보면 취학 전 교육을 받은 15세 학생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학생에 비해 PISA 시험성적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OECD, 2011).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2005년의 높은 취학 전 교육 참가율이 2015년의 OECD PISA 독해 및 수학 평가의 높은 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및 측정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참여 지표로 UNESCO 자료인 **취학 전 교육 순 등록율(net enrolment rate)**을 사용하였다. 순 등록율은 해당 수준에서 교육에 참여한 이론적인 연령집단 내의 총 학생수로서 해당 연령집단의 총인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전체에 대한 고용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표시한다. 따라서 취학 전 교육의 목표와 시기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ECEC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는 **15세 학생의 기술과 지식 평가**를 통하여 전세계 교육제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조사다. 자료는 OECD PISA 2015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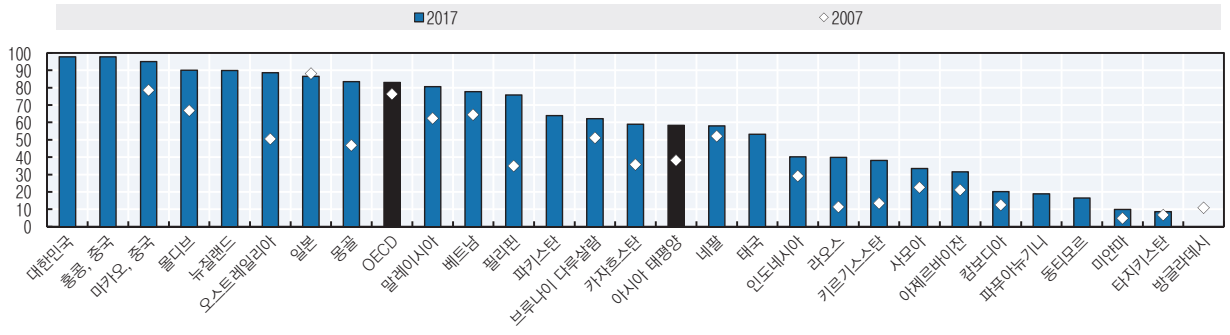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전체에 대한 고용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료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ILO의 노동시장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 KILM) 데이터베이스 및 4개 OECD 회원국에 대한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하였다.

추가 참고자료

OECD (2011), “Does participation in pre-primary education translate into better learning outcomes at school?”, *PISA in Focus, 1*,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www.oecd-ilibrary.org/education/does-participation-in-pre-primary-education-translate-intobetter-learning-outcomes-at-school_5k9h362tpvxp-en*.

그림 4.6.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취학 전 교육 등록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및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취학 전 교육 순 등록율(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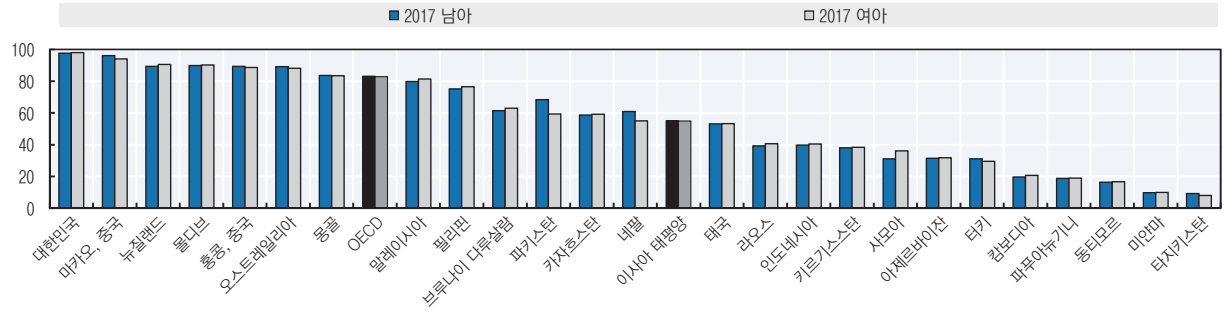


출처: UNESCO (2018), net enrolment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097

그림 4.7. **취학 전 교육의 성별 격차는 미미하다.**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남아와 여아의 취학 전 교육 순 등록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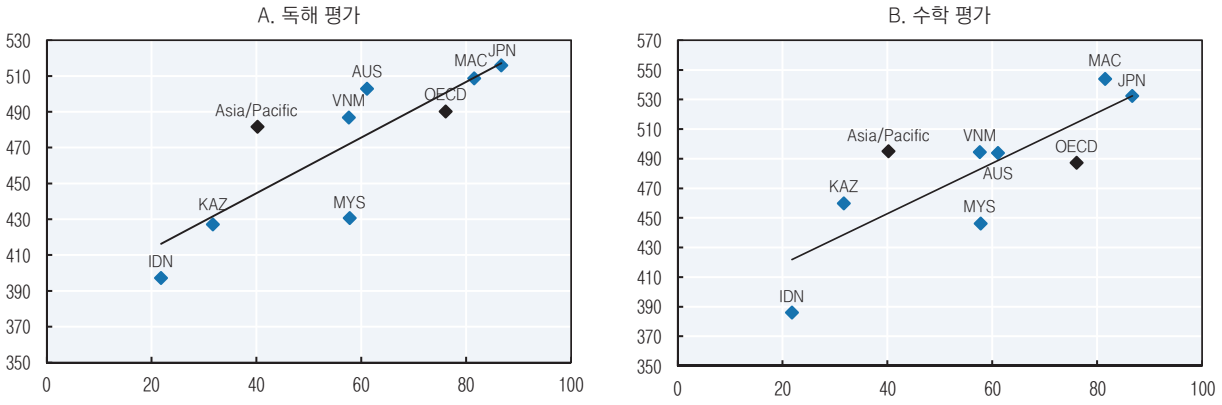


출처: UNESCO (2018), net enrolment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116

그림 4.8. **높은 취학 전 교육 등록율은 높은 PISA 점수와 관련이 있다.**

2005년 취학 전 교육 순 등록율(%), 전체 (X축) 및 2015년 평균 PISA 점수 (Y축)



출처: UNESCO (2018), net enrolment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the OECD PISA 2015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135

교육 성과(Educational Attainment) 및 학생 성적

인구의 **교육 수준은** 인적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도 높고 따라서 소득 창출능력이 높아진다. 생산가능인구의 취학년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간 교육 정도 측정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척도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1(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1)은 모든 남녀 아동이 공평하고 수준 높은 무료 초등 및 중등교육(12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세 이상 인구의 취학년수는 평균적으로 거의 9년에 이르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그림 4.9).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및 뉴질랜드의 25세 이상 인구의 취학년수는 더 높으며(12년), 부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네팔, 파푸아뉴기니 및 동티모르의 취학년수는 평균 5년 미만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OECD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세 이상 인구의 취학년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0). 특히 인도네시아, 몰디브, 네팔 및 싱가포르의 평균 교육 수준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 수준에는 성별 격차가 있으며** 남성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세 이상 남성의 취학년수는 여성에 비해 0.7년 더 많다. 평균 취학년수의 이러한 성별 격차는 부탄(2.1년), 인도(3.4년), 네팔(2.8년)에서 상당히 더 크다. 2005-2017년의 기간 동안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및 싱가포르는 평균 취학년수 성별 격차가 줄어든 반면,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및 스리랑카는 확대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교육에서의 성과 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levels)**은 OECD 회원국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와 중국 대도시 학생들의 2015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 및 독해 성적은 OECD 회원국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다(그림 4.11). 그러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및 태국 학생들의 성적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학생들의 성적과 비슷하였으나 OECD 평균성적에는 못 미쳤다.

정의 및 측정

평균 취학년수는 각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교육연한을 사용하여 교육 정도를 25세 이상의 사람들이 받은 교육의 평균년수로 환산한 것이다(UNDP 2018). 취학년수에 관한 자료는 UNESCO 통계국(2018), Barro and Lee(2016), ICF 거시 인구통계 및 보건조사, UNICEF 복수 지표 집단조사 및 OCED 교육 일람(2017)에 근거한 인간개발 지수 및 지표에서 추출하였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는 OECD PISA 2015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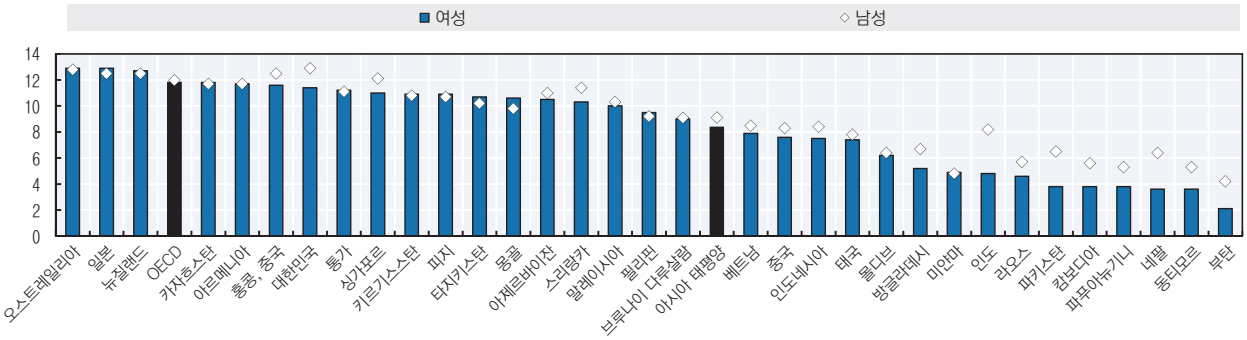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UNESCO(2017), Unpack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ducation 2030 Guide, Pari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63/246300E.pdf*.

UNDP(2018), Human Development Indices and Indicators 2018 Statistical Update, New York, United States,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 index-hdi*.

그림 4.9.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세 이상 인구의 취학년수는 평균 9년이다.**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취학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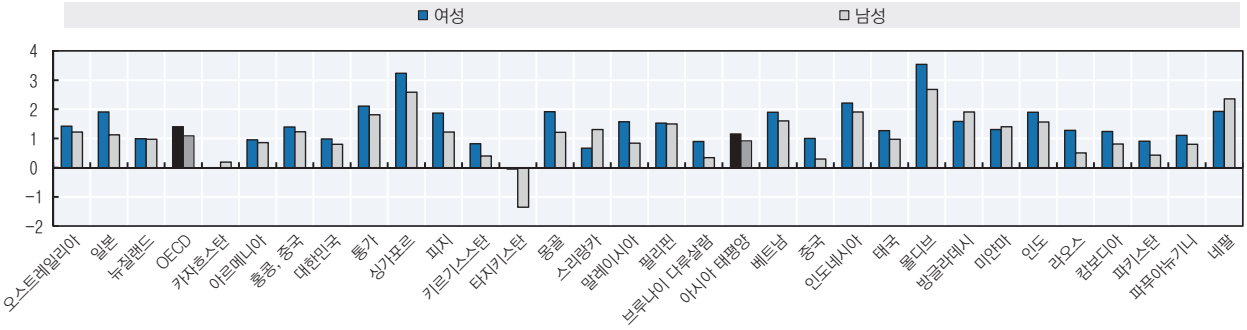


출처: UNDP (2018), Human Development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154

그림 4.10.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취학년수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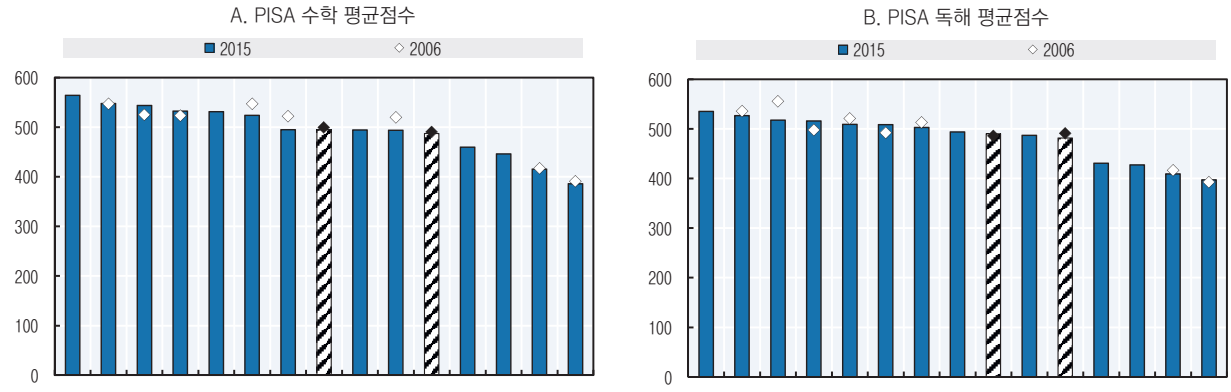
전체 평균 취학년수의 변화 (2005-17)



출처: UNDP (2018), Human Development data, Barro and Lee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173

그림 4.11.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부 도시의 학생들의 성적은 OECD 학생들을 능가한다.**



주석: B-S-J-G(중국)은 PISA에 참여한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 및 광동 지역을 지칭한다.
출처: OECD (2006, 2015),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192

교육비 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한 사회의 아동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아동에 대한 사회의 투자**에 해당한다. 교육 투자는 인적자본의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초기에 시작하여 아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과 편익 측면 및 인적자본의 개발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약 4%에 달한다(그림 4.12). 그러나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부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의 7%를 초과한다. 이에 반하여,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의 2% 미만에 불과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DP 대비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해 왔다. 이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과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4.12, 오른쪽 등급). 피지, 말레이시아 및 사모아의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 비율이 가장 크게(1 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부유한 국가의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 비율은 **빈곤한 국**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아니하다(그림 4.13).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몽골, 사모아 및 태국의 GDP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 비율은 서로 비슷하다(3장). 이러한 차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사교육비의 역할, 교육종사자의 임금 수준, 교재비용, 그리고 또한 인구구조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3장). 예를 들면, 몽골과 사모아의 전체 인구 대비 미성년자(0-19세)의 비율(각각 36% 및 48%)은 오스트레일리아(25%) 및 대한민국(20%)에 비해 훨씬 높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유한 OECD 회원국의 초등학생 1인당 평균 교육 공공지출은 더 높으며(그림 4.14)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네팔의 학생 1인당 교육 공공투자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네팔보다 GNP가 높은 캄보디아(KHM)보다는 여전히 높다(3장).

데이터 및 측정

GDP 대비 공공 교육비 지출에 관한 자료는 OECD 교육 일람 (2018) 및 아시아 태평양 에 대한 UNESCO 통계국의 자료(*http://stats.uis.unesco.org/unesco/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에서 추출하였다. 교육 공공지출에는 취학 전, 초등, 중등, 대학 및 대학 이전 단계를 포함한 고등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and tertiary education)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 저소득 부모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이 포함된다. 초등학생 1인당 공공지출(USD PPP 기준)에 관한 자료는 UNESCO 데이터 센터(*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191*)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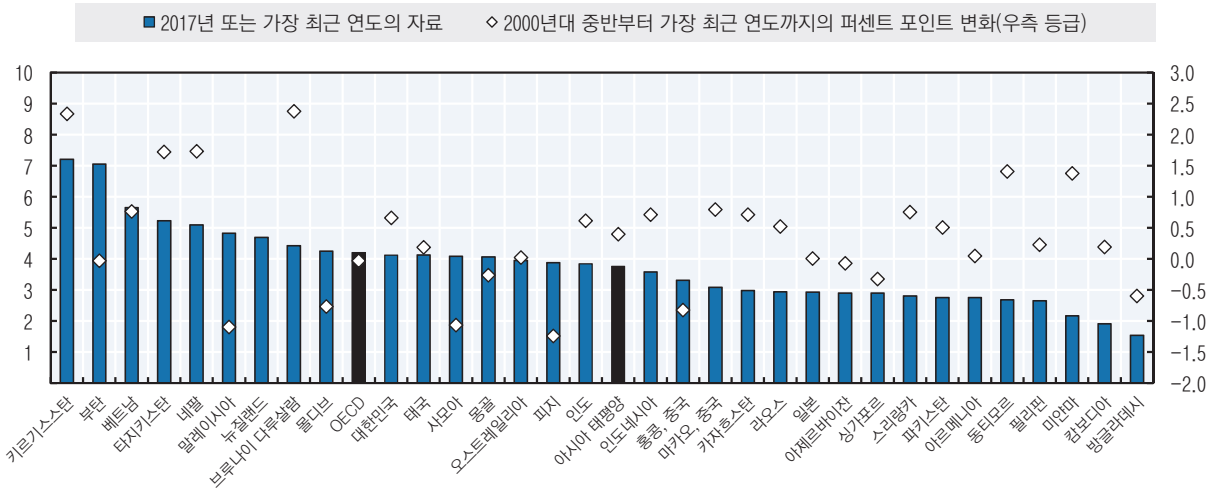
추가 참고자료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7Revision", *http://esa.un.org/wpp/unpp/panel_population.htm*.

그림 4.1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 공공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GDP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교육 공공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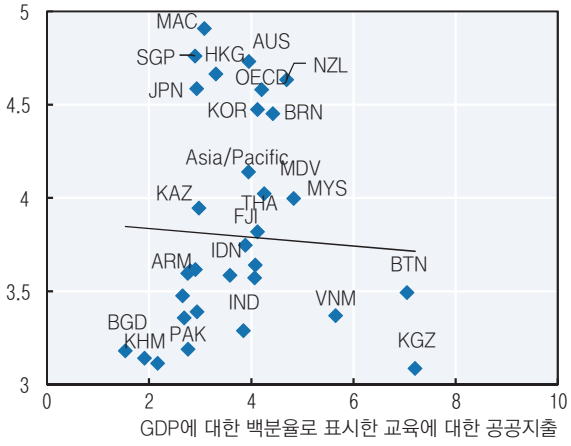
주석: 뉴질랜드에 대한 2000년대 중반부터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까지의 GDP 대비 교육지출 변동 자료는 입수할 수 없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Finance Indicators by ISCED level, http://stats.uis.unesco.org/unesco/TableViewer/tableView.aspx? ReportId=172,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finance indicator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211

그림 4.13. **부유한 국가들은 교육비 추가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1인당 GDP의 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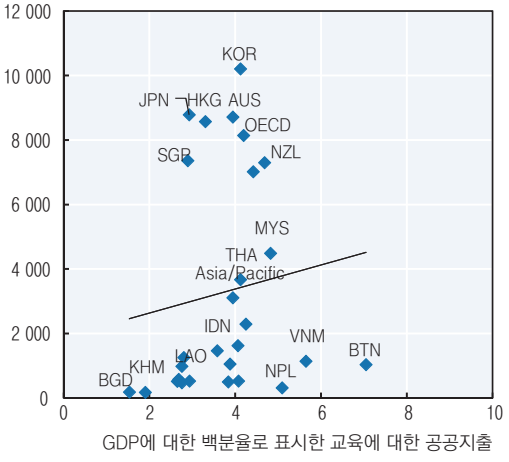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Finance Indicators by ISCED level, http://stats.uis.unesco.org/unesco/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72,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finance indicator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230

그림 4.14. **초등학생 1인당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

2017년 불변 PPP$ 또는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시한 초등학생 1인당 최초 정부 재정 지원액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Finance Indicators by ISCED level, http://stats.uis.unesco.org/unesco/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72,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finance indicator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249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5 장

형평성

빈곤 88
소득불평등 90
연금: 가입률 및 소득 대체율 92
공공복지지출 94
연대의식 96

빈곤

지난 10년 동안 **극빈곤 감소**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일 소득 1.9 미국달러 미만 극빈 인구의 비율은 6.0%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그림 5.1). 감소분의 대부분은 빈곤율이 16 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동티모를 및 베트남의 진전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20% 이상의 일일 소득이 1.9 미국달러 미만인 인도, 라오스 및 동티모르에서는 여전히 **극빈곤**이 **만연**되어 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 중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스리랑카 및 태국의 빈곤 수준이 가장 낮아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1%에 못 미친다.

빈곤율은 영양을 포함한 생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에 대한 척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영양결핍**의 만연은 1.9 미국달러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그림 5.2). 그러나 스리랑카와 타지키스탄에는 주어진 빈곤율에서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영양결핍이 만연되어 있다.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및 동티모르 역시 영양결핍 수준이 매우 높다. 이러한 국가들은 식량확보와 관련된 사회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빈곤**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그림 5.3). 2006-16년의 기간 동안 부탄, 중국 및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속도가 모두 빨랐다. 이에 반하여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빈곤선 미만 인구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하여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정의 및 측정

빈곤율은 흔히 소득 또는 소비 수준으로 측정한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의 인원수에 해당한다. 극빈은 2011년 구매력평가 가격(World Bank 2018)으로 측정된 1인당 하루 생계비가 1.9 미국달러 미만인 경우로 정의된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은 203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지표는 또한 음식 섭취량이 식이 에너지 필요량을 지속적으로 충족시기기에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영양결핍으로도 칭하는 최소 식이 에너지 소비수준에 미달하는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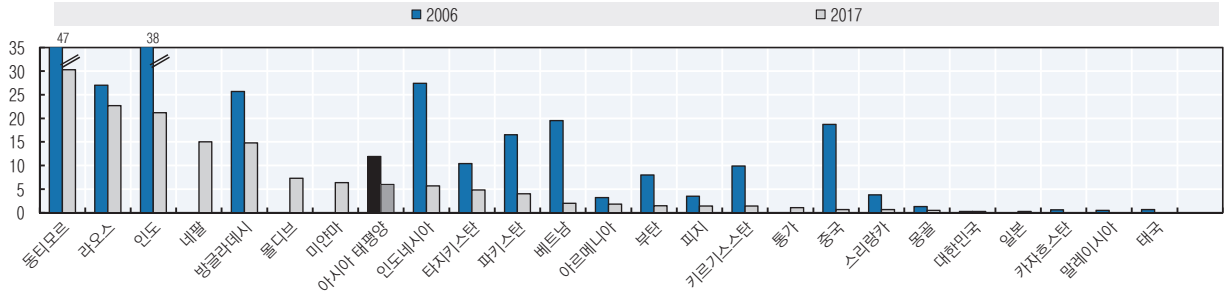
1인당 GDP는 해당 국가의 미국달러(USD)로 표시된 GDP를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실질 연간 평균 성장률은 해당 기간(2006-16년) 결합 연간 성장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추가 참고자료

World Bank (2018),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18: Piecing Together the Poverty Puzzle, Washington, DC, World Bank.

그림 5.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극빈 인구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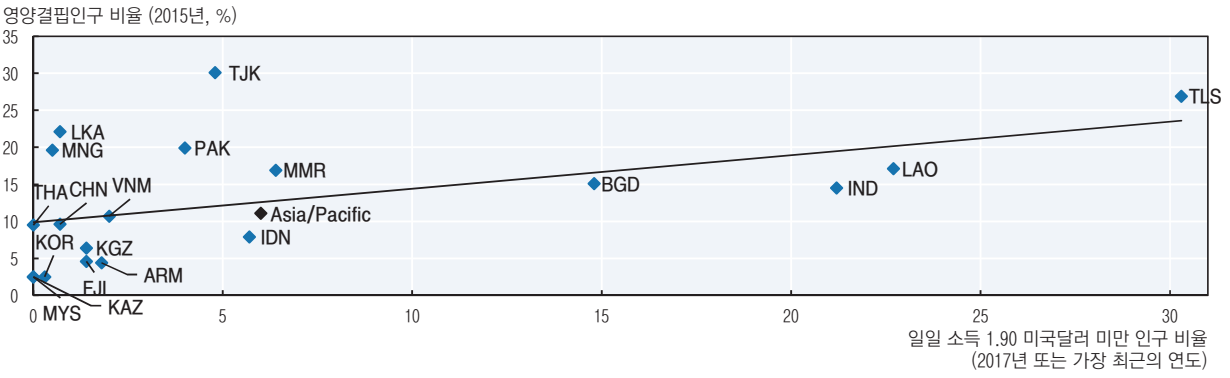
2006년 및 20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일일 생계비 1.9 미국달러 미만 인구의 백분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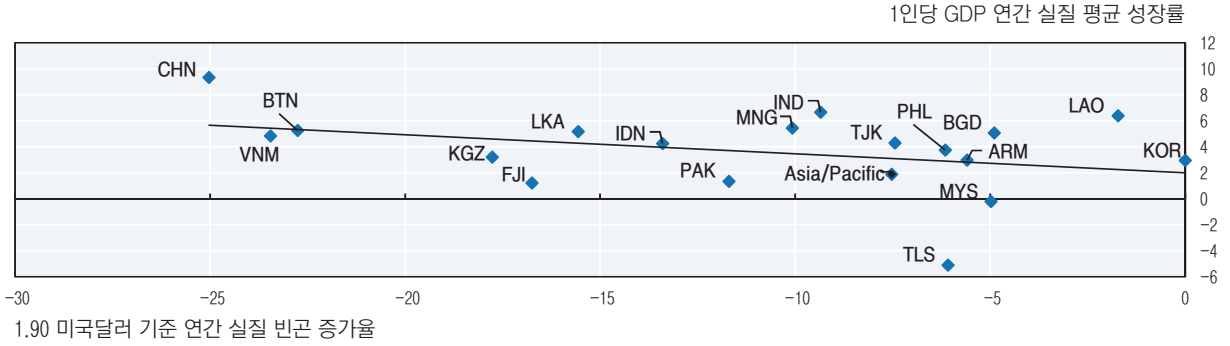
그림 5.2. **극빈 생활 인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영양결핍 정도도 낮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287

그림 5.3.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빈곤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306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은 주요 **자원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낸다.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은 갈등을 유발하고 협력을 저해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생성하여 결국 육체적 질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한다. 종종 정책의 주안점을 불평등의 수준보다는 불평등의 방향 변경에 두는 경우가 많다.

측정과 관련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보다 높다(그림 5.4). 2016년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는 0.40 이상으로 약 0.25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비해 소득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2)보다 높은 0.35를 유지하였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지, 키르기스스탄, 몽골 및 태국은 소득불평등이 감소하였으며 아르메니아와 스리랑카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 중 가장 부유한 계층 10% 인구와 가장 빈곤한 계층 10% 인구의 평균 소득 및 소비 격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5.5). 말레이시아의 격차가 가장 크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지난 10년간 부탄, 중국, 피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및 태국의 격차는 줄었으며, 아르메니아, 라오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및 베트남의 격차는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평등-성장 조합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통된 견해, 강도, 심지어 징후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에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변화간의 국가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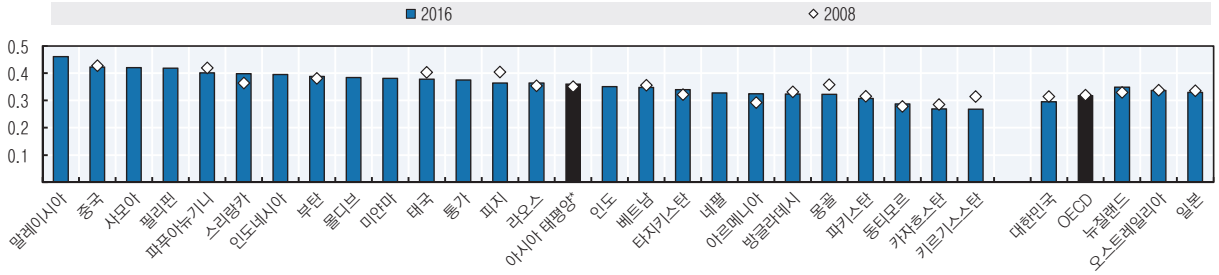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되는 주요 지표는 지니 계수다. 지니 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각자의 소득이 동일함)을 표시하는 0에서 "완전한 불평등"(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귀속됨)을 표시하는 1사이에 분포한다.

이 지표는 가장 부유한 계층 10% 인구와 가장 빈곤한 계층 10% 평균소득과 소비의 격차에 해당하는 S90/S10 소득 10분위수 비율이다.

OECD는 소득을 기초로 불평등을 측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 농업 또는 임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자료가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불평등 척도는 비용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기반 척도에 의한 불평등 수준은 소득기반 척도에 의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국가간 비교 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자료는 World Bank 개발연구그룹(*http://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OECD 회원국들의 자료는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구할 수 있는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그림 5.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보다 높다.**

2008년 및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지니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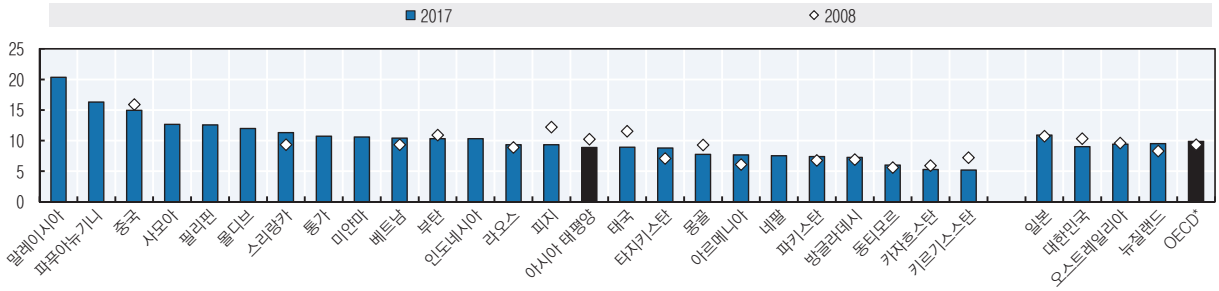
주석: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에는 해당지역의 OECD 회원국인 4개국의 자료는 제외되어 있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for OECD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325

그림 5.5.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S90/S10 소득비율은 하락하였다.**

2008년 및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S90/S10 계급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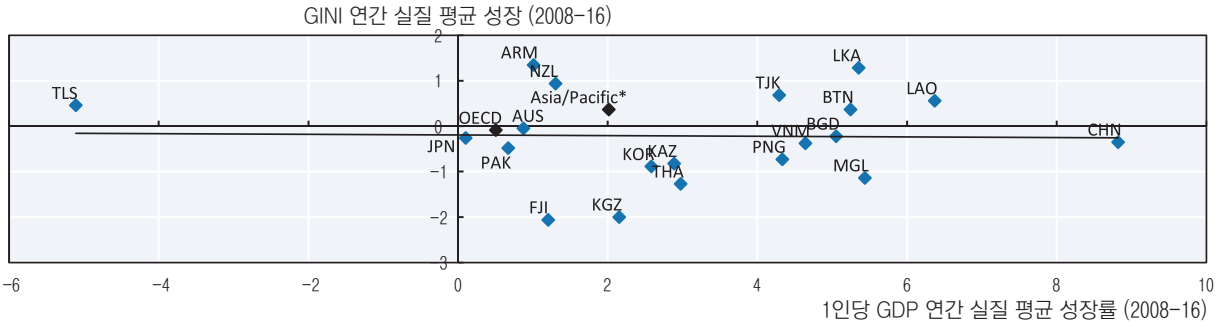


주석: OECD 평균에는 콜롬비아의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for OECD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344

그림 5.6.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하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for OECD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363

연금: 가입률 및 소득 대체율

연금 가입률과 근로기간 소득대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측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금가입률**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그림 5.7).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노동인구의 90% 이상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인구 3명 중 1명, 생산가능인구 4명 중 1명이 의무적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OECD의 경우에는 각각 83% 및 63%가 가입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령자는 OECD 회원국의 고령자에 비해 가족의 부양에 더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할 위험이 더 높다.

선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절반에서 연금제도의 **재분배 속성(redistributive nature)**으로 인해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노령자의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의 대체율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하여 소득불평등이 "연금불평등"으로"변형"된다.

여성의 대체율은 예외 없이 낮거나 높더라도 남성의 대체율과 같은 경우가 많다(그림 5.8).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대체율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OECD 비회원국 대부분은 여성의 대체율이 남성의 대체율에 못 미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은퇴시기가 빨라서 연금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수명을 적용하는 DC 제도를 채용한 국가의 경우 (연금 수급개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년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도별로 감소한다. 저조한 연금가입률과 함께 성별에 따른 연금 격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령인구의 미래 복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다.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은 **연금가입률**도 낮다(그림 5.9). 비공식 경제가 만연된 저소득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무적 연금제도에 가입할 여력이 없거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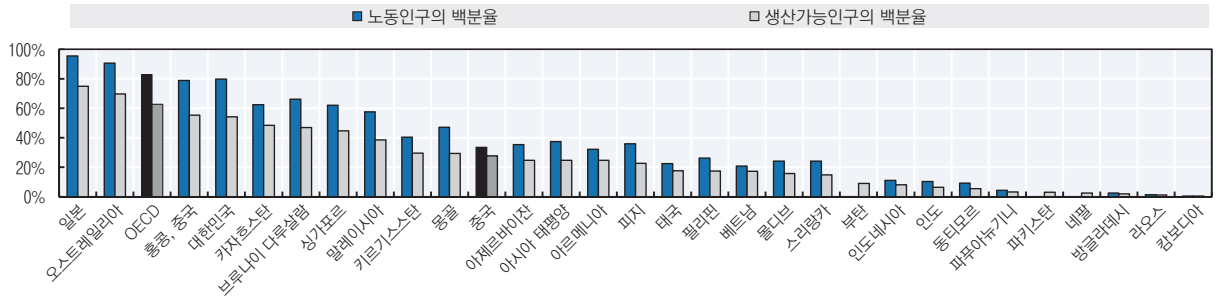
정의 및 측정

연금가입률은 의무적 연금제도에 가입된 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며, i)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와 ii) 활동적인 노동인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가입률은 해당 연도의 의무적 연금제도 가입자로 분류된 인구 또는 노동인구의 비율로 표시한다.

대체율은 종종 은퇴직전의 최종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로 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는 개인의 재평가된 일생 평균소득(경제 전체의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재평가)에 대한 연금액(pension benefit)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재평가된 일생 평균소득은 개인의 최종소득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5.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연금가입률은 격차가 크다.**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의무적 연금제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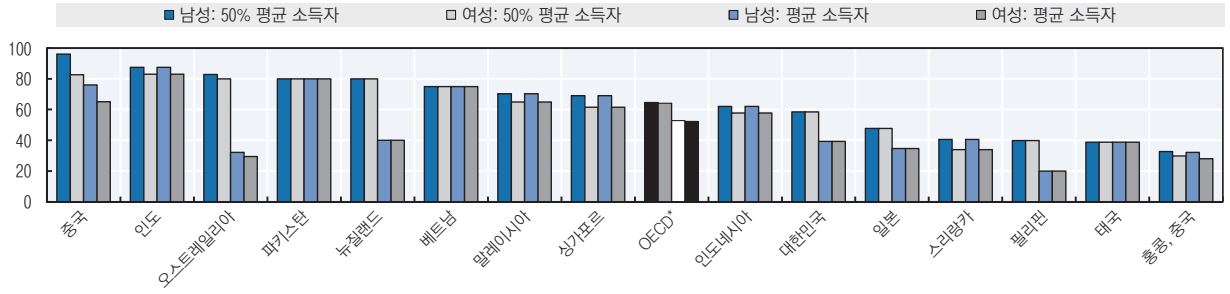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18), *Pension beneficiaries coverage 3Q2014*, www.worldbank.org/en/topic/socialprotection/brief/pensions-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382

그림 5.8. **여성의 대체율은 남성보다 낮거나 기껏해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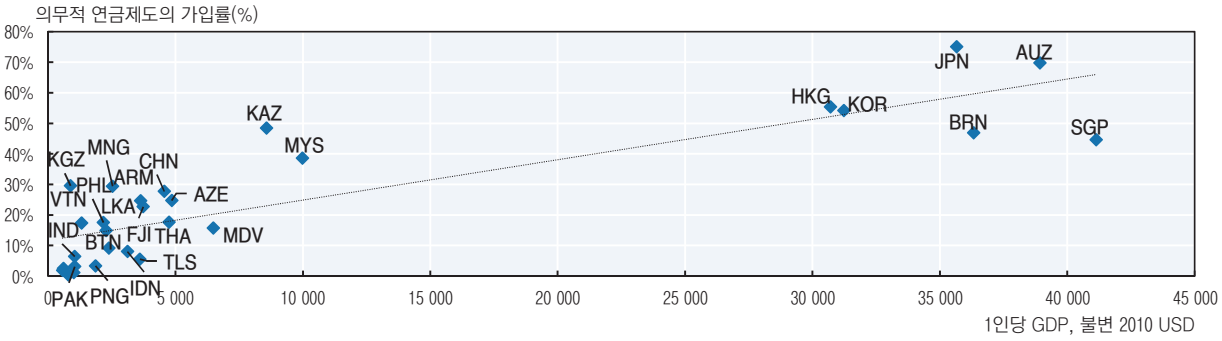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의무적 연금제도의 총 대체율



주석: OECD 평균에는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출처: *OECD Pension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01

그림 5.9. **1인당 GDP가 낮을 국가일수록 연금가입률도 낮다.**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20

공공복지지출

2015년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다(그림 5.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사회보장지출은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일본,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공복지지출은 GDP의 20%에 근접하며, 대한민국과 몽골은 약 10% 수준이다. 이에 비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복지지출은 GDP의 약 2%에 불과하다.

복지지출의 구성 또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5.11). 평균적으로 사회보험 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보건지출이 3분의 1, 공공부조 지출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구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으며(그림 3.5 참고), 이는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이 된다(연금: 가입률 및 소득대체율 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대부분에서 **사회보험**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공 및 공식부문에 한정적으로 제공되며 과거에 연금제도에 분담금을 납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대규모의 비공식 노동자 및/또는 자영업자와 고령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빈곤층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말레이시아는 보고된 사회보장지출의 65%를 사회보험(연금 포함)에 지출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와 동티모르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노령, 아동복지, 장애, 복지지원금 포함)는 보고된 사회보장지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얀마, 부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및 라오스는 복지지출의 3분의 2를 보건지출이 차지하는 반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보건지출 규모가 복지지출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보고된 사회보장지출의 약 15%를 ALMP가 차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그림 5.11).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절대빈곤율도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2). 이는 공공복지지출이 불이익(disadvantage) 해소와 형평성 개선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데이터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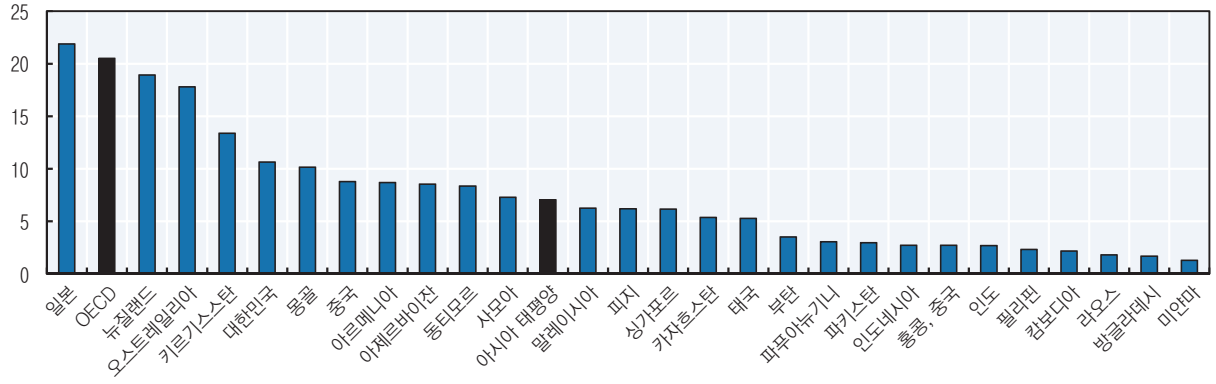
공공복지지출은 가계와 개인에 대한 현금, 현물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다. 복지지출의 요건을 갖추려면 강제 가입, 개인간의 자원의 재분배, 저소득, 노령, 실업 또는 장애 등의 한 두 개 이상의 비상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address one or more contingencies)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가(기업적인 활동을 제외한 고유한 정부 활동으로서) 자금흐름을 통제하는 경우의 복지지출은 공공성을 띠게 된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관련 자료는 OECD 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OCX)에서 추출하였다. 그림 5.8에 표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은 일부 보건자료가 제외된 아시아개발은행의 사회보장지표에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한 일반정부의 보건지출을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OECD 회원국의 자료는 OECD 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에서 추출하였다. 카자흐스탄, 홍콩, 중국 및 인도의 자료는 ILO 2017-2019 사회보장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출 영역(social domain)으로 간주되지 않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측정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 사회보장지출의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지역/지방의 복지지출은 국가전체의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에만 의존하면 복지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ADB, ILO 및 OECD의 복지지출 자료의 범위는 대상국가, 정책분야의 측면에서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국제기구에 보고된 복지지출의 전체(지역) 지표들은 서로 상이하다. 빈곤에 대한 자료는 빈곤 지표를 참고한다.

그림 5.10.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2015/17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GDP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공공 사회보장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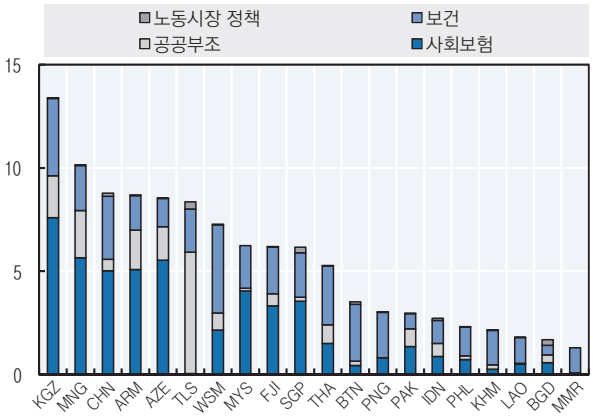


출처: OECD estimates based on ADB (2019), "The Social Protection Indicator: Results for Asia in 2015 (*http://spi.adb.org/spidmz/index.jsp –http://spi.adb.org/*);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http://apps.who.int/nha/database/ViewData/Indicators/en*; ILO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19, *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Theme.action?th.themeId=398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39

그림 5.11. **복지지출의 구성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정책분야별 공공복지지출 (GDP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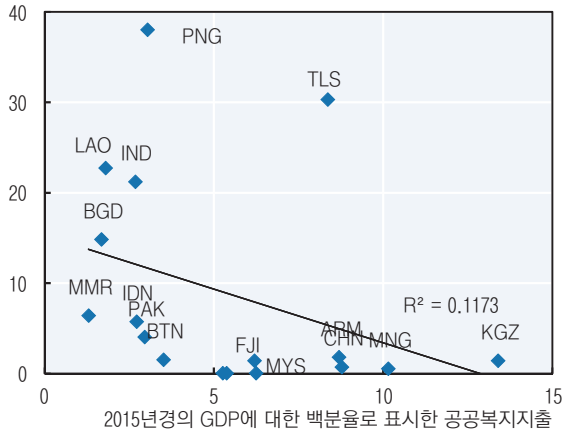


출처: See Figure 5.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58

그림 5.12. **공공복지지출과 빈곤**

2017년 또는 최근 연도의 일일소득 1.9 미국달러 미만 인구의 비율



출처: See Figure 5.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77

연대의식

자선단체에의 기부, 자원봉사 또는 낯선 사람을 돕는 것 모두는 타인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며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관찰된 국가들간의 차이는 소득수준의 차이로 어느 정도까지 해명할 수 있지만 국가, 사회 및 가족의 지원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전통 또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국민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국민들보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그림 5.13).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선단체 기부건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은 다소 줄어들었다(그림 5.13).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일본 국민들에 비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가능성이 두 배가 높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민들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기부가능성이 최근에 들어 증가하였다.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낯선 사람을 돕거나 조직 또는 자선단체에 봉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 회원국의 **낯선 사람을 도운** 사람들의 비율이 미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5.14). 지난 10년간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 행위는 파키스탄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국민들이 곤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OECD 회원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히 안정되어 있다 (그림 5.15).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이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였다. 2015-17년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2006-08년 이래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및 중국에서 자선사업에 봉사를 한 사람들은 인구의 10%에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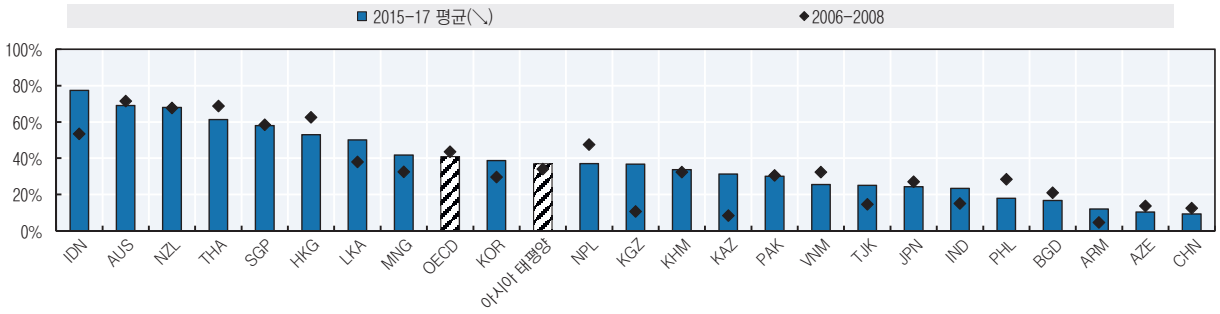
데이터 및 측정

"연대의식"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 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연대의식 지표의 기반을 이루는 자료는 갤럽이 개발한 다음과 같은 이원적인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신은 지난 달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이나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서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부한 금액이나 자원봉사를 한 시간에 대한 질문은 없다.

그림 5.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선기부 경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달에 자선단체에 금전적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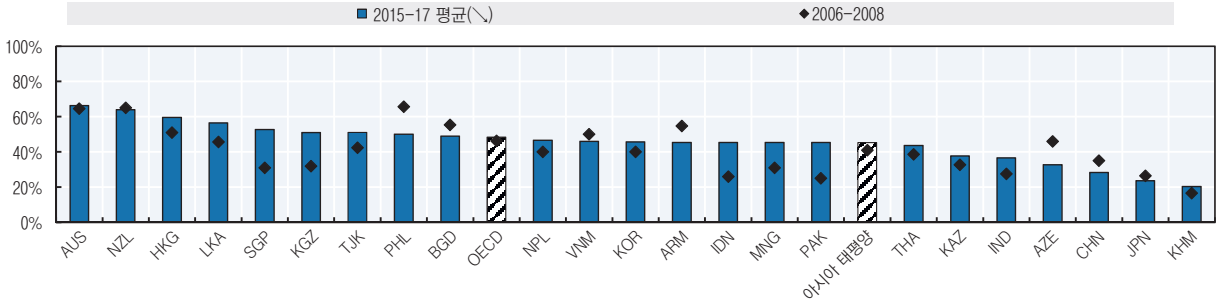


주석: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2006-08년 및 2015-17년 기간 사이의 퍼센트 포인트 변동 자료는 입수할 수 없다.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496

그림 5.1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낯선 사람을 도운 사람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지난 달에 곤경에 처한 낯선 사람 또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도운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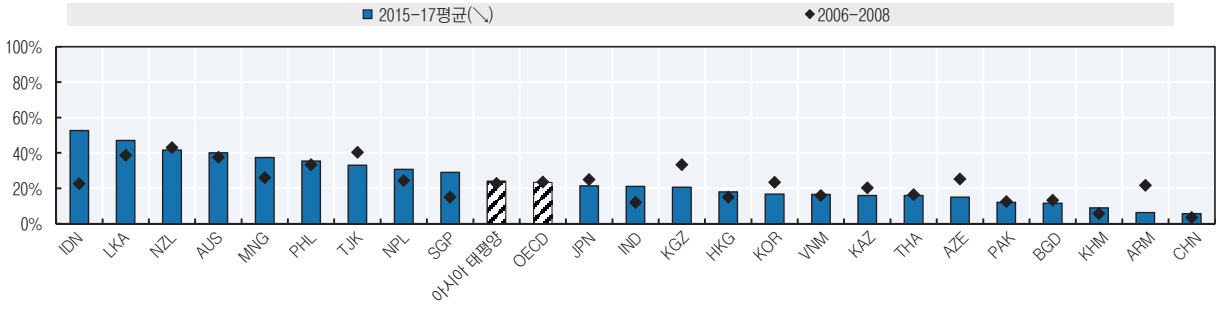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515

그림 5.15. **OECD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이 단체에 자원봉사를 한다.**

지난 달에 단체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비율(%)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534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6 장

보건

기대수명 100
영유아 사망률 102
아동 영양실조(영양결핍 및 비만 포함) 104
보건지출 106
의료기관의 활동 108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보건상태의 일반적인 척도이며 종종 한 국가의 보건 발전의 측정에 사용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적 **기대수명**은 2000년 69.4세에서 2016년 74.2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6.1). 2000년 이후 캄보디아(11.7년), 라오스와 네팔(7.7)의 기대수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의 개선, 수질과 위생상태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몇 가지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은 여전히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다(유엔 세계인구전망 자료, 2017).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대수명의 **국가별 차이**는 크다. 동아시아의 기대수명은 80세 이상인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필리핀)과 도서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피지의 기대수명은 70세 이하에 머물고 있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수명**은 남성보다 5년 이상 더 **길다.** 중국, 피지와 몽골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7년 이상 수명이 긴 반면, 브루나이 다루살람과 파키스탄 여성의 수명은 남성의 수명보다 1년 또는 2년이 길다. 남성의 기대수명이 81세인 홍콩과 일본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86세로 가장 높다.

아시아에서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홍콩, 대한민국, 마카오,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그림 6.2) 인구의 90%가 65세에 도달한다. 몽골과 미얀마 남성, 파푸아뉴기니의 남성과 여성이 65세에 이르는 비율은 여성이 70%, 남성이 60%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로 측정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기대수명도 높지만** 항상 그렇지는 아니하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6,300 미국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지만 **평균적으로 86세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여명을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77,400 미국달러인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기대수명은 평균 76세에 불과하다(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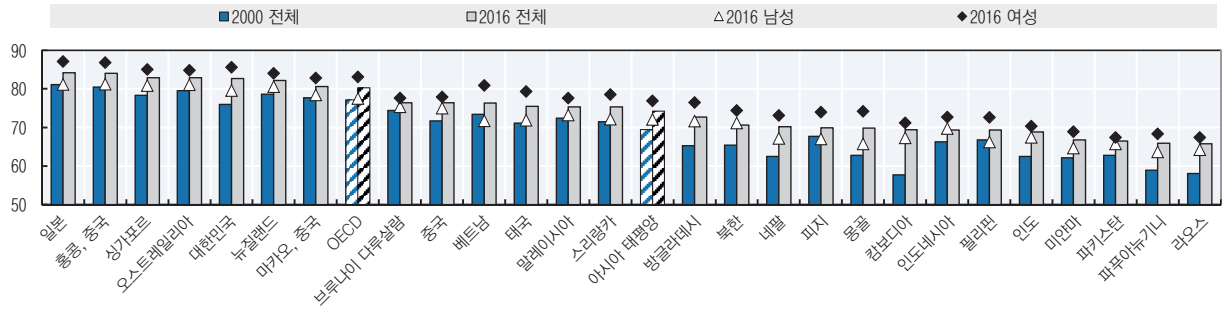
정의 및 측정

기대수명은 출생시의 사망률 양태가 평생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신생아가 평균 몇 년 동안 생존할 것인지를 측정한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쉽게 변하지 아니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각국이 기대수명을 계산하는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중 일부 기간에 대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사망신고가 아니라 인구조사에서 추출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기대수명을 계산하는 국가들도 있다.

65세 생존율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 유지를 전제로 하여 계산한 65세까지 생존한 신생아 집단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그림 6.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0년과 2016년의 성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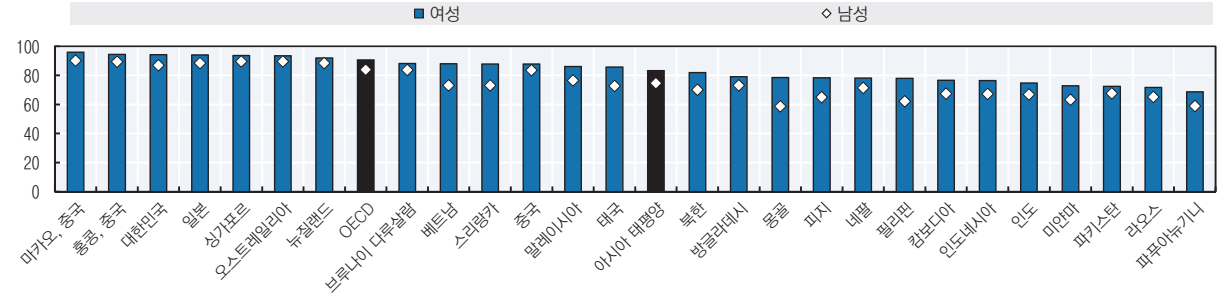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WHO;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553

그림 6.2. **아시아 지역에서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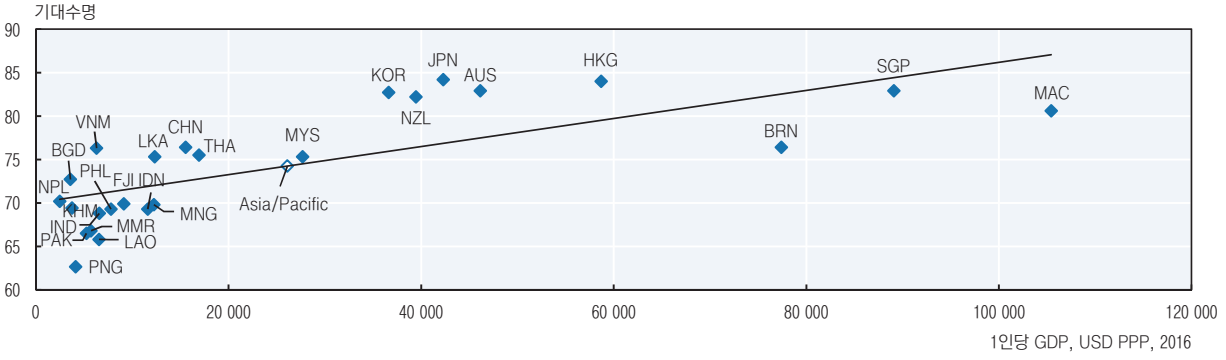
2016년의 성별 65세 생존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572

그림 6.3.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로 측정된)은 일반적으로 높은 기대수명과 관련이 있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591

영유아 사망률

1세 미만의 영아사망률은 **모자보건**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조건의 영향과 보건체계의 유효성을 반영한다.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아동보건**과 전체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과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5세 미만 사망률을 출생아 1000명 당 최소한 25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다(United Nations 2015).

2000-16년의 기간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아사망률**은 거의 **반감**하였으나,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은 종종 OECD 평균(4.0)보다 낮은 최저 수준의 영아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마카오, 홍콩, 일본 및 싱가포르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약 2명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6.4). 이에 비해,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및 동티모르 등의 저소득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40명이 넘는다.

선별된 국가들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교육 정도**와 **소득**이 낮은 산모의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6.5). 선별된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추세는 거의 비슷하지만 산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아사망률 격차(2011-12)는 라오스가 가장 컸다. 저소득 가계의 영아사망률은 95명, 고소득 가계는 27명이었으며, 교육 정도가 낮은 산모의 영아사망률은 96명, 고학력 산모는 32명이었고, 농촌지역 산모는 85명, 도시지역 산모는 39명이었다.

유아사망률은 2000-16년의 기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3분의 1이 2030년까지 유아사망률을 출생아 1000명 당 최소한 25명 이하로 낮추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6.6). 지난 15년간 유아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및 파푸아뉴기니의 유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50명이 넘는다. 지난 15년간 유아사망률의 성별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통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아의 5세 미만 사망률이 여아보다 높다.

정의 및 측정

영아사망률은 1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특정 연도의 영아의 수로 정의되며 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 수로 표시한다. 유아사망률(또는 5세미만 사망률 under-five mortality rate U5MR)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 유지를 전제로 하여 특정 연도의 출생아 1000명 중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인원수로 표시된 사망확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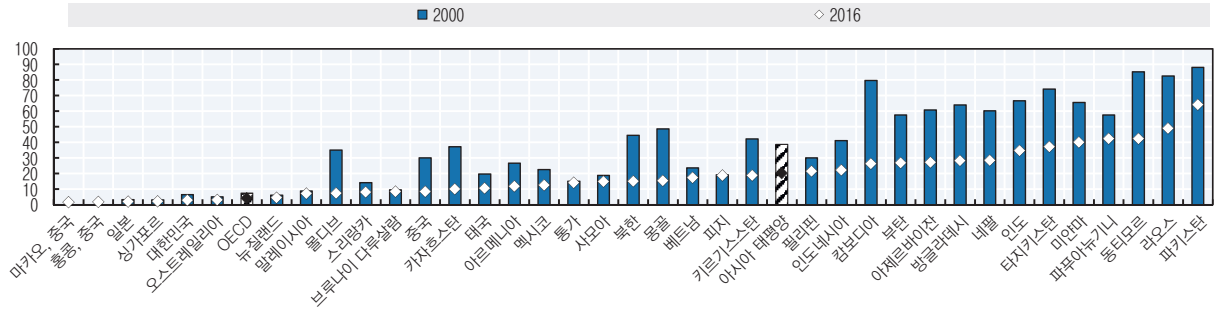
정확하고 완전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 기록이 아니라 인구조사 및 표본 등록 시스템에서 추출한 추정치를 토대로 영아사망률을 계산하는 국가들도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미숙아 등록 관습도 국제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추가 참고자료

The UN inter-agency Group (UNICEF, WHO, World Bank Group, United Nations)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2017), "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www.unicef.org/publications/index_101071.html*.

그림 6.4.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영아사망률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 및 2016년의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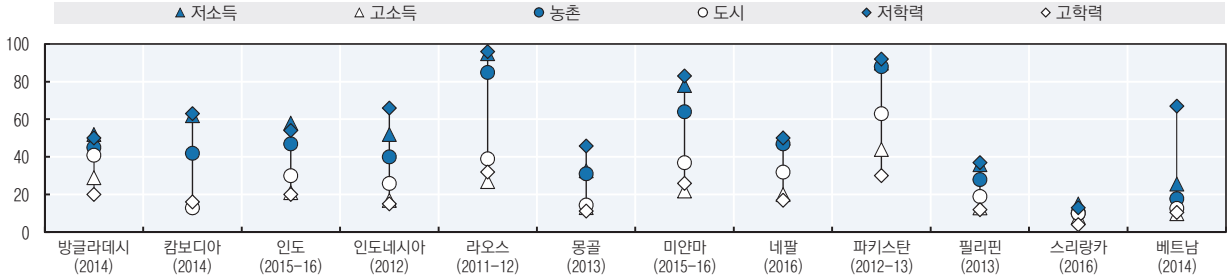


출처: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IGME) Child Mortality Report 2017; Hong Kong annual digest of statistics2017; Macau yearbook of Statistics,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610

그림 6.5.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교육 정도가 낮고 자산이 적은 산모의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다.

선별된 국가와 연도에 대한 자산, 거주지역 및 산모의 교육 정도에 따른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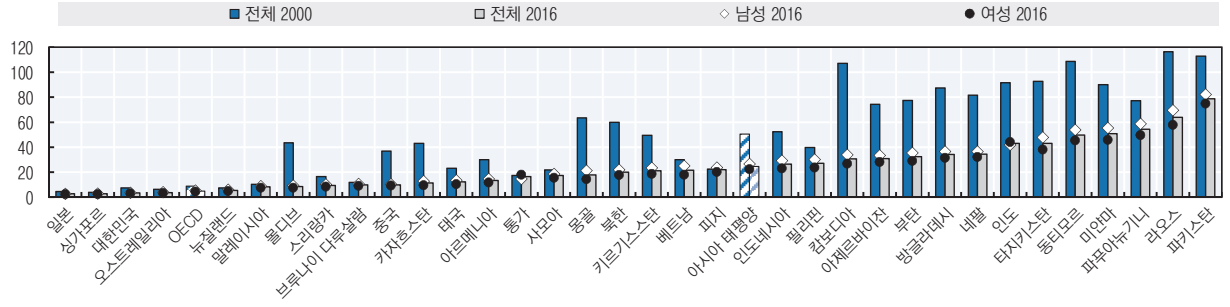


출처: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a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012-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629

그림 6.6. 2000년 이후 유아사망률은 24.6명으로 줄었으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2006년 및 2016년의 출생아 1000명당 성별 유아(5세 미만) 사망률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IGME) Child Mortality Report 201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648

아동 영양실조(영양결핍 및 비만 포함)

국가의 발전은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최상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높은 음식 및 균형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많다. 태아 또는 유아기의 영양부족은 나이에 비해 키가 지나치게 작아지는 **왜소화**의 원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마른 **소모성질환** 또한 부실한 식사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다. 왜소화와 소모성질환은 종종 평생 동안 지속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교육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UNICEF/WHO/World Bank Group 2018). 다른 한편에서는 신장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과체중 또는 비만**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건강을 해치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더 크다. UN SDG 목표 2.2는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왜소화 및 소모성질환 억제 목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하고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아동들 사이에 왜소화 및 소모성질환이 널리 퍼져 있는 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16년의 기간 동안 왜소화(나이에 비해 작은 키) 및 소모성질환(키에 비해 가벼운 체중)의 비율은 각각 33%에서 24%로, 9%에서 7%로 감소하였다(그림 6.7). 왜소화 비율은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가 50%로 가장 높고, 아르메니아,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사모아 및 통가는 10% 미만이다. 소모성질환 비율은 방글라데시, 인도, 파푸아뉴기니 및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다. 지난 16년 동안 5세 미만 아동의 소모성질환은 파푸아뉴기니(10 퍼센트 포인트), 인도네시아(8 퍼센트 포인트) 및 인도(4 퍼센트 포인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아동 사망률도 높다.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거의 절반이 영양결핍에 기인하였다(UNICEF, WHO, World Bank Group, United Nations 2017; 본 장의 지표 "영유아 사망률" 참고).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세계의 과체중 아동은 3천1백만명에서 3천8백만명으로 늘어났다.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몽골, 파푸아뉴기니 및 통가는 10% 이상인 반면, 북한과 네팔의 비율은 미미하다(그림 6.9). 2000-16년의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및 파푸아뉴기니의 5세 미만 과체중 아동 비율은 7 퍼센트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은 약 2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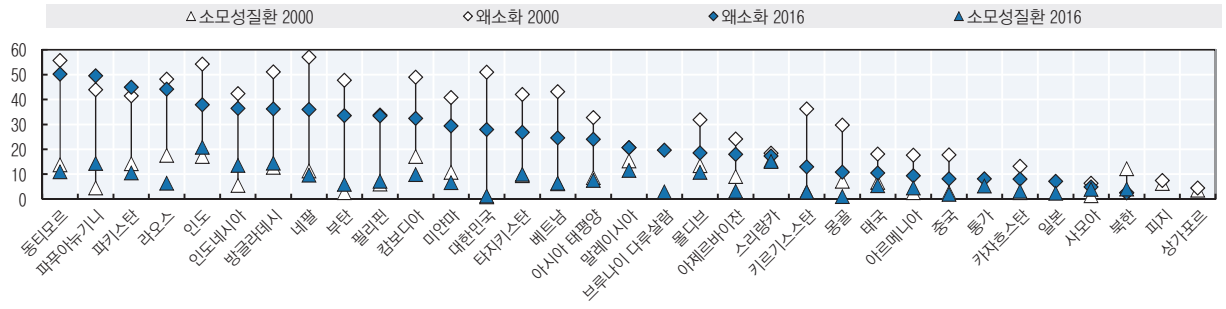
WHO는 아동 왜소화를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에 2 표준편차 이상 미달하는 나이 기준 신장으로 정의한다. WHO는 소모성질환을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에 2 표준편차 이상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WHO는 아동 과체중을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을 2 표준편차 이상 초과하는 신장 기준 체중으로 정의한다. WHO는 아동 비만을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을 3 표준편차 이상 초과하는 신장 기준 체중으로 정의한다.

추가 참고자료

UNICEF/WHO/World Bank Group (2018), 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 Key findings of the 2018 edition.

그림 6.7.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많은 국가들의 아동들 간에 왜소화와 소모성질환이 만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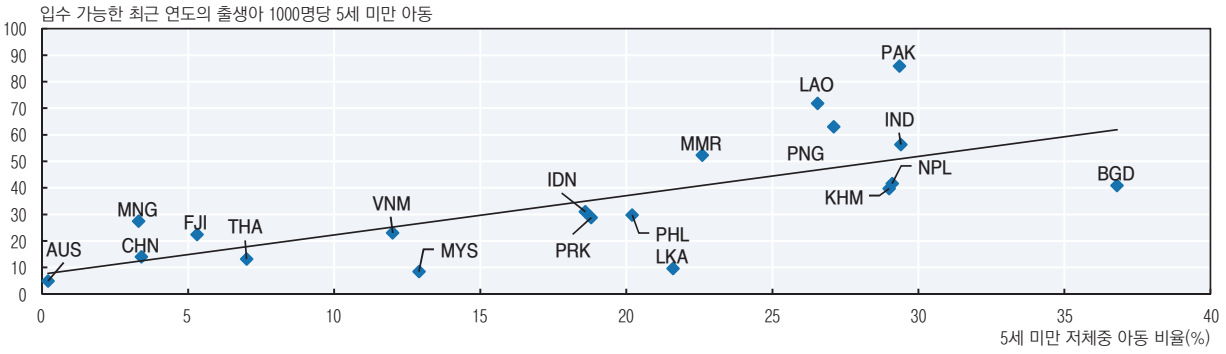
2006년 및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5세 미만 아동 발병률 (%)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667

그림 6.8.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유아사망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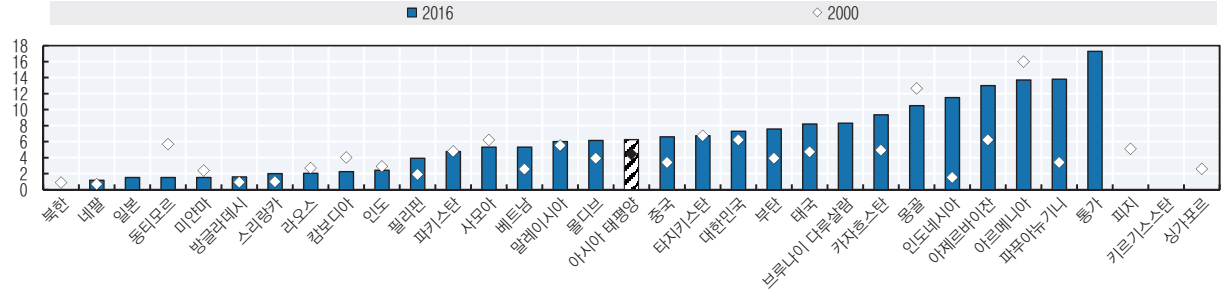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686

그림 6.9.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과체중 아동들이 증가하였다.**

2006년 및 2016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5세 미만 과체중 아동 비율 (%)



출처: *UNICEF, WHO, and World Bank's Joint global database on Child Malnutrition (2018),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set/malnutrition-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705

보건지출

보건을 위한 재무적 자원은 지리적으로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1인당 보건지출은 OECD 평균(USD 3,715, 2015)보다 높은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1인당 보건지출은 아시아 태평양 평균(USD 1,120)보다 낮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건지출의 3분의 2는 정부 재정 또는 의무보험제도에 의해 충당되며 나머지는 임의제도 또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으로 충당된다(그림 6.10). 2015년의 경우 브루나이 다루살람, 일본, 뉴질랜드 및 태국에서는 보건지출의 4분의 3이 공공지출로 충당된 반면, 1인당 GDP가 낮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및 네팔은 보건지출의 4분의 3을 민간이 부담하였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1인당 보건지출**은 증가하였다(그림 6.11).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2006-10년과 2011-15년 기간의 연간 실질 보건지출은 6%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의 연간 실질 보건지출 증가율은 4%에 못 미쳤다. 아르메니아와 미얀마의 2011-15년 기간의 연간 평균 보건지출 증가율은 가장 높은 30%를 기록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라오스, 네팔, 싱가포르 및 타지키스탄 역시 1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반하여 캄보디아, 뉴질랜드 및 사모아의 보건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3.7%)보다 낮게 증가하였다.

보건지출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공/민간 보건 재원조달 비율**(the public/private health financing ratio)은 안정되어 있다(그림 6.12). 2011-15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정부/강제보험제도에 의해 충당된 보건지출은 증가한 반면, 몽골과 베트남에서는 임의 의료보험 및 가계의 자기부담금으로 충당된 보건지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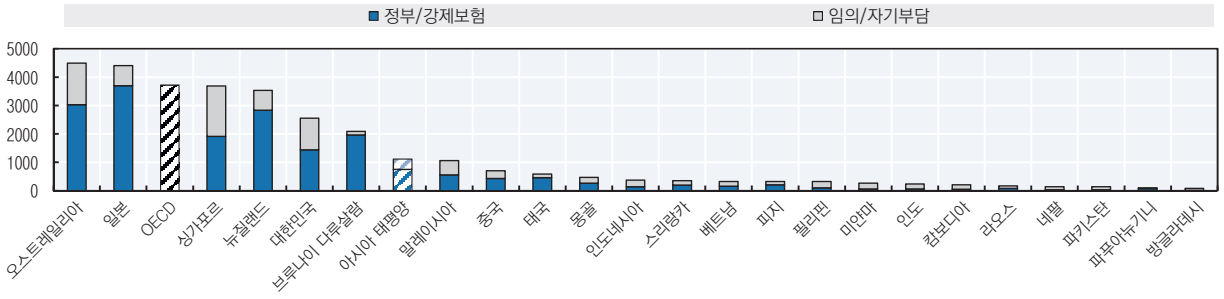
정의 및 측정

보건지출은 보건 관련 재화와 용역의 최종 소비량을 측정한다. 이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계획과 관리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며 자본 형성(투자)을 위한 지출은 제외된다. 국가별 지출 수준을 서로 비교할 때는 1인당 보건지출액을 공통 통화(미국달러)로 환산하고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료보호를 위한 재원조달은 자금의 원천(가계, 고용주 및 국가), 조달방안(강제 또는 임의 보험), 조달기관(조달방안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원조달"은 보건회계시스템(OECD/WHO/Eurostat, 2011)에 정의된 조달방안의 의미로 사용한다. 공공 재원조달에는 일반 정부 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된다. 민간 재원조달에는 가계의 자기부담금, 민간의료보험 및 기타 민간기금(NGO 및 민간기업)이 포함된다.

그림 6.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지출 총액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1인당 보건지출 (USD, PPP,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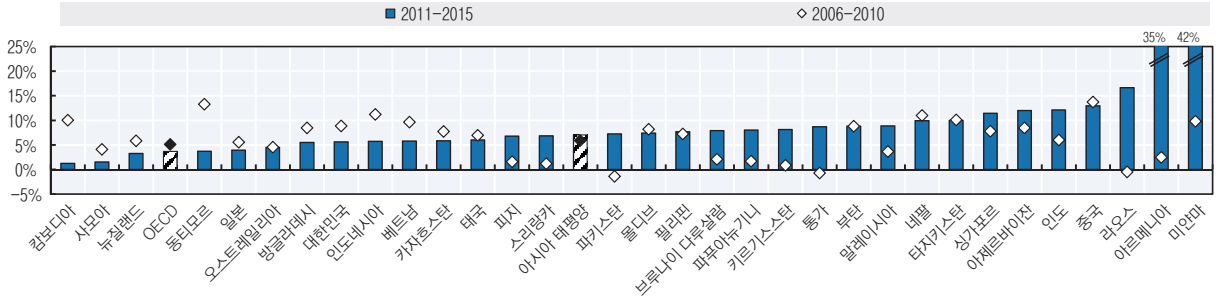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724

그림 6.11. **지난 10년 동안 1인당 보건지출 규모는 증가하였다.**

연간 1인당 실질 평균 보건지출 증가율 (USD, PPP, 2006-10년 및 2011-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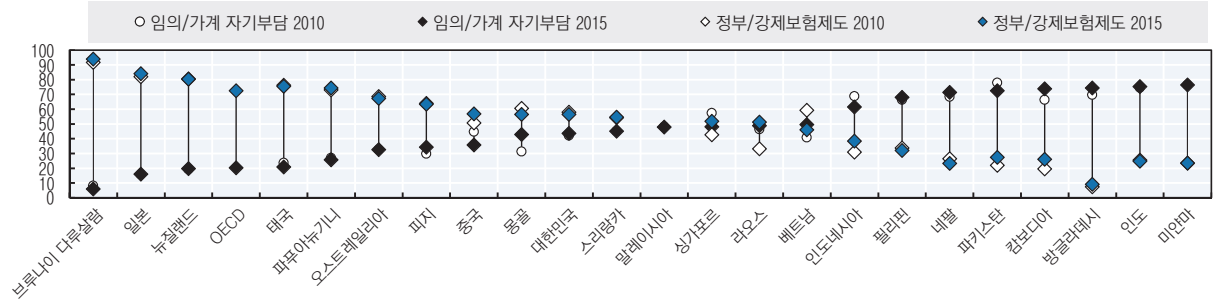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743

그림 6.12.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공/민간 보건지출 재원조달 비율은 안정적이다.**

2010년 및 2015년 보건지출의 정부/강제보험제도 및 임의/가계 자기부담 비율(%) 변동 내역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762

의료기관의 활동

병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고정된 보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병원의료에 대한 상호 협력적인 접근체계(coordinated access)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상 규모, 퇴원율 및 평균 입원일수는 사용 가능한 자원과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들 중에 해당한다.

병상확보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병상확보율이 가장 높다(그림 6.13). 한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및 필리핀의 병상확보율은 1000명당 1개에 못 미친다. 2005-15년의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OECD 회원국들의 병상확보율은 평균적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 네팔의 병상확보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과 대한민국은 증가하였다.

퇴원율의 경우 OECD 평균이 1000명당 156건인데 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은 1000명당 113건이다(그림 6.14). 스리랑카와 몽골의 퇴원율이 연간 1000명당 250건으로 가장 높다. 이에 반하여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네팔의 퇴원율은 인구 1000명당 25건에 못 미친다. 병상 규모와 입원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언제나 전체 인구의 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접근과 사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입원일수(Average Length of Stay - ALOS)도 사용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ALOS는 평균 6.4일로 OECD 평균인 7.8일에 비해 약간 낮다(그림 6.15). 일본과 대한민국의 ALOS가 16일로 가장 길며, 라오스가 2.5일, 스리랑카가 3일로 가장 짧다.

일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큰 국가들의 퇴원율이 높고 ALOS도 더 길다(그림 6.16).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상 규모가 가장 큰 일본과 대한민국의 퇴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병상 확보율이 평균 수준인 스리랑카의 퇴원율이 가장 높다.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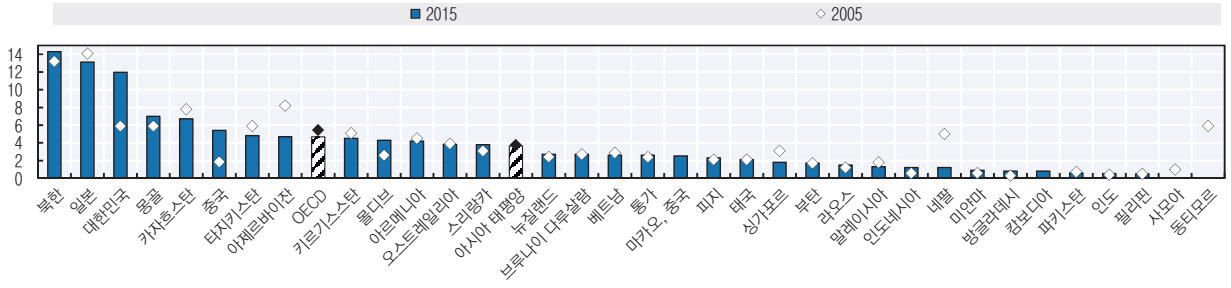
병상 규모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급성 환자 치료와 만성/장기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모두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ALOS는 급성환자 치료기관 환자의 총 입원일수를 연간 입원 또는 퇴원횟수로 나누어 측정한다. 평균입원일수(Average Length of Stay - ALOS)로 보고하는 수치는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기간에만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ALOS 보고 대상은 공공부문 기관에 한정되며 중국, 몽골 및 태국 같은 국가들만 ALOS 통계에 민간기관을 포함시킨다.

퇴원은 1박 이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입원환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에 제시된 퇴원율은 연령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국가별 인구의 연령 구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대부분 행정부서에서 입수하였다.

그림 6.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병상확보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2005년 및 2015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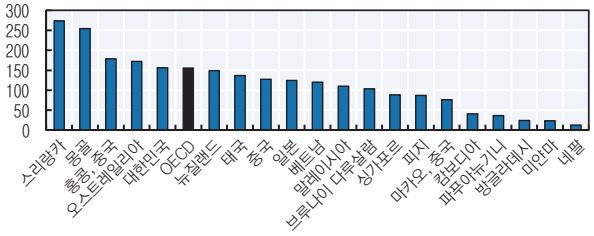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Data 2018;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781

그림 6.14. 퇴원율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의 인구 1000명당 퇴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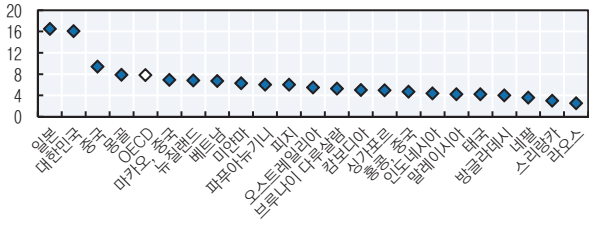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Data 2018;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00

그림 6.1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성환자치료 ALOS는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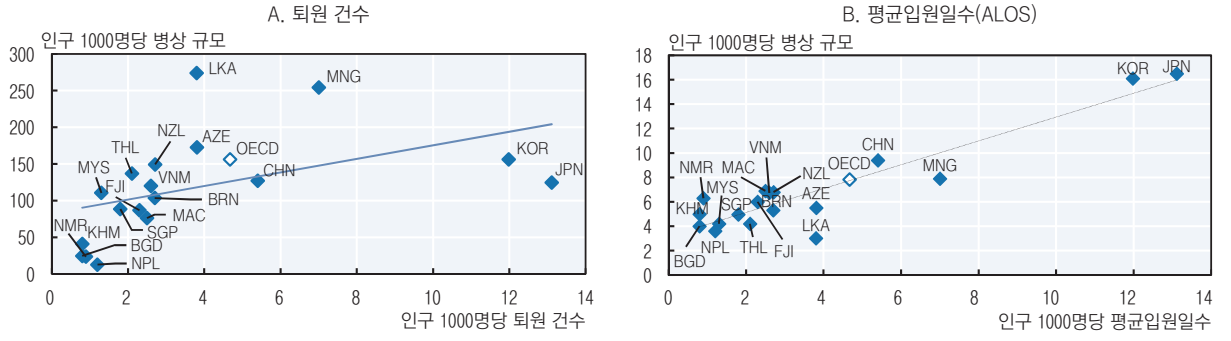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평균입원일수(ALOS) 최신 자료



출처: OECD Health Data 2018;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19

그림 6.16. 병상 규모가 큰 국가들일수록 퇴원율이 높고 ALOS가 긴 경향이 있다.



출처: OECD Health Data 2018;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201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38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9

7 장

사회적 응집성 지표

생활 만족도 112
공공기관 신뢰도 114
신뢰 및 안전 116
포용력 118
투표 120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생활 만족도는 원만한 가족관계, 건강, 생활환경, 부, 사회의 전반적인 관리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OECD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보다 높다(그림 7.1). 1부터 10까지의 등급에서 OECD 회원국들의 **생활 만족도** 점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점수보다 평균 1점이 더 높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10점 중 7점으로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및 인도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2015/17의 기간 동안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 회원국을 통틀어 생활 만족도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그림 7.1 오른쪽 등급). 추세 또한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인도와 캄보디아의 생활만족도는 낮지만 캄보디아는 개선된 반면, 인도는 더욱 하락하였다. 2006/08의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중 3분의 2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몽골, 타지키스탄 및 필리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 만족도 점수는 대체로 비슷하였다(그림 7.2). 인도와 아르메니아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및 싱가포르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남성에 비해서도 약간 더 높다.

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덜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그림 7.3).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나 만족도가 높은 태국의 경우가 있기는 하나, 부유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룹과 덜 부유한 인도와 캄보디아 그룹은 평균 생활 만족도가 번영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의 및 측정

생활 만족도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 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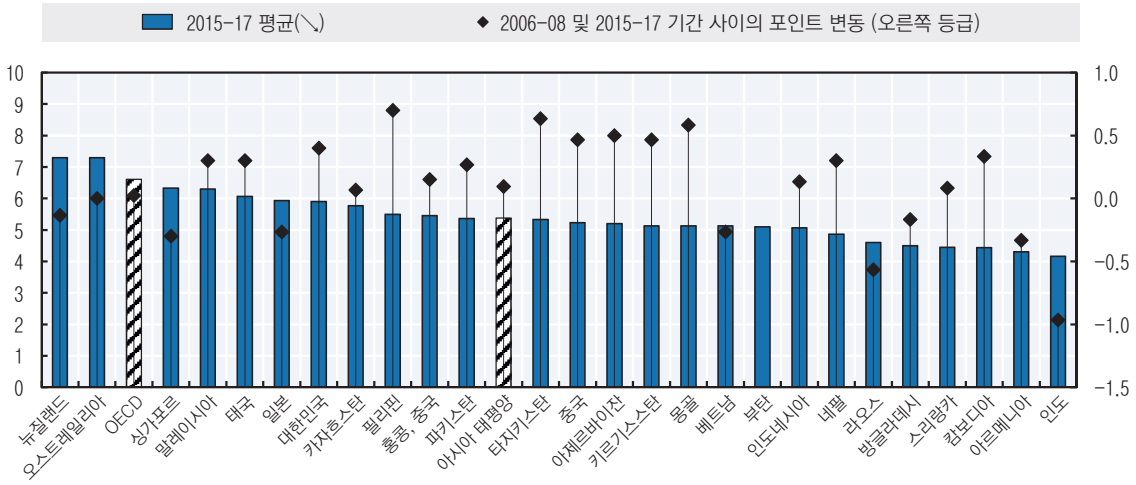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11개의 칸이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장 아래 칸(0)은 당신의 최악의 생활을 표시하고 가장 윗 칸(10)은 당신의 최선의 생활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현재 개인적으로 사다리의 어느 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절에 사용된 지표는 국가별 평균 점수다. 성별 및 연령대별 자료도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3의 1인당 GDP는 국내총생산을 한 해의 중간시점의 인구로 나눈 것이다. GDP는 한 경제의 모든 생산자가 부가한 가치총액에 제품에 부과된 조세를 가산하고 제품의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금을 차감한 것이다. GDP 계산에 있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자연자원의 고갈(depletion) 또는 질적인 저하(degradation)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림 7.1. **생활 만족도와 추세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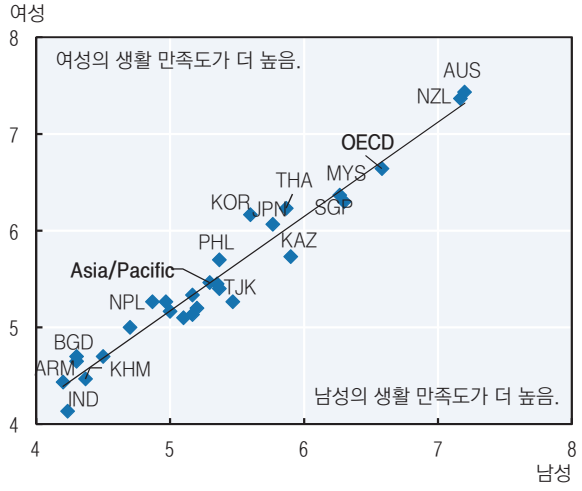
0-10 단계의 11칸 사다리에 의한 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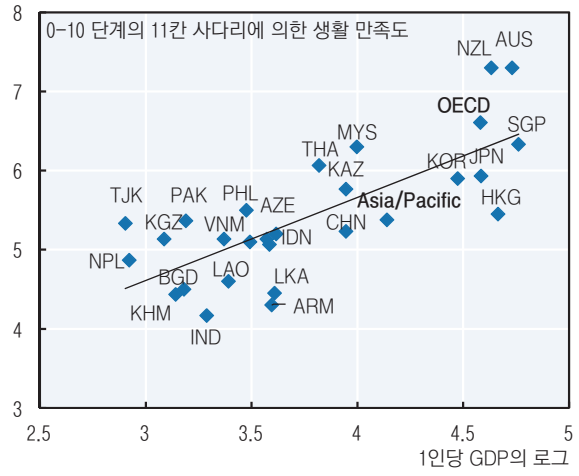
그림 7.2. **남성과 여성의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비슷한 듯하다. (2015-17년 평균)**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76

그림 7.3. **부유한 국가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덜 부유한 국가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895

공공기관 신뢰도

응집력 있는 사회는 시민들이 국가(및 지방) 기관을 신뢰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가 부패하지 아니한다고 믿는 사회다. 신뢰와 부패 관련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the national government)는 OECD 회원국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높으며(그림 7.4),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민들에 비해 더 낮다. 정부 신뢰도는 대한민국, 몽골 및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절반에서 인구의 70%가 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의 90%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는 전체 인구의 정부 신뢰도와 차이가 없지만, 홍콩의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는 노년층에 비해 낮다.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신뢰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국가별 추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7.4 오른쪽 등급). 아르메니아와 홍콩의 정부 신뢰도는 약 20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의 정부 신뢰도는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신뢰도의 양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그림 7.5). 2006/08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의 **금융기관 신뢰도는** 하락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금융기관 신뢰도는 상승하였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일수록 정부의 **부패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그림 7.6).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중국), 특히 싱가포르의 지역사회 부패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 및 측정

공공기관 신뢰도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

데이터 및 측정(계속)

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 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정부 신뢰도와 금융기관 신뢰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금융기관 또는 은행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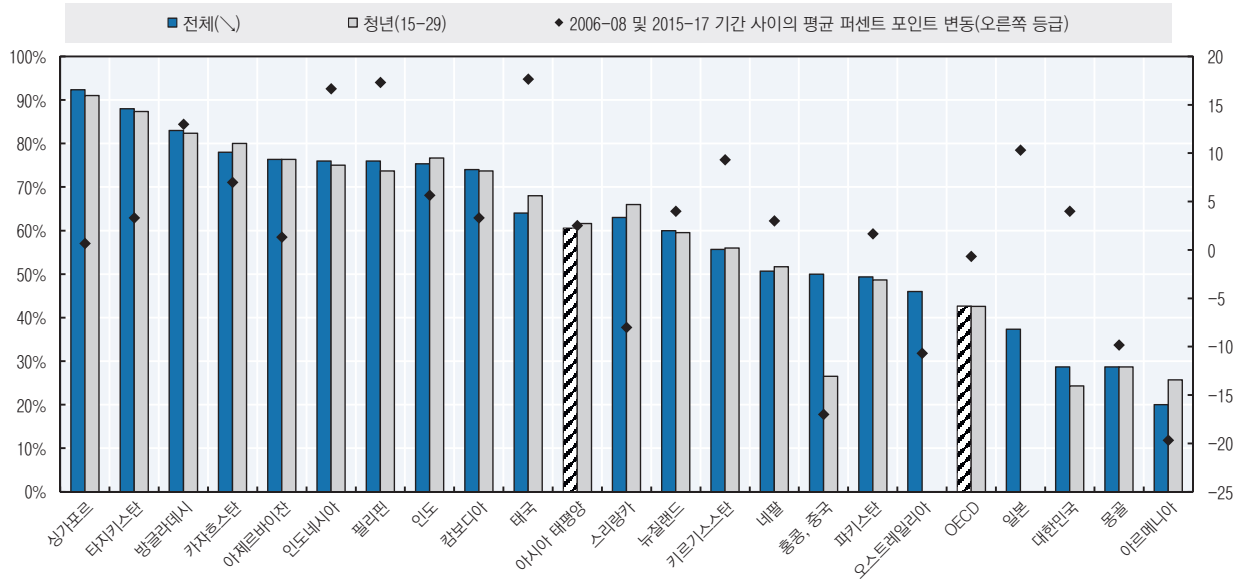
부패인식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나라 정부 전체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4.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청년층에 대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다.

그림 7.4. **정부 신뢰도는 OECD 회원국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높다.**

2015-17년 기간의 정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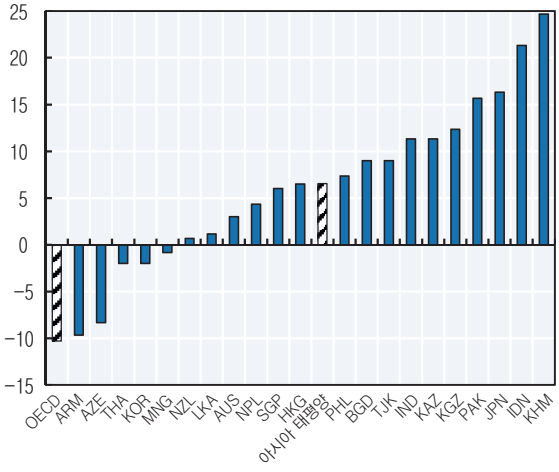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914

그림 7.5.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금융기관 신뢰도가 높아졌다.**

2006-08 및 2015-17 기간 사이의 평균 퍼센트 포인트 변동(오른쪽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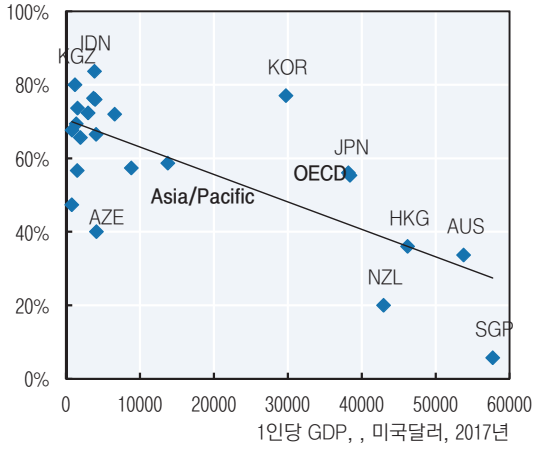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933

그림 7.6. **부유한 국가들은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952

신뢰 및 안전

한 사회의 신뢰 및 안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높은 수준의 개인적 신뢰 및 안전은 사회의 개방성, 투명성, 교류와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야간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 회원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아르메니아, 필리핀 및 싱가포르의 성별격차는 5% 미만인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약 30 퍼센트 포인트) 낮다. 평균적인 성별 격차는 OECD 회원국이 16 퍼센트 포인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2 퍼센트에 달한다.

거의 95%에 달하는 싱가포르 국민들은 야간에 거리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홍콩의 비율은 90%에 가깝다. 이에 반하여 캄보디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친다. 안전감에 대한 추세는 국가별로 다르다. 2006/08년에서 2015/17년의 기간 동안 야간에 거리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수가 17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반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국민들의 안전감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그림 7.7 오른쪽 등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범죄율**은 증가하였다(그림 7.8). 2005년 이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식 범죄율은 평균 17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범죄율 추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의 공식 범죄율은 상당히 감소한 반면, 아르메니아, 몰디브 및 몽골의 범죄율은 증가하였다.

법집행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그림 7.9).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OECD 회원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경찰을 신뢰한다. 부탄,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85%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및 몽골의 응답자는 60% 미만이었으며 파키스탄은 응답자의 절반만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8. 자료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 및 측정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본 절의 "자료 및 측정" 부분을 참고한다. 측정문제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메니아와 싱가포르에 대한 관찰자료의 비교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몰디브와 스리랑카의 지표 년도는 2005년이 아닌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카오-중국은 2008년, 태국은 2010년이다.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는 아제르바이잔과 일본은 2014년, 홍콩-중국, 몰디브, 뉴질랜드, 스리랑카 및 인도는 2013년, 타지키스탄은 2011년이다.

데이터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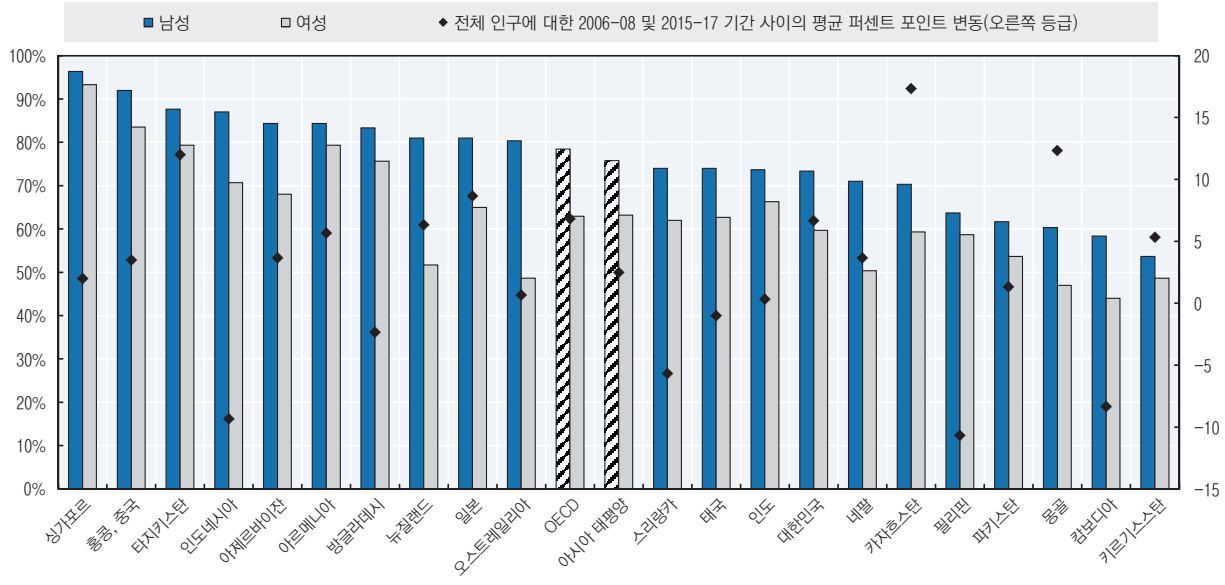
지역 경찰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 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신뢰 및 안전에 관한 지표는 다음의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은 도시 또는 거주지에서 야간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당신이 사는 도시 또는 거주지역의 경찰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범죄율에 관한 자료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UNDOC 는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www.unodc.org/*). 색인 (2005=100)은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 공식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인원수에 대한 자료와 관련된다.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의 "공식적으로 접촉한" 사람에는 용의자, 구금자, 경범죄 위반자가 포함된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범죄 집계 및 기록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림 7.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야간에 혼자 걷는 것이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

도시 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야간에 혼자 걷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015-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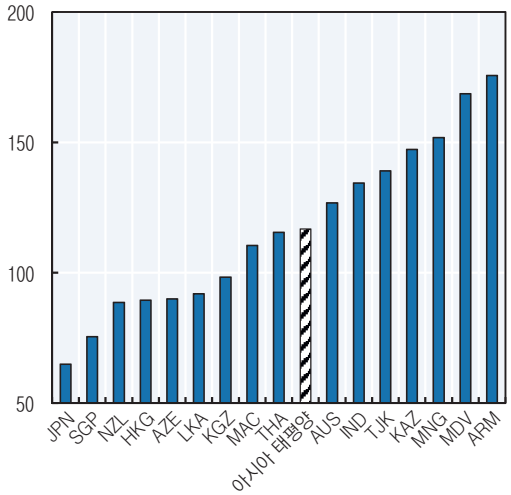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and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DOC) (*www.unod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971

그림 7.8. 지난 10년간의 범죄 추세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에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 공식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인원수 (2005년 색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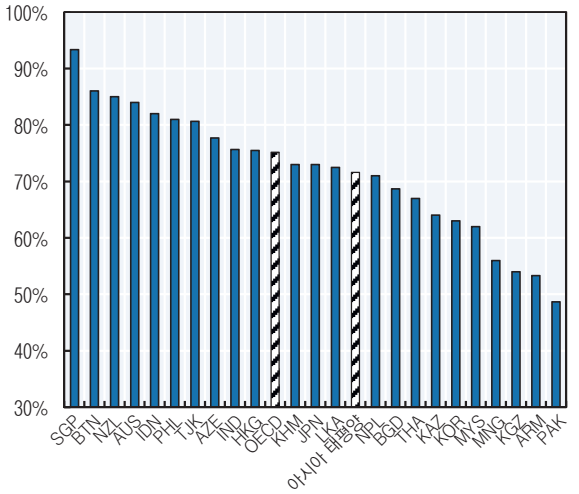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DOC) (*www.unod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0990

그림 7.9.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다.

지역 경찰을 깊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2015-17년 평균, %)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and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DOC) (*www.unod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009

포용력

소수집단에 대한 공동체의 수용도는 사회적 응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본 절에서는 이주자, 소수민족 및 남녀 동성애자 등 세 집단을 검토한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민들은 OECD 회원국 국민들에 비해 자신들이 정부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낮다(그림 7.10).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국민들의 85% 이상이 자국이 이민자가 살기에 좋은 국가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같은 응답을 한 캄보디아와 태국 국민은 4분의 1에 못 미쳤다(그림 7.10, 오른쪽 등급). 2006/2008년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긍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 국민들은 자국이 점차 이민자가 살기에 좋은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OECD 회원국 국민들의 최소한 3분의 2가 자국이 **소수민족**에 대해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림 7.11). 파키스탄,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자국이 소수민족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도와 카자흐스탄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이와 반대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비해 **남녀 동성애자**들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12). 네팔,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높은 포용력을 보이고 있으며 홍콩(중국)과 필리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및 스리랑카의 국민들 중 자국이 남녀 동성애자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 못 미친다.

데이터 및 측정

포용력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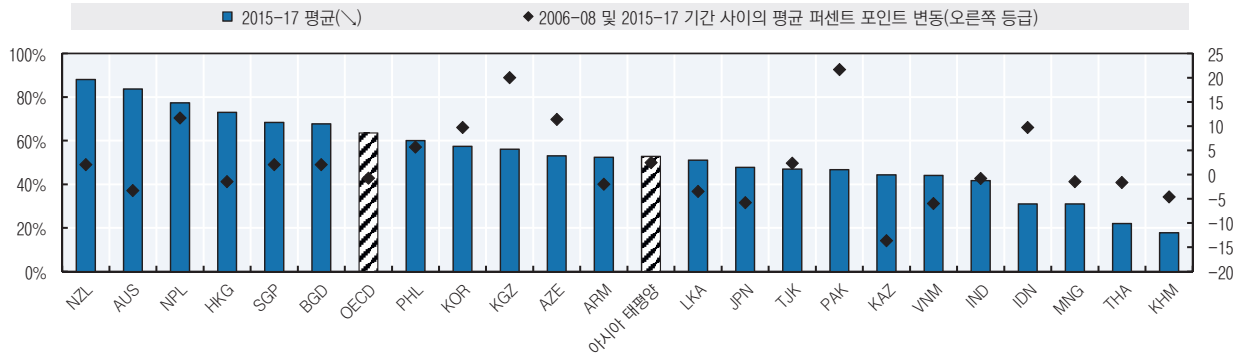
본 지표에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살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장소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살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장소입니까?"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2.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2006-08년 및 2015-17년 기간 동안의 평균의 퍼센트 포인트 변동에 관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림 7.10. **OECD 회원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보다 자국이 이민자들이 살기에 더 좋은 국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민자들이 살기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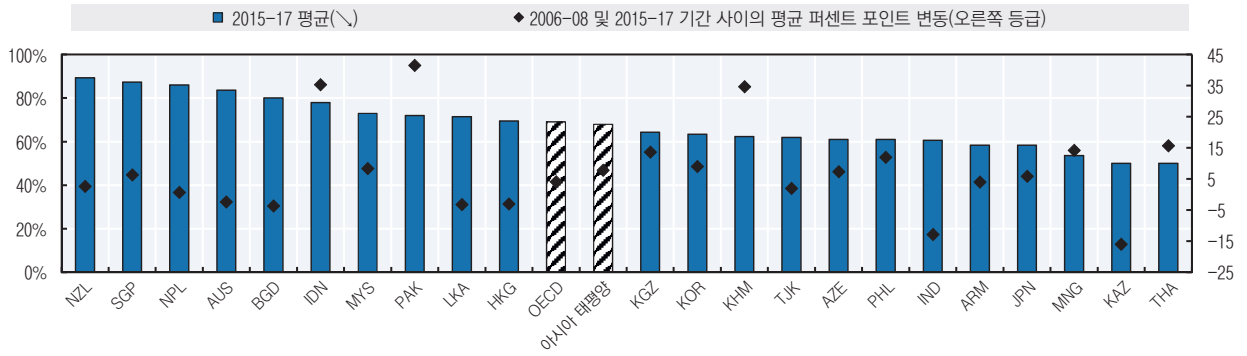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028

그림 7.11.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력에 관한 인식**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소수민족이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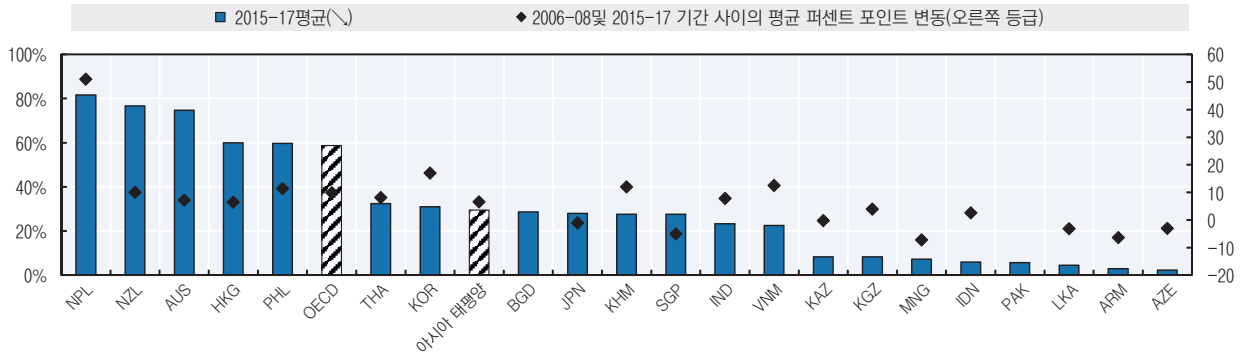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047

그림 7.12.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남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포용력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남녀 동성애자들이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066

투표

높은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징표다. **투표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7.13). 베트남,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총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며 이에 비해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및 태국은 2명 중 1명만이 투표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 투표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총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다.

대부분의 OCED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7.13). 아제르바이잔과 네팔은 1990년대 이후 투표율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였지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일본, 대한민국, 몽골 및 태국에서도 전국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르메니아와 인도의 투표율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는 시민의 정치참여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였다(그림 7.14). 필리핀, 스리랑카 및 타지키스탄의 공정선거 신뢰도가 가장 크게(20 퍼센트 포인트 이상) 높아진 반면 홍콩의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신뢰 수준은 종종 비슷하게 나타난다(그림 7.15). OECD 회원국이 아닌 일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여성의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남성보다 높으며 아제르바이잔과 캄보디아의 성별 격차는 약 5-7 퍼센트 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에서는 여성의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으며 성별 격차는 약 8에서 10 퍼센트 포인트에 이른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3. 선거연령 인구 투표율, 즉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로서 회원국의 선거관리 기록에서 입수하였다.

데이터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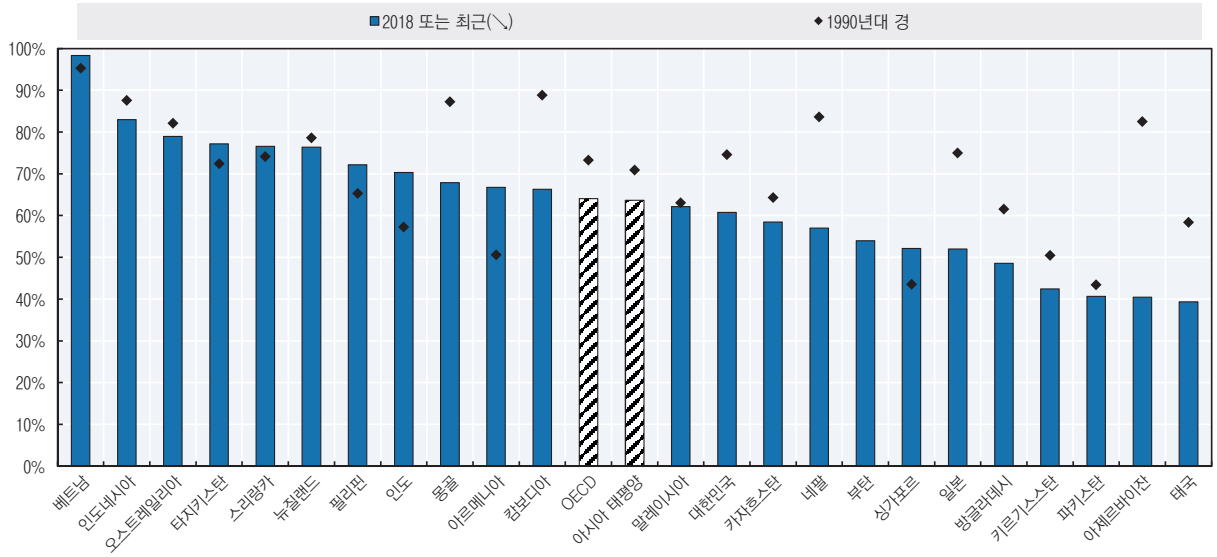
총선 투표는 국가의 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다. 본 절에서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표는 "선거연령 인구 투표율", 즉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로서 회원국의 선거관리 기록에서 입수하였다. 정치제도의 구조와 지리적인 선거 관할구역에 따라 각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총선투표율보다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헌법상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율에 관한 자료는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을 위한 협회(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 IDEA)가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각국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하여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응답률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표본에 의한 조사는 통계적 오차범위, 즉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정확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 10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차범위에는 100회 중 95회의 "참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며 조사에서는 군집 표본설계를 사용하므로 오차범위는 문항마다 다르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범위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1,000이면 95% 신뢰구간에서의 오차범위는 $0.98/\sqrt{\text{표본크기}}$ 또는 3%가 되며, 표본의 크기가 4,000이면 오차범위는 1.5%가 된다. 작은 표본 크기와 관련된 매년의 응답률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치를 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2년치의 평균을 결과로 사용한다. 3년 동안 단 1회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다음 각 항목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은 어떻습니까?"

그림 7.13. **선거 참여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총선의 유권자 투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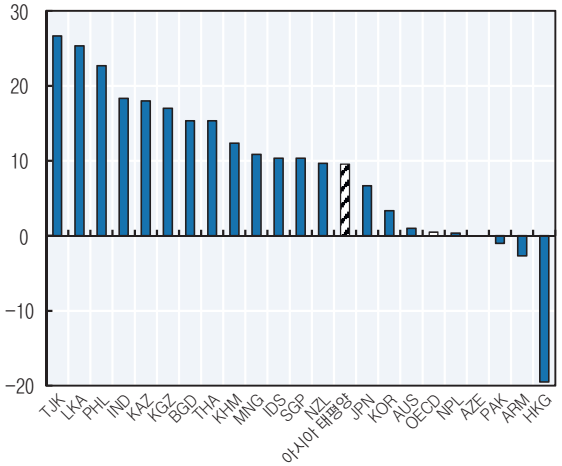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database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085

그림 7.1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정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변화

(2006-08 및 2015-17 기간 평균, 퍼센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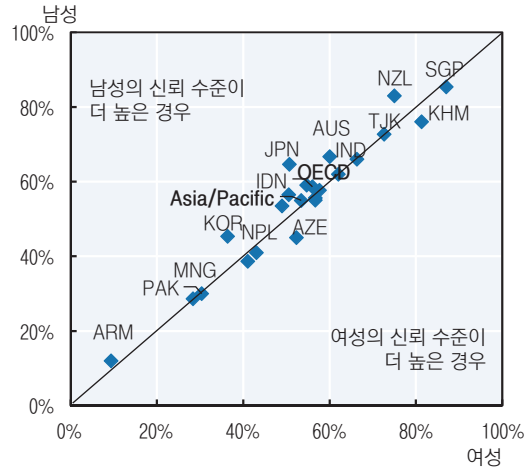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104

그림 7.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성과 여성의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도**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 2015-17 평균)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901123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연합도 OECD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출판물을 통해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OECD Korea Policy Centr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2005년 설립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CHSP: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는 2008년 다른 세 개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통합되면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주요 기능은 국제조세, 경쟁, 공공 거버넌스, 사회정책 분야에서 OECD 회원국의 국제적 기준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료 및 전문가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보건사회정책 분야에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정책적 대화와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의 업무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통계(ILO, ADB와 공동작업), 보건의료비 지출 및 재원조달 통계(WHO와 공동작업) 그리고 연금정책(ADB, WB와 공동작업)이다. 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9

발 행 일: 2019년 12월

원 저: OECD

번역 · 발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4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

인 쇄: 아이프리넷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9

이 보고서는 OEC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지표에 대한 개요서인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의 네 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계량적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1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소개하고 OECD 사회지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2장은 아태지역 사회적 보호의 범위 확대와 미래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아태지역에는 사회적 보건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디지털화와 업무성격의 변화는 일자리의 감소로 이끌 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사이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가능 노동자와 그러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장에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별 프로그램들을 예시로 수록하고 있다. 3장에서 7장까지의 각 장은 일반적 맥락, 자급 자족, 형평성, 건강 그리고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각각의 지표를 제시한다.

본 출판물의 영문 원본 pd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787/soc_aag-2019-en.

본 국문 번역본 pd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oecdkorea.org - 자료실 - 발간도서

비매품/무료

9 791186 043240 93330
ISBN 979-11-86043-24-0